

# 발 간 사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남북 분단 극복과 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으며,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2001년에는 남북장관급회담을 포함하여 총 8차례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교류협력이 꾸준히 증진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민간차원의 다양한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의 흐름이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북한도 경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경제 실리를 중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EU를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의 대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환기적 상황에 따른 우여곡절이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지속시키는 데 대내외적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2001년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과 반테러전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냄으로써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지난 50여년 동안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던 의식으로 인해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측면도 노정 되었으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드는 새로운 비용과 노력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반테러전쟁의 긴박한 국제정세하에서도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국민들이 안보 위기감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유지와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라 할 것입니다.

2002년 올해는 월드컵 대회, 아시안 게임, 대통령 선거 및 지자체 선거 등 주요 국가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대 국가행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와 남북간 화해협력 진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에도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대북정책 추진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 5대 과제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급하거나 무리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의선 연결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로 이어질 것이며, 남북한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인도주의의 구현 뿐만 아니라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은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특히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우리 국민의 뜻과 의지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이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북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여론을 겸허하게 듣고, 관련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며, 정책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통일백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지난 2001년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2월

통일부장관      정   세   현

# 목차

## 제1장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 제2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배경

1.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2.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3. 남북간 국력격차 심화와 우리의 주도적 노력 필요성

### 제3절 대북화해협력정책 내용

1. 목표
2. 추진 원칙
3. 추진 기조

### 제4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성과

1. 개요
2. 2001년도 추진 성과

### 제5절 통일방안과 대북화해협력정책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화해협력정책

## 제2장 다양한 남북대화 진행

### 제1절 남북정상회담

1. 회담 개요
2. 주요 회담 내용 및 「6·15 남북공동선언」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 제2절 남북장관급회담

1.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2.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3.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절 남북군사분야회담**

1. 남북국방장관회담
2. 남북군사실무회담

**제4절 남북경제분야회담**

1. 제1~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제5절 남북적십자회담**

1.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
2.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제3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 증가**

1. 남북한 왕래
2. 북한주민접촉

**제2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 교역
2. 위탁가공교역

**제3절 남북교통·통신망 연결**

1. 경의선 철도-도로 등 남북간 교통로 연결
2. 남북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제4절 남북경제·사회문화협력 확대**

1. 남북경제교류협력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2.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 **제1절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2.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3. 이산가족문제 해결 기반 구축
4. 납북자 등 문제 해결 노력
5. 이산가족교류 교류 현황

### **제2절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1.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2.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국내입국 추이
2. 정착지원 체계
3. 정착지원 추진
4. 법·제도 개선

### **제4절 북한인권·환경문제 개선 추진**

1. 북한인권문제
2. 북한환경문제

##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

###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 **제2절 본공사의 안정적 추진**

1. 본공사의 추진
2. 재원조달

### **제3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1. 후속의정서 협상
2.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KEDO-북한간 협상

##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 제1절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1.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2. 자문기구 운영
3.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 제2절 다각적인 통일홍보 전개

1. 첨단매체 활용 즉응 홍보
2. 수요자 지향형 홍보
3. 국제사회 및 해외동포 대상 홍보

### 제3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확립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2. 통일교육 실시
3. 학교통일교육 지원
4. 사회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자료 개발
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구축·운영

### 제4절 북한 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1. 북한실태·주요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2. 다양한 연구사업·행사 지원
3. 북한 정보자료 개방 확대

### <부록>

1. 2001년 통일정책 관련 주요 연설문
2. 통일정책 관련 법규
3. 주요 남북관계 합의 문건
4.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0~2001)
5.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Website)

## **제1장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 **제2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배경**

1.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2.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3. 남북간 국력격차 심화와 우리의 주도적 노력 필요성

### **제3절 대북화해협력정책 내용**

1. 목표
2. 추진 원칙
3. 추진 기조

### **제4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성과**

1. 개요
2. 2001년도 추진 성과

### **제5절 통일방안과 대북화해협력정책**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화해협력정책



## 제1장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분단이후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의 내용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따라 변해 왔으며, 다소 시차는 있지만 크게 볼 때 국제냉전의 확산·조정·해체 등의 변화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정부는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정책 목표와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국력 격차 심화 등 달라진 환경에 부응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수립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당장 통일을 이루기보다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려는 구체적 실천전략에 중점을 둔 대북정책<sup>1)</sup>이다.

### 제1절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

분단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냉전질서의 확산과 함께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가운데 치열한 대결로 일관했던 기간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대통령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

---

1) 정부는 현시점에서 통일정책보다는 대북정책, 구체적으로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대북정책은 북한을 상대로 하여 전개되는 정책을, 통일정책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제반 정책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통일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느슨한 의미로 대북정책은 통일정책과 혼용되고 있다.

하였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중시하여, UN 감시하에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복진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당시 북한의 전쟁 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국민 정서를 감안한 측면이 있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총리 정부는 ‘무력복진통일’ 주장을 폐기하였으나,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한편 1961년 5·16으로 사실상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초기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주력한다는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정립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이 UN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失地回復)에 의한 국토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초반 동·서간의 냉전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69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중, 일·중의 접촉과 미·소·일·중 4국간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 우리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북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게 됨에 따라 통일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

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 대화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대화환경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해결 등을 요구하며 통일전선전략을 노골화함으로써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전제 아래, 남북간의 내정 불간섭과 불침략, 남북대화의 지속,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 추진 등 7개항을 담았다.

이어서 1974년 1월 18일 정부는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체결 제의, 같은 해 8월 15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천명, 1979년 1월 19일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 대화」제 의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서는 ①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 ②상호 문호 개방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대화·교류협력 증진 ③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를 제시하였다.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82년 2월 1일의 후속 실천조치로서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8일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후에도 남북간 대화는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1980년대는 국제냉전이 조정국면에 들어섬과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체제경쟁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모색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대화를 통한 화해분위기가,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대결과 대화가 교차되는 관계’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988년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1992년 말부터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다.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개최된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북측은 ‘서울 불바다’, ‘전쟁불사’ 등 위협적인 발언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미·북한간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을 직접 지원하는 등 북한동포의 식

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대북 경수로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회피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 제2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배경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 개념으로서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과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북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 1.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1980년대에 들어와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제적 냉전질서가 종식되었다. 세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화와 정보화,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오고 있으며, 과학·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아·환경·테러·마약 문제 등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역내국가 내지는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일·중·러 주변 4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전과 기회라는 양

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제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민족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 2.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상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했고 변화 없이는 경제회생이나 체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급격히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고립과 폐쇄의 길을 고집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는가 하면, 에너지난·식량난·외화난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등 체제이완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이나 한반도 주변정세를 볼 때,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우선 북한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조심스럽게 변화의 조짐을 보여 왔다. 특히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가격·수익성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관료들을 서방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2001년에 들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탈피한 ‘신사고’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EU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단 북한이 변화의 방향으로 들어선 이상 앞으로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겠다.

### 3. 남북간 국력격차 심화와 우리의 주도적 노력 필요성

분단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체제경쟁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남북간 국력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남북간 체제경쟁에서 우열이 분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말 구 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권의 몰락 등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북한의 체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남북간 체제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남북간 국력의 차이는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해졌다. 명목 국민소득(GNI) 대비 약 26배, 국민 1인당 GNI 대비 약 12배, 무역규모 대비 약 178배(1999년 한국은행 통계 기준)의 격차가 나고 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비록 병력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긴밀한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대북 군사 억지력은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이 같은 남북간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21세기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간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 민족의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실현해 나가야 할 민족사적 소명이 되고 있다.

### 제3절 대북화해협력정책 내용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을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공식화하여 지난 4년여 동안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등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안보와 화해협력을 동시에 수행하여 현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과제를 수행하려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에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 화해협력함으로써 스스로 북한이 평화공존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 전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1. 목 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2. 추진 원칙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 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유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때 북한도 무력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도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억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아직까지 근본적 변화가 없고, 남북의 대규모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과제이다. 아울러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평화를 지키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 나. 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남과 북은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결하고 반목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점진적인 준비과정 없이 급작스런 통일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실현된다 해도 그 충격과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당장 법적, 제도적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를 바탕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 남북간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려는 것이다.

##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 쌍방이 필요로 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 화해협력은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근원적으로 약화·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 3. 추진 기초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①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③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⑤남북 당사자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추진기조로 설정하였다.

#### 가.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양면성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이중성을 떨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병행추진하자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긴장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의 길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의지를 약화·포기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근원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튼튼한 안보를 통한 평화정착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확고한 안보와 함께 우리는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고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의존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정부가 ‘평화공존’을 대북정책 추진기조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시간을 두고 달성해 가더라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존의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우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분단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분단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즉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평화공존’과 함께 ‘평화교류’를 병행 추진함은 평화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 다.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국가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의 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며,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도 개혁과 개방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 역시 그들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내부에서도 이미 부분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그같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 체제의 붕괴를 의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북한의 대남도발, 선전선동, 억지주장 등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의연히 대처하는 한편,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그리고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 라.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됨은 물론 나아가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인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북의 현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서로 주고 받는 양과 종류, 시기 등이 대칭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인정, 존중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기본적인 자세는 중요하다. 나아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민족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마.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남북문제는 우리 자신의 삶과 민족의 장래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당연히 우리 7천만 겨레의 뜻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권한과 책임을 가진 남북 당국간의 대화야말로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정부가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의 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녕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계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의 추진

대북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뜻과 의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이며, 정부는 국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이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불어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 조성을 위해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뜻과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제4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성과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우방국과의 공조하에 민족내부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왔다. 특히, 안보와 협력의 병행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고자 노력했다.

### 1. 개 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변화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먼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성과는 한반도 평화가 증진된 점이다.

자주 국방력의 지속적 증강과 한·미연합 억지력을 바탕으로 전쟁 재발을 방지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99.6 연평해전)하여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 왔다.

한편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상호 비방중상이 감소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등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은 미·일·중·러 등 주변국의 공조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의 가장 기초적인 환경인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2001년도에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긴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평화증진을 목표로 한 대북정책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 결과,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당국차원의 대화로 발전하여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의 현안을 협의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호응하여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공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본격적인 화해협력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남북대화가 빈번해지고, 남북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대북지원,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등 현안문제와 관계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남북당국간 대화와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있다.

이러한 당국·민간의 접촉과 교류의 증대로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감이 약화되고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경제난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처해 있던 북한에게 변화의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북한은 서방 1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는 등 대외개방과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과거의 사고와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모든 관련국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하에 3국 공동 협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냉전종식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2001년도 추진 성과

정부는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으로 조성된 어려운 외부상황 하에서도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 재도약의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상반기에는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하반기에는 테러사건과 대테러 전쟁 등 2001년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특히, 북한이 이러한 정세변화에 의구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을 보냄으로써 남북관계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북한측의 남북회담 일방적 연기, 북한선박 영해 침범, 8.15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의 물의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지속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계속 유지되었다.

여기에는 화해협력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특히 국제적 긴장에 남북한이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비중있게 고려되었다.

한편, 북한도 당국간 대화가 없는 기간동안 대남비난을 자제하고 민간교류를 계속하였으며, 돌출행위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신중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남북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2001년 한해 동안 남북회담을 총 8회 개최하여,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을 모색하였다. 제3차 적십자회담, 제4·5차 군사실무회담, 제1차 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이상 1~2월), 제5·6차 장관급회담 및 제1차 금강산사업 활성화 당국회담(이상 9~11월)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등 이산가족교류와 대북 지원도 지속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이 증진되고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도 계속되는 한편,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가 타결되었고 남북교역 및 경협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각종 남북공동행사들도 성사되었다.

이처럼 남북화해협력의 흐름을 이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한차원 더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보다 공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데 남북이 공동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먼저 남북간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연결과 화해협력의 제도화 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단계로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군사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 이같은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남북 각기 내부에서 실천 의지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긴요하며, 이를 위한 우리의 중재·지원 노력과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적 합의와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국민여론 수렴활동의 확대와 관계국과의 정책협력 강화로 반영되었다.

## 제5절 통일방안과 대북화해협력정책

###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정부는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현 정부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년)을 보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년)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접근방법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 교류 후 통일’의 입장을 체계화한 것이다.

#### 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내용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초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신뢰가 더욱 쌓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남북연합단계’는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는데 따라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남북평의회·남북각료회의·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며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 과정을 거쳐, 남북한간 이질감이 해소되고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조건 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통일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

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 나.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점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남북한이 양측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측의 ‘연합제’ 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 단계를 의미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은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게 된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연방제를 수정한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서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의 지역 정부로 구성된 연방제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1월에 느슨한 형태의 고려연방제를 언급한 바 있고, 2000년 10월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1991년에 언급한 내용에 비해 지역 자치정부의 권한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두 방안 모두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먼저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방안으로, 학술적으로 보면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방안 사이에는 ‘과도기에 상징적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여부’ 등 핵심사항과 관련해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앞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하겠다.

## 2. 통일과정에서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사회를 통합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여 통일의 밑바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통일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남북간 지리적 통합과 주권의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 우선 그러한 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즉, 남북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말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제도와 사상을 가진 채 반세기 이상 적대적 갈등을 지속해 온 남북이 단시간 내에 평화적 방법으로 제도, 사상, 영토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또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이 제도와 사상, 영토는 다르지만 사실상의 통일상황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완

전한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 상황은 남북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정착된 상황을 말한다.

사실상의 통일상황은,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간 정치, 군사적으로 신뢰가 구축되고 군비축소 및 통제가 실현됨으로써 정전체제가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었을 때이다.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남북간에 호혜적 경제관계가 구축되고, 남북한의 주민이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남과 북이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민족공동이익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남북 주민간의 적대감은 해소될 것이며, 두 개의 상이한 사회체제도 빠른 속도로 동질화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남북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일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현 대북정책이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 대북정책은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룩하려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 제1절 남북정상회담

### 1. 회담개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우리측 일행이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초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갖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6월 10일 긴급 전화통지문을 통해 “기술적인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옴에 따라 하루 늦춰진 것이다.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는 수행원 130명(선발대 30명 포함), 기자단 50명이 참가하였으며, 수행원은 공식수행원 11명, 특별수행원 24명, 일반수행원 95명으로 구성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용기 편으로 서해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 환영행사 참가에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며 환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직후 회담을 가졌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 2. 주요 회담 내용 및 「6.15 남북공동선언」

정상회담 기간중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최고당국자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분

하게 설명하였다.

4개 과제와 관련하여 김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국제적 냉전종식과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그리고 지식정보화로 인류사회가 최대의 혁명을 겪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반도만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남북이 대결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솔선수범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 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과 북이 상대방을 불신하고 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남과 북 모두 공멸하며, 누구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반대하며, 우리는 북한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북한도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북·미간에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면서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를 구축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다.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 라.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의한다.

이상과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 수긍과 이해를 표시하고 북측의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이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북간에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

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칙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두 정상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6월 15일 0시 조금 넘은 시각에 내외에 발표하였다.

— < 남북공동선언 요지 > —

- 나라의 통일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 3.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및 재개 노력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를 갖는 큰 사건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그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의 커다란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당사자인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이 제3국(인)의 개입이나 중재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당국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구축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냄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두 정상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의미로 강조될 만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성

사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초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응했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각종 회담의 다양화·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교류의 활성화와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 진입 토대 마련 등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다.

한편, 2001년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문제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관심사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후 2000년 9월 14일 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시 재확인된 사항으로 실현 여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았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북측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8월 방북한 우리측 언론사 사장단과 2001년 5월 평양을 방문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 등에게 서울 방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2001년 12월말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 제2절 남북장관급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0년 7월 19일 이한동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7월 21일 우리측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면서 회담 개최 일자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은 2001년 11월까지 남북을 오가면서 6차례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사항들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 여러 분야에서 개최된 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 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남과 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실무접촉 등을 가졌으며,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장관급회담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기본 자세로 ‘공동이익 추구’, ‘실천 중시’, ‘쉬운 문제부터 해결’을 제시하였다.

북측도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에 충실’,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 타결’, ‘실천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이행’해 나가자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남북 쌍방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대화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2000년 8·15에 즈음하여 남북, 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 개최,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문산-개성간 24km) 연결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1~4차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재규(통일부 장관)	단 장	전금진(내각 책임참사)
대 표	엄낙용(재정경제부 차관) 김순규(문화관광부 차관) 김종환(국방부 정책보좌관) 서영교(통일부 국장)	대 표	김영신(문화성 부상 겸 무대작품 국가심의회위원회 위원장) 유영선(교육성 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량태현(내각 사무국 과장)

\* 우리측 엄낙용 대표는 제2차 회담부터 이정재 대표(재정경제부 차관)로 교체되었고, 제3차 회담부터 우리측 김종환 대표와 북측 김영신 대표가 각기 김형기 대표(통일부 실장)와 허수립 대표(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지도국 처장)로 교체되었음.

#### 나.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등 7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신규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등 5개항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북측에 촉구하고, 모든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실현, 남북간 직항로 개설, 말라리아 공동방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2회 추가 교환,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실무협의 개최,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각기 제기한 의제를 놓고 협의한 결과,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추진,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남북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접촉과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합의사항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

검, 평가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석달반 동안 이루어진 일들은 크게 보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협력사업 이외에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매 회담시마다 많은 합의를 내기보다는 기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이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 양측은 세부 의제에 대한 다소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남북간 합의사항들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 생사교환·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문제를 차기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였다.

#### 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진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기간 중 남북 쌍방은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실무접촉 등을 가졌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2001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추진일정을 조정,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

였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차 장관급회담시 양해가 이루어진 사업 등을 협의·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간 전력협력문제, 남북어업분야 협력문제, 남북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2000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경제협력 관련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북측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제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제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2.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5차 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장소는 추후 협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1년 2월 27일 박재규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5차 회담을 3월 13일부터 3박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측도 3월 7일 전금진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5차 회담 일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 당일인 3월 13일 오전 전금진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제5차 북남상급회담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 옴으로써 제5차 회담은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회담이 중단된 남북관계 소강국면 하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

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하는 가운데 북측에게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회담 중단 6개월만에 북측은 9월 2일 임동옥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명의로 우리측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9월 6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측이 동의해 나옴으로써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연기된지 6개월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 모두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대표단 교체가 있었다.

#### << 5~6차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순영(통일부 장관)	단 장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 표	김진표(재정경제부 차관)	대 표	조성발(내각 사무국 참사)
	윤형규(문화관광부 차관)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이봉조(통일부 실장)		허수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처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첫날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분야별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건설공사를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해안 도로를 조속히 연결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방문단 교

환 및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의 조기 개최 등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남북경협 4개합의서 발효,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제5차 장관급회담의 일방적 불참 및 연기, 북측 선박의 우리측 영해 무단통과 사건, 8·15 남북공동행사 진행과정에서 일부 방북단의 3대 헌장 기념탑 앞 행사 참석과 돌출 발언으로 물의가 빚어진 사실 등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한편 북측은 당국간 대화·협력 진행과 함께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족 공동의 이익 및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새롭게 협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남-북-러 철도연결 및 가스관 통과, 상선의 상대측 영해통과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등에 합의하는 등 경협분야 9개항을 포함한 총 13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1) 당국간 대화, 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 (2) 추석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 (3)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당국간 회담 개최 합의
  - 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
  - ②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실무접촉 개최
  - ③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10.4)
  - ④ 남-북-리 철도 연결 협력,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 ⑤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를 협의하기 위해 해운실무접촉 개최
  - ⑥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대책 협의를 위해 11월중 현지조사 착수
  - ⑦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빠른 시일내 발효
  - ⑧ 동해 공동어로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
  - ⑨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및 실무협의회 개최
- (4) 태권도 시범단 상호교환(10월 북측시범단, 11월 우리측시범단)
- (5)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0.28~31)

### 3.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제5차 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1년 10월들어 금강산관광 당국간회담이 개최(10.3-5, 금강산)되었으며,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태권도 시범단 교환(10월중),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제6차 장관급회담(10.28-31)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은 10월 12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9.11 테러 사태 이후 우리측의 경계태세 강화를 구실로 ‘남측의 살벌한 경계태세 분위기’하에서는 대화와 내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및 태권도시범단 교환을 연기하고 모든 당국간 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장



소를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같은 날 홍순영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태권도시범단 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시하고,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후 9차례의 전화통지문 교환에도 불구하고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장소문제로 비생산적인 논쟁을 지속하는 것 보다 대화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북측의 금강산 개최 제의를 수용하였다.

당초 제6차 회담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되어 14일까지 금강산 호텔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우리측은 ▲9.11 테러사태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제5차 회담 합의사항들의 이행일정을 재조정하며 ▲남북간 대화국면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비상경제조치 해제에 대한 우리측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5차회담 합의사항 이행일정의 재조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경계강화조치가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내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취해진 것임을 설명하고, 이는 남북간 여러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공조 등 우리측의 외교활동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남과 북이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국제사

회의 이해와 지원을 받을 때 더욱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근본원인은 방대한 군사력이 남북사이에 대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함을 설명하고, 북측도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설득하였다.

남과 북은 3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접촉, 실무접촉 등을 통해 12월초 4차 이산가족방문단 상봉, 제7차 장관급회담 서울 개최 등에 의견접근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장소, 제7차 장관급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 제3절 남북군사분야 회담

#### 1.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남북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함께 군사분야의 화해·협력도 균형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지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의 조속한 개최 협의’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후 우리측이 2000년 9월 11일 송이버섯 전달차 서울에 온 북측의 박재경 대장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9월 13일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동의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의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회담개최 일자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해 합의하고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성태 국방부 장관	단 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차석대표	김희상 국방부장관 특보 (중장)	부단장	박승원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중장)
대 표	김국현 국방부 국장 (준장)	단 원	김현준 인민무력부 보좌관 (소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국장		로승일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이인영 합동참모본부 과장 (대령)		유영철 판문점대표부 부장 (대좌)

회담에서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또한 상호 부대이동 통보, 군 인사 교류, 군사 정보 교환,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당면과제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군사적 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를 주는 군사행동 금지,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남과 북의 인원, 차량, 기재의 비무장지대 내 출입을 보장하는 문제는 실무급에서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쌍방은 두차례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협력하는 문제등 5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채택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
-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
-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가와 안전을 보장하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 구체적 세부사항 추진
- 남북 연결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측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2001년 10월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이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2.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년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2000년 10월 7일 김일철 북측 인민무력부장에 게 서한을 보내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10월 13일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2000년 10월 11일 ‘유엔군측과 비무장지대 개방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우선 해결한 조건에서 쌍방 군사실무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신을 보내온데 이어 10월 16일 유엔사측에 ‘남북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서장급 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후 유엔사와 북측은 2000년 10월 18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4차례의 비서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비무장지대 일부 개방구역의 명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하고 남북관리구역내 군사적 문제들을 남북의 군대들이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엔사와 북측간 ‘남북관리구역 설정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북 쌍방은 2000년 11월 28일부터 2001년 2월 8일 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 「통일각」을 오가며 5차례에 걸쳐 군사실무회담을 진행하였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덕 국방부 차장 (준장)	단 장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 표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대령)  이명훈 작전부대(대령) 이명훈 육군건설단(중령) 정덕모 건설교통부 과장 정진양 국토관리청 과장	단 원	배경삼 인민무력부 상급참모 (상좌)  정창욱 인민무력부(상좌) 리병우 인민무력부 과장(대좌) 김기복 인민무력부 상급참모 (상좌)

\* 정진양 대표는 1차 회담시만 참가, 2차 회담부터는 쌍방 각기 5명씩 참가

2001년 1월 31일 진행된 제4차 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의 폭과 지뢰제거 범위 등 6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했으며, 2월 8일 제5차 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다.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는 폭 250m의 남북관리구역 설정, 동 구역내 철도·도로 건설 및 운행·유지를 위한 지뢰와 폭발물 제거, 철도·도로 연결 공사 방법과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접촉과 통신 및 공사인원의 경비와 안전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요지 >

☐ 남북관리구역 설정

- o 기존 경의선 철도노반 기준, 250m 폭 설정

☐ 지뢰 및 폭발물 제거

- o 계절조건 고려, 작업 1주전 상호 연락, 지뢰제거 작업 동시 착수
- o MDL부근 쌍방 400m 근접시 남측 화,목,토/ 북측 월,수,금 작업

☐ 철도와 도로 작업

- o 쌍방 200m 근접시 남측 월,화,수/ 북측 목,금,토 작업
- o 공사 마감단계시 MDL 20m 월선 허용

☐ 공사현장 책임자간 접촉 및 통신연결

- o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 군사실무 문제는 전화통지문을 통한 협의 원칙
- o 공사현장 군사책임자간에 유선통신 2회선, 팩스 1회선 설치

☐ 작업장 경계 및 안전보장 대책

- o 안전보장을 위해 100명 이내의 경계병력 운용
- o 경계병력의 무장 : 개인화기, 개인당 실탄 30발로 제한

☐ 합의서 발효·폐기 및 수정·보충

- o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발효

한편 남과 북은 이 합의서를 쌍방 국방장관이 서명한 후 2001년 2월 12일과 14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개최하여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11일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로 동 합의서의 서명 교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변화된 일정에 대해서는 차후 통지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합의서가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2001년 3월 9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조속한 시일내 합의서 서명·발효와 관련된 일정 통보’를 촉구한데 이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적 보장 합의를 즉각 발효시켜 금년내에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 사이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 6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는 ‘10월 12일과 15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쌍방 국방장관의 서명절차를 거친 합의서 교환을 위해 수석대표 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검토가 끝나면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동 합의서의 서명 교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 제4절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2000년에 3차례, 2001년에 3차례 모두 6차례의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2000.9.27~30, 제주)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본 데 이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첫 회의를 2000년 12월 26일경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1. 1~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분야 회담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긴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접촉부터 이루어졌다. 2000년 9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북한 김용순 특사 방문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이 두 차례 개최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근경(재정경제부 차관보)	정운업(무역성 지도국장)
대 표	조명균(통일부 심의관) 김상열(산업자원부 심의관) 안창호(법무부 과장)	리영남(재정성 부국장) 서정찬(무역성 과장) 최정식(재정성 과장)

\* 우리측 안창호 대표와 북측의 최정식 대표는 제2차 접촉부터 참가(제2차 접촉부터 회담대표가 쌍방 각기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였음.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은 2000년 9월 25일~2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4개의 제도적 장치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합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적시한 만큼 이에 국한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2개 안에 대해서는 향후 장관급회담에서 확인한 후 차기 접촉시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차 접촉에서 공통부분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해서 각기의 입장과 조문별 공통점·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남과 북은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한데 따라, 외국산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합의

하였다.

쌍방은 합의서별 구체적 조문내용을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조율하여 제2차 접촉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 타결키로 합의
-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 차이점들은 제2차 접촉에서 합의
-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절차에 따라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

제2차 실무접촉은 당초 2000년 10월 1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사정으로 다소 연기되어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특히 4개 합의서의 전문에 남북사이의 경제교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할 것과 내국민 대우, 중재인의 수 및 자격,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합의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어렵다고 하면서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지 과세, 양측의 재결집행제도 이용, 무이자 청산계좌 개설 등을 제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차관으로 제공한 식량의 분배투명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식량차관 계약서상 ‘투명성 보장’ 규정에 따라 식량분배 과정과 분배실적의 설명 및 현장방문과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쌍방은 부문별 실무대표접촉과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정, 11월 11일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 합의를 채택하고 가 서명하였다.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정식서명하였으나 발표절차를 거친 문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 — < 4개 합의서 요지 > —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전문 및 12조
  - 상호 투자의 허용 및 보호, 수용·국유화 제한 및 보상, 투자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상호 정보제공, 분쟁해결방법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전문 및 28조
  - 남한과 북한의 세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조세를 중심으로 양측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정하고, 거주자·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이중과세 방지방법(사업소득 면제방식, 투자소득 세액공제방식), 상호협의절차, 정보교환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전문 및 19조
  - 남북공동 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중재인의 자격 및 활동,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집행보장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전문 및 10조
  - 남북한이 합의하여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결제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합의
  -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미달러화) 등 규정

##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12.12-16, 평양) 합의에 따라 2000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전력협력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원장	이정재(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심의관) 유창무(산업자원부 심의관) 최재덕(건설교통부 국장) 김해중(국무총리실 심의관)	오광홍(전기석탄공업성 부상) 함기석(철도성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제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먼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를 타결하고, 전력협력·경의선 철도-도로연결·개성공단·임진강 수해방지문제를 균형적으로 다룰 것을 제의하였다.

전력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전력사정과 운영상황·기술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우선 전력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전력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전력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관련 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위한 접촉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 제정 및 전력·용수공급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당국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전력협력,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 및 동해어장 제공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특히 전력협력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위원장 접촉,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에 대해서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2001년 1월 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먼저 북측에 전달하였다. 이후 12차례에 걸친 서한문 및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하여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월 3일 서명·교환하였다.

— < 합의서 요지 > —

-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② 전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전력실패공동조사단 구성·운영
  -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여 전력실패공동조사문제 등을 토의, 전력실패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7~10명 범위에서 구성하며 2월중 공동조사 착수
- ③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협력을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 구성·운영
  -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10명 범위에서 구성하며 3월중 공동조사 착수
- ④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무협의회 시작
- 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1년 2월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협의·확정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제1조 위원회 구성

-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위원은 각기 편리한대로 함
-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둠

○ 제2조 위원회 기능

-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
-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협의·이행
-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 작성

○ 제3조 위원회 운영

-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
- 필요한 경우 회의 사이에 분야별 실무협의회 회의를 운영
-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
-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

제2차 회의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2001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10월 12일 조평통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 모든 당국간회담의 금강산 개최를 주장함으로써 예정된 날짜에 열리지 못하였다.

이어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2차 회의 개최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동 회담이 합의없이 종료됨에 따라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나.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유창무(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오광홍(전기석탄공업성 부상)
대 표	엄종식(통일부 과장) 김인섭(한국전력 전력협력팀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우리측은 남북간 전력협력을 위한 합리적·효율적 논의를 위해 전력실태 조사문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력실태공동조사단 구성·운영 합의서」(안)을 우선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이 구상하고 있는 전력실태조사 추진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조사항목을 발전 및 계통·송배전으로 분류하여 자료제공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는 2월중에 착수하여 우선 7일간 실시할 것과 북측도 우리측을 방문하여 상응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 쌍방이 전력제공 문제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서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력제공의 양과 시기부터 확정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송전방식으로 전력협력을 적극 실현하자고 요구하였다.

또한 북측은 전력실태조사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우선 50만KW 송전에 필요한 현지조사부터 시행하고 북측의 남천·개성과 우리측의 양주·문산지역중 합의되는 지점을 현지답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측이 전력공급은 이미 양해된 사항이므로 50만KW 송전을 전제로

제한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우리측은 전력제공문제는 지금까지 어떠한 남북간 회담·접촉에서도 합의된 바 없으며, 남북전력협력은 우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쌍방간에 전력실태 조사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문안정리에 들어가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타결하여 2월 중에 실태조사에 착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전력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쌍방의 기본입장에 차이가 확연한 만큼 합의서 문안정리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기본전제, 목적 등에 입장차이가 명백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문제의 논의와 문서교환방식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남북 쌍방은 앞으로 계속 상기 문제에 대해 협의·추진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 다.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차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최영철(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대 표	박경석(통일부 과장) 노재화(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장준갑(국토환경보호성 과장) 김봉철(민족화해협의회 부원)

우리측은 임진강유역의 수해를 방지하고 남북 쌍방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부적인 공동조사가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이러한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효과를 정확히 검증하여 쉬운 사업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2001년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조사단 구성, 조사지역,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남북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안)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 문제를 협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산림조성, 강하천 정리, 큰물조절언제 건설’ 등을 제의하는 한편,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7개항으로 구성된 「북남림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조사단 구성, 조사지역, 조사시기, 조사결과 처리 등에 있어 북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재강조하고,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진강 수해방지의 근본은 ‘언제(댐)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사업목표를 확정된 후 필요한 지점만 조사하자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원칙, 방향만 합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자료교환, 사진촬영, 왕래절차 등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합의서 문안 토의 과정에서 우리측은 이번 회의가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실무협의회 권한 밖의 문제이며, 공동조사를 선행한 후 상위기구에서 대상사업을 확정짓도록 하자고 설득하면서 토의를 주도해 나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동보도문에 대해서도 북측은 세부문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하자는데 동의하면서도 제2차 회의 장소와 일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확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남북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각기 편리한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회의 종료후 우리측은 3월 3일 공동조사에 관한 우리측 합의서 수정안을 재작성하여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였으나 북측은 그후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인 남측의 현대와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01년 6월 8일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 양측 당국의 승인을 받아 육로관광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당국간 대화를 양측 당국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 9.15~18, 서울)에서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1차 회담을 10월 3일~10월 5일 금강산 지역에서 진행하였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김택룡(내각사무국 부장)
대 표	박양우(문화관광부 문화관광국장) 양성호(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방종삼(무역성 부국장) 리창덕(국토환경보호성 과장)

우리측은 회담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로관광 실현과 관광특구의 지정·시행 등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금강산관광에 대한 관광객 및 투자자의 관심이

제고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측의 송현리와 북측의 고성간 도로를 연결하되, 임시도로를 2001년안에 개설하여 우선 육로관광을 실시하면서 2002년 10월까지 2차선 포장도로를 완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이 민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자간의 협의·추진구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해로를 이용한 기존의 사업을 먼저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되고 있는 사업추진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 후 다른 관광활성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로관광을 정상화하여 당장의 수익성을 높히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현대-아태간에 이미 합의해서 추진되어온 사항의 이행을 당국차원에서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측은 민간급으로 추진되어 온 금강산 관광사업을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북측은 육로관광에 대해서는 군사적 문제, 환경보전 문제 등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어렵다고 하면서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결국 금강산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남북 쌍방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1차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차기 회담을 10월 19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측은 제2차 회담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이 서로 왕래하면서 회담을 진행해 온 관례에 따라 우리측 지역인 설악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후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2001.11.9~14, 금강산)에서 2차회담을 12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으나 6차 장관급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제5절 남북적십자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데 따라 금강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세 차례 진행된 회담을 통해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3회), 생사·주소확인(2회), 서신교환(1회) 등을 합의·추진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1.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은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기륜(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단장	최승철(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표	고경빈(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김장균(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대표	리금철(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창훈(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

\* 우리측은 제2차 회담부터 김장균 대표를 최기성 대표(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로, 제3차 회담부터 박기륜 수석대표를 이병웅 수석대표(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로 교체하였으며, 북측은 제3차 회담부터 최승철 단장을 김경락 단장(북

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최창훈 대표를 리호림 대표(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로 교체하였음.

1차 회담에서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북측 이산가족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한 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남측 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순차방문 형식을 제시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8월중에 판문점 자유의 집 또는 통일각에 설치하여 월별 4회, 매회당 100명씩 면회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들 중 생사가 확인된 숫자 내에서 매월 2회 이상 서신교환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후 실시하되, 구체적인 송환방법 등은 9월중 협의할 것을 제의하고, 북측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을 8월 15일부터 3박 4일간 동시에 교환하며, 방문단 교환에 앞서 비전향장기수 송환 사업을 우선 시행하자고 주장하였다.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하면, 북측은 송환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송환 10일전에 우리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사업의 실시 순서에 대한 의견조정을 거쳐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후 9월초에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고, 적십자회담을 계속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를 협의·타결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합의서로 채택하였다.

— < 합의서 요지 > —

- 이산가족 100명, 책임자 1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 등 총 151명으로 구성된 이산가족방문단을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평양 동시 교환
-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 전원 송환 즉시 적십자회담을 통해 협의·확정
- 북측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 송환

##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2000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된 2차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면회소 설치 문제, 이산가족방문단 추가 교환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9월중에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 마치고 그 결과를 10월 중순부터 매월 2회 통보하며, 10월부터 매월 2회 서신교환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를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여 매주 쌍방 각기 100명씩 면회를 실시하고, 2차 이산가족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 방문단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1차 회담에 이어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생사·주소확인 사업은 시범적인 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하고, 서신교환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는 12월 중순경 제3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확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되, 면회소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12월 중순에 결정하고, 2차 이산가족방문단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3차를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교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상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을 계속한 끝에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산가족방문단을 두 차례 더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 < 합의서 요지 > —

-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을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동시에 교환
-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9·10월에 시범적으로 100명씩 교환하여 생사·주소확인 후 통보, 교환 규모 확대
- 생사·주소확인 된 300명을 대상으로 11월중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 구체적 문제는 3차 회담에서 협의·확정
- 3차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
- 3차 회담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

### **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당초 2000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2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일정 등으로 인해 이듬해인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2차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 확대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자는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생사·주소확인을 위해 2001년내 1만명씩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하고 생사·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서신교환을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를 3월말 판문점에 설치하여 매주 쌍방 각기 100명씩 면회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방문단 교환사업을 정례화할 것을 제의하고,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교류사업에 대한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1월 29일 생사·주소확인 1차 의뢰서에 대한 회보서를 교환하고 2차 의뢰서를 2월 9일 교환하며 이에 대한 회보서를 2월 23일 교환한다.

둘째,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며 1월 31일 회보자 명단 교환, 2월 15일 결과 통보, 2월 20일 최종명단을 교환한다.

셋째, 서신교환을 3월 15일 실시한다.

이에 대해 북측은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확대는 시범단계를 거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시범이 완료된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서는 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되 2001년 8월 15일을 계기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것을 제의하였다.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일정 등 기 합의된 이산가족교류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측 제안과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된 안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미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의 재남가족 및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들의 추가 송환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2000년 9월 2일 이미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 63명을 송환하였으므로 동 문제는 종결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기존 합의일정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 이산가족면회소 설

치·운영문제, 방문단 교환 정례화 문제, 비전향장기수 추가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쌍방은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호 수정안을 제시하고 절충하면서 합의를 모색해 나갔다.

그 결과 쌍방은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등 기 합의된 사업의 일정을 확정하고, 생사·주소확인 등 시범적 사업 규모확대 문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① 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2.26~28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교환  
- 1.31 방문후보자 명단, 2.15 회보서, 2.17 최종방문단 명단 각각 교환
- ② 생사·주소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3.15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서신 교환 실시
- ③ 생사·주소확인 대상자 명단은 2.9 교환하고, 2.23 결과 통보
- ④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은 4차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
- 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는 4차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
- ⑥ 제4차 적십자회담은 4.3~5 개최, 장소는 추후 협의

그러나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우리측이 2001년 3월 2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2001년 12월 말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 제3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경제교류협력은 상호 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으로 두 차례의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는 등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및 교류협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것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 인적·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 증가

#### 1. 남북한 왕래

##### 가. 개 황

2001년 북한 방문은 신청 786건(9,148명), 승인 737건(8,805명), 성사 698건(8,551명)으로 1989년 방북이 허용된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이산가족·관광·대북지원 등 방북목적도 다양화 되었다.

### < 2001년도 분야별 방북 현황 >

(단위: 명)

구 분	관 광 (실 무)	경 제	사 회 문 화	경수로 사 업	대 북 지 원	이산가족 (교류주선)	기 타	계
방북인원	494	668	701	3,514	803	156	2,215	8,551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현황을 보면, 2001년 한해 동안 191명이 남한을 방문함으로써 2000년의 706명에 비해 78%가 감소되었다. 분야별로도 전년도에 비해 남북회담, 경제, 이산가족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성사되었다.

### < 2001년도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 >

(단위: 명)

구 분	남북 회담	경 제	체 육	이산가족	기 타	계
인 원	27	19	1	140	4	191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남북한 왕래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2001년 12월 말까지 신청 3,264건(30,249명), 승인 3,111건(28,901명), 성사 2,907건(27,152명)이며,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18명, 12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1995년부터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방북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은 총 24,747명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 방북인원 2,405명의 10배를 넘어서고 있어 남북간 인적교류 활성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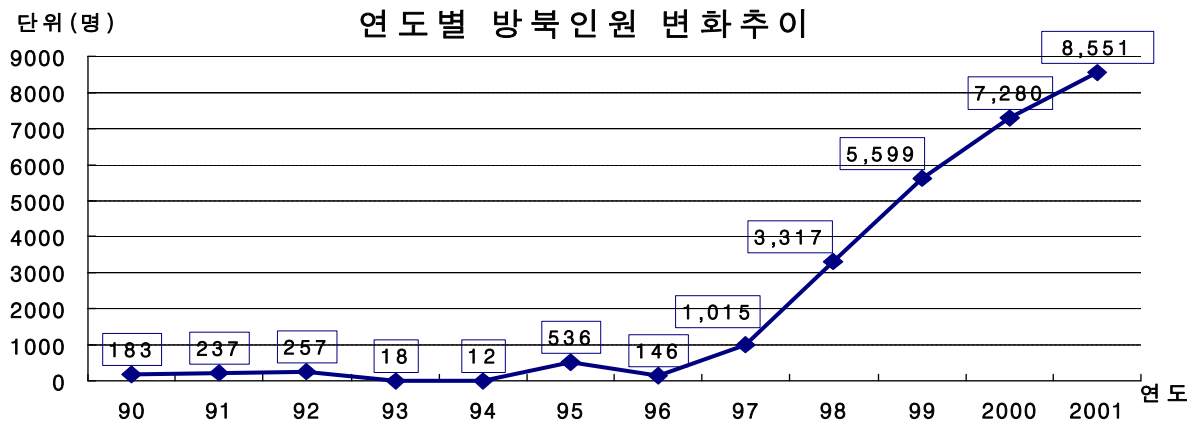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총 429,516명(외국인 1,422명, 영주권자 401명 포함)이 금강산을 관광했으며 2001년도 한해에는 57,879명이 다녀왔다.

## <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

(1989.6.12-2001.12.31, 단위:건(명))

연도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북한방문 남한방문	1(1) -	1(1) -	1(1) -
1990	북한방문 남한방문	7(199) 5(306)	6(187) 5(306)	3(183) 4(291)
1991	북한방문 남한방문	12(244) 3(175)	11(243) 3(175)	10(237) 3(175)
1992	북한방문 남한방문	17(303) 4(113)	8(257) 3(103)	8(257) 3(103)
1993	북한방문 남한방문	6(21) 2(6)	5(19) 2(6)	4(18) 2(6)
1994	북한방문 남한방문	12(78) -	7(54) -	1(12) -
1995	북한방문 남한방문	64(563) 1(7)	58(543) 1(7)	52(536) -
1996	북한방문 남한방문	50(249) -	35(170) -	28(146) -
1997	북한방문 남한방문	156(1,194) -	149(1,172) -	136(1,015) -
1998	북한방문 남한방문	402(3,980) -	387(3,716) -	340(3,317) -
1999	북한방문 남한방문	886(6,199) 1(62)	862(5,997) 1(62)	822(5,599) 1(62)
2000	북한방문 남한방문	865(8,070) 10(706)	845(7,737) 10(706)	804(7,280) 10(706)
2001	북한방문 남한방문	786(9,148) 5(191)	737(8,805) 5(191)	698(8,551) 5(191)
계	북한방문 남한방문	3,264(30,249) 31(1,564)	3,111(28,901) 30(1,556)	2,907(27,152) 28(1,534)

※ 금강산 관광객은 제외된 숫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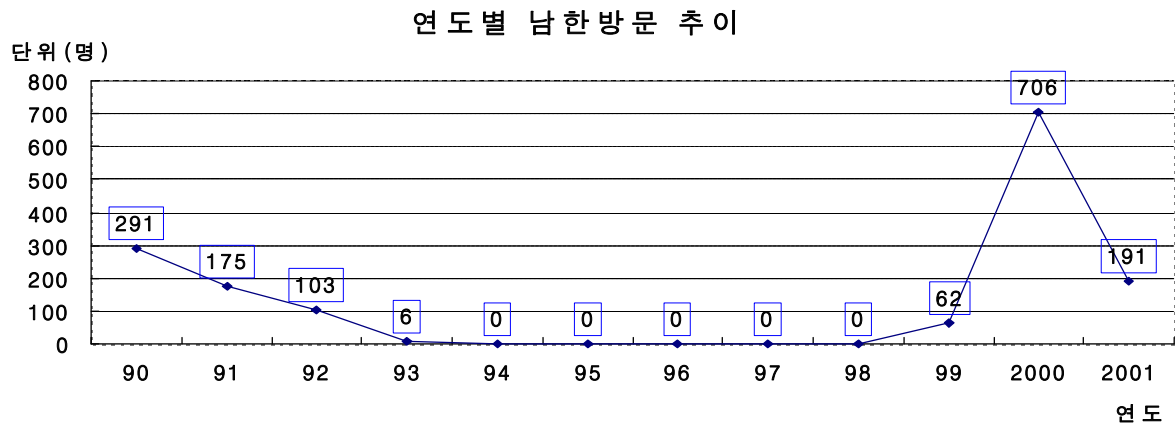
### < 분야별 방북 현황 >

(1989.6.12-2001.12.31, 단위:명)

구 분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경수로	대북지원	기 타 (남북회담등)	계
인원(명)	511	2,044	2,197	8,457	8,203	2,601	3,139	27,152

한편,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은 총 1,53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에는 291명이 방문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남한방문이 없었다. 1999년에는 62명이 방문하였고 2000년에는 706명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200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부진 등으로 인해 다시 191명으로 감소하였다.





### <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 >

(1989.6.12-2001.12.31, 단위:명)

구 분	남북 회담	체 육	문화 예술	경 제	학 술	이산 가족	기 타	계
인원(명)	447	211	369	53	15	427	12	1,534

## 나. 남한주민 방북

### (1) 경제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646건(2,675명), 승인 576건(2,387명), 성사 512건(2,044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69건(771명), 승인 150건(685명), 성사 142건(668명)으로 이는 2000년 방북 인원 543명에 비하여 12.3% 증가한 것이다.

1992년 10월 남포 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1994년 11월 8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후 재개되었으나, 북한의 무장잠수함 침투사건(1996. 9) 등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추진과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되면서 같은 해 10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하였고, 1999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해 북한의 고위층과 직접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에는 경제협력에 관한 제도적 장치 관련 당국간 협의를 위하여 11월 남북경협 실무접촉에 22명, 12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 35명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당국간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위한 우리 경제인들의 북한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도에도 경제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임가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협의, 하나비즈닷컴·엔트랙·훈넷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협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임가공사업 추진,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개조 사업 추진, 녹십자의 의약품 개발사업 및 물자교역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방북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 (2) 사회문화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360건(2,888명), 승인 325건(2,693명), 성사 264건(2,197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03건(841명), 승인 94건(775명), 성사 84건(701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0년 방북인원 674명에 비하여 4% 증가한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은 남북 국악인 서울·평양 공연(1990. 12),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10)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

팀 평가전(1991. 6) 등 남북공동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92년부터는 종교인 등의 개별적인 북한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기피함에 따라 1996년까지는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7년 중앙일보의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를 위해 북한방문이 재개되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 교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이 증가하였다. 특히, 제3국에서의 접촉위주로 이루어지던 사회문화교류가 평양,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학술·체육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신청 164건(1,557명), 승인 158건(1,522명), 성사 131건(1,226명)이며, 2001년에는 신청 59건(443명), 승인 58건(431명), 성사 50건(386명)이 이루어졌다.

2001년도 주요 방북사례를 보면, 강만길 「민족21」 발행인 등 20명이 역사자료전시회 참관을 위해 방북하였고, 박선희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이사장 등 3명이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 협의를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2001년 3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등 10명이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였고,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은 통일염원 금강산자동차질주경주대회를 위해서 방북하였으며, 현대는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사업을 위하여 관련인사와 건설근로자들이 방북하는 등 학술·체육분야에서 북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51건(343명), 승인 44건(315명), 성사 38건(288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3건(90명), 승인 12건(87명), 성사 11건(82명)이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에 있어서 방북은 취재·보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정보의 대량전달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해 추진이 어려

운 분야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론사 사장단 방북이 성사(2000. 8)되면서 향후 남북언론교류 전망을 밝게 했다. 언론사 사장단은 방북시에는 「남북언론기관간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북한 언론기관대표의 서울 방문 추진도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1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MBC가 3월 방북하여 북한풍물, 주민생활 취재내용을 생방송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KBS는 5월 북한의 자연·환경·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방북하여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PD연합회의 드라마제작 협의를 위한 방북도 성사되었다.

종교분야에서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75건(388명), 승인 63건(304명), 성사 47건(232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8건(157명), 승인 12건(110명), 성사 11건(86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0년 방북인원 47명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각 교단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42건(484명), 승인 36건(448명), 성사 27건(369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1건(138명), 승인 10건(134명), 성사 10건(134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5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춘향문화선양회의 춘향전 방북공연 및 메종드 이영희 등의 민족 옷 전시회 등을 들 수 있다.

### (3)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방북

1995년에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부지조사단과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997년 8월에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1998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 한해 동안 911명의 남한주민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한반도에

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공사관계자들이 실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2001년도 대북경수로건설사업 관련 방북은 신청 236건(3,586명), 승인 235건(3,581명), 성사 229건(3,514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6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9년 12월 15일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 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31건(1,566명), 승인 31건(1,566명), 성사 28건(1,534명)이며 2001년에는 5건(191명)이 신청되어 모두 승인·성사되었다.

지금까지 성사된 북한주민의 주요 남한 방문사례로는 남북고위급회담(1990-1992)을 위한 북한대표단 서울방문,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1991) 서울경기 참석, 산업시찰을 위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남한방문(1992) 등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서울에서 개최한 두만강 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1.27-1.30)와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11.8-10)에 각 3명씩 참석한 이후로 1998년까지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 실적은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들어와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북측농구단 및 관계자 62명이 서울을 방문(12.22-25)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재개되었다.

2000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9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남한방문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교류의 증가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각종 회담의 회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남한방문사례로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 (2000. 5.24-27)

102명, 평양교예단 공연(2000. 5.27-6.11) 102명,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7.29-31) 25명,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 8.15-8.18) 151명,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 8.18-24) 132명, 김용순 특사 방문(2000. 9.11-14) 8명,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2000. 9.24-26) 15명,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0. 9.24-26) 13명,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9.27-30) 22명,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11.30-12. 2) 136명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한편, 2001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다시 감소되긴 하였으나 1999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한 상태로 꾸준히 지속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1년도의 주요 남한방문사례로는 제3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2001. 2.26-28) 140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조문단(2001. 3.23) 4명,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 9.15-18) 27명, KEDO 원전 고위정책자과정 참여(2001. 12.17-29) 19명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 2. 북한주민접촉

### 가. 개 황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2001년도에는 신청 1,160건(2,317명), 승인 1,136건(2,268명), 성사 1,209건(1,877명)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23,671건(41,711명), 승인 23,235건(40,088명), 성사 7,250건(15,3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1년도 북한주민접촉 실적은 2000년도에 비해 감소되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개별접촉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01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은 경제분야 250건(393명), 관광분야 2건(19명), 사회문화분야 94건(346명), 대북지원 28건(77명), 이산가족 830건(1,012명), 기타 5건(30명) 등이다.

### < 2001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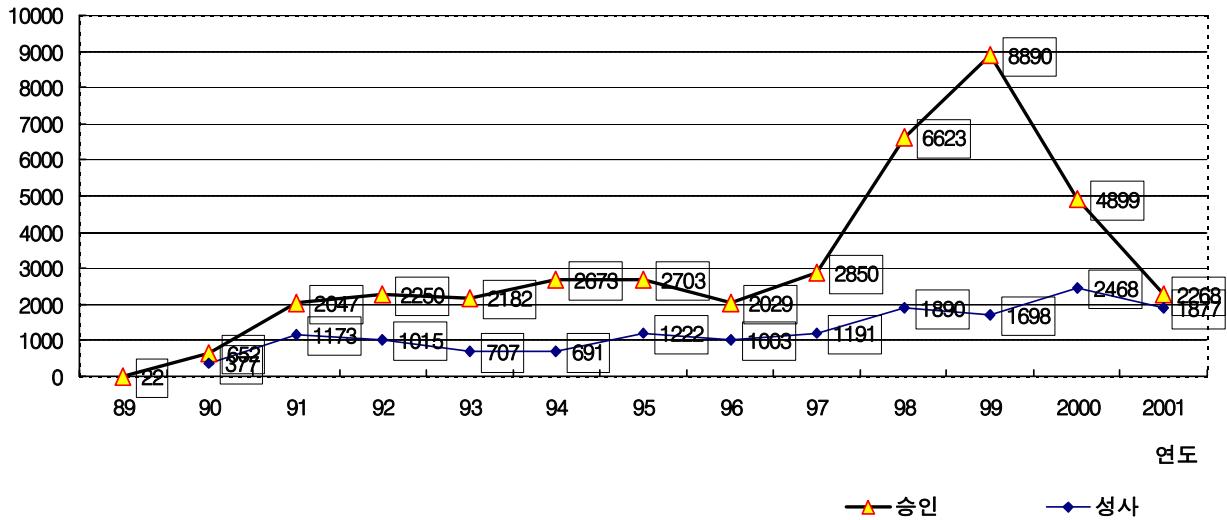
구분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대북지원	기타	계
인원	1,012	422	317	19	77	30	1,877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핵문제 발생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1994년에는 237건(691명)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산가족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 경제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그 이후 사회문화 분야 및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연도별 주민접촉 신청,승인,성사 추이

단위(명)



### <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단위: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70)	21(22)	-
1990	235(687)	206(652)	62(377)
1991	753(2,195)	685(2,047)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94(1,222)
1996	729(2,338)	692(2,029)	465(1,003)
1997	1,387(2,969)	1,340(2,850)	516(1,191)
1998	4,628(6,714)	4,567(6,623)	856(1,890)
1999	7,590(9,198)	7,616(8,890)	884(1,698)
2000	2,831(4,950)	2,812(4,899)	1,710(2,468)
2001	1,160(2,317)	1,136(2,268)	1,209(1,877)
계	23,671(41,711)	23,235(40,088)	7,250(15,312)



## 나. 관광사업 관련 접촉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181건(599명), 승인 173건(571명), 성사 51건(171명)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에는 신청 8건(47명), 승인 8건(47명), 성사 2건(19명)이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현대와 아태 관계자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관광분야에서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내여행사 등이 승인을 받고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주로 북한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 개발과 남북관광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북측과의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다. 경제분야 접촉

경제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4,393건(10,396명), 승인 4,293건(10,141명), 성사 2,295건(3,834명)에 이르고 있다. 2001년에는 신청 433건(810명), 승인 424건(799명), 성사 250건(393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1년도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은 정보기술(IT)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이징, 홍콩 등 제3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접촉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의 방북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 라. 사회문화분야 접촉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623건(4,115명), 승인 575건(3,465명), 성사 210건(2,138명)이 이루어졌다. 2001년도에는 신청 67건(192명), 승인 67건(192명), 성사 30건(102명)으로 전년도보다 접촉신청 인원이 36% 감소하였으나, 성사 인원은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남북간의 학술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중국지역 동포학자와 단체들의 대북 교류경험을 활용하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학술회의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하버드대 주관 학술회의(1.25~28, 호놀룰루), 우리말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2.22~24, 옌지), 유럽한국학회 제20차 학술대회(4.4~8, 영국런던대), 만주사변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8.7~8, 하얼빈), 21세기 민족문화 자료의 발굴과 연구 제1차 학술회의(9.21~22, 옌지), 남북한언어동질성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12.14~14, 베이징), 제5회 한·조·일 자연체험캠프 참가(12.23~1.1, 일본 돗토리) 등이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의 신청 457건(1,851명), 승인 403건(1,744명), 성사 146건(960명)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에는 신청 57건(157명), 승인 53건(147명), 성사 12건(58명)으로 전년에 비해 63% 감소하였다..

2001년도의 주요 접촉사례로는 남북경기도 문화교류 및 도자기 엑스포에 북한초청(1.18),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협의(3.31), 만화교류협의(7.30), 남북미술교류협의(11.17), 학술대회 및 한일고전예능제 조총련초청협의(12.7) 등이 있다.

체육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248건(1,151명), 승인 238건(1,111명), 성사 84건(612명)이다. 2001년에는 신청 26건(84명), 승인 24건(80명), 성사 11건(27명)의 북한주민접촉이 이루어져 전년도의 40%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1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제2차 통일염원 국제텔리 협의(2.8),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문제 협의(3.3),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문제 협의(3.22), 제18회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 북한측 초청(9.13),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여 추진(11.21) 등이 있다.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390건(1,889명), 승인 334건(1,738명), 성사 144건(1,079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신청 16건(101명), 승인 16건(100명), 성사 9건(86명)이 이루어져 2000년에 비해 접촉 성사건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2001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조선그리스도연맹과의 종교교류 협의(3.2),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협의(3.12), 금강산 평화모임 협의(3.26), 남북불교교류 협의(4.23), 개천절 공동행사 협의(4.30), 남북 기독교 교류협의(6.25)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376건(1,040명), 승인 334건(940명), 성사 122건(422명)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신청 38건(67명), 승인 38건(69명), 성사 13건(29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8% 감소한 것이다.

2001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북한도서전시회 참관(2.14), 북한 스포츠 뉴스 및 자료사용 협의(2.21), 남북통신사간 교류 협의(3.7), 북한 고려대장경 국내출간 협의(4.4), 동영상 콘텐츠협력 협의(4.7), 남북방송교류 협의(5.8), 조총련 교육문제 취재(10.24), 방북취재 및 언론교류 협의(11.23) 등을 들 수 있다.

과학·환경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246건(908명), 승인 334건(885명), 성사 69건(326명)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신청 15건(33명), 승인 14건(28명), 성사 12건(15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1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대전광역시에서 제2회 WTA 대전테크노  
마트 초청(2001.7), 한국산업인력공단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북한  
관계자 초청(2001.7) 등을 들 수 있다.

## 제2절 남북교역

### 1. 남북간 물자교역

#### 가. 교역규모

남북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1993년 NPT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등에 힘입어 1995년부터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 증가 등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한 2억 2,194만달러에 그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관광 사업 및 경수로 건설사업 등 경협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달러를 넘어섰다.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2001년에는 국내경기 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으로 2000년에 비해서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남북교역규모가 4억 296만달러로 4억 달러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 남북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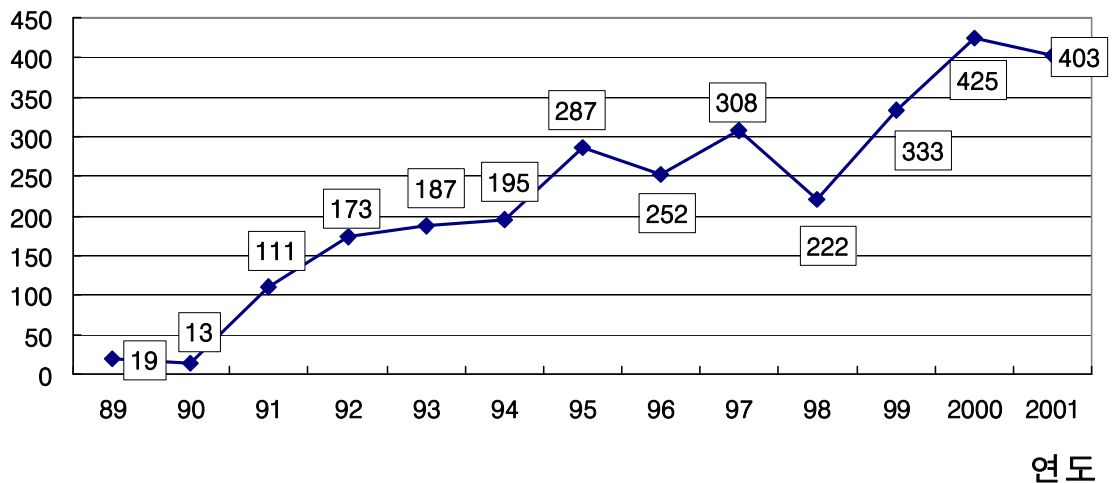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5	186,592
1994	708	73	176,298	267	92	18,249	975	165	194,547
1995	976	105	222,855	1,668	174	64,436	2,644	279	287,291
1996	1,475	122	182,400	1,908	171	69,639	3,383	293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414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9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3,952	203	152,373	3,442	505	272,775	7,394	647	425,148
2001	4,720	197	176,170	3,034	468	226,787	7,754	603	402,957
계	20,685		1,794,717	21,311		1,134,458	41,996		2,929,174

\* 19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단위(백만불)



## 나. 남북간 교역수지

전체 교역 규모면에서 볼 때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북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98년부터는 남한의 반출우위의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1995년부터 KEDO중유 및 인도지원물자의 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경수로건설사업,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에는 비료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이른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교역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선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인도지원, 경수로, 금강산관광사업용 물자를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면에서 연평균 1억 1,561만달러의 교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수지 추이는 북한경제의 반입 여력이 확보되고, 청산결제 등을 통해 상호 균형적인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1989	18,655	69	18,724	△ 18,586	-
1990	12,278	1,188	13,466	△ 11,090	-
1991	105,719	5,547	111,266	△ 100,172	1991~2001연평균 △ 57,325 (△ 115,612)
1992	162,863	10,563	173,426	△ 152,300	
1993	178,167	8,425	186,592	△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 158,419 (△ 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 112,761 (△ 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 77,799 (△ 133,049)	
1998	92,264	129,679	221,943	37,415 (△ 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 53,929)	
20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 61,315)	
2001	176,170	226,787	402,957	50,617 (△ 110,639)	
합계	1,794,715	1,134,459	2,929,175	△ 660,256 (△ 1,301,409)	

\*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 다. 교역형태 · 품목

남북교역은 초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역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부터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대남경협사업을 담당하고 베이징·단둥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직접교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4%의 반입 비중을 보이던 광산물은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초기부터 연평균 40%이상의 반입비중을 보이던 철강·금속제품은 1999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섬유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농림수산품은 초기부터 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 47.2%, 2001년에는 51.0%로 각각의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품과 섬유류의 반입비중이 1999년 76.8% 2000년 82.4%, 2001년에는 82.2%로써 높은 편중도를 보이고 있다. 2001년도의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품 51.0%, 섬유류 31.2%, 철강·금속제품 5.6%, 전자 및 전기 5.0% 등이다.

# < 연도별 반입품목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도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생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전자및전기	기타제품	합계
1989	2,352 (12.6)	1,094 (5.9)	104 (0.6)	5 (0.0)	15,072 (80.0)	24 (0.1)	0 (0.0)	4 (0.0)	18,656 (100.0)
1990	5,572 (45.4)	58 (0.5)	1,730 (14.1)	0 (0.0)	4,529 (36.9)	14 (0.1)	0 (0.0)	376 (3.1)	12,278 (100.0)
1991	10,818 (10.2)	21,520 (20.4)	5,732 (5.4)	0 (0.0)	67,303 (63.7)	17 (0.0)	0 (0.0)	329 (0.3)	105,719 (100.0)
1992	16,906 (10.4)	43,866 (26.9)	13,064 (8.0)	3,385 (2.1)	83,514 (51.3)	797 (0.5)	4 (0.0)	1,329 (0.8)	162,864 (100.0)
1993	12,015 (6.7)	87,277 (49.0)	1,528 (0.9)	8,477 (4.8)	64,647 (36.3)	0 (0.0)	80 (0.0)	4,144 (2.3)	178,167 (100.0)
1994	15,250 (8.7)	75,468 (42.8)	1,246 (0.7)	18,515 (10.5)	63,069 (35.8)	0 (0.0)	0 (0.0)	2,750 (1.6)	176,298 (100.0)
1995	22,319 (10.0)	86,562 (38.8)	347 (0.2)	28,833 (12.9)	81,629 (36.6)	9 (0.0)	6 (0.0)	3,150 (1.4)	222,855 (100.0)
1996	23,455 (12.9)	64,807 (35.5)	555 (0.3)	44,460 (24.4)	44,260 (24.3)	91 (0.0)	1,697 (0.9)	3,076 (1.7)	182,400 (100.0)
1997	27,326 (14.2)	48,313 (25.0)	15,677 (8.1)	47,091 (24.4)	47,946 (24.8)	999 (0.5)	3,140 (1.6)	2,578 (1.3)	193,069 (100.0)
1998	21,798 (23.6)	765 (0.8)	2,427 (2.6)	38,794 (42.0)	20,254 (22.0)	698 (0.8)	3,518 (3.8)	4,010 (4.3)	92,264 (100.0)
1999	47,886 (39.4)	2,462 (2.0)	2,494 (2.1)	45,513 (37.4)	16,120 (13.3)	1,557 (0.3)	2,838 (2.3)	2,707 (2.2)	121,604 (100.0)
2000	71,934 (47.2)	517 (0.3)	1,538 (1.0)	53,693 (35.2)	11,747 (7.7)	1,739 (1.1)	8,254 (5.4)	2,940 (1.9)	152,373 (100.0)
2001	89,811 (51.0)	3,554 (2.0)	1,405 (0.8)	54,930 (31.2)	9,887 (5.6)	2,281 (1.3)	8,748 (5.0)	5,554 (3.2)	176,170 (100.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3년부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로 섬유류가 늘어나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식량지원 등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증가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가 1997년부터 10%이상, 화학공업 제품도 1999년 20.2%, 2000년 35.0%, 2001년에는 28.2%로 반출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의 반출과 비료 지원에 기인된 것이다. 2001년의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28.2%, 섬유류 23.1%, 1차산품 14.6%, 기계류·운반용 기계 12.0%,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6.4% 등이다.

< 연도별 반출품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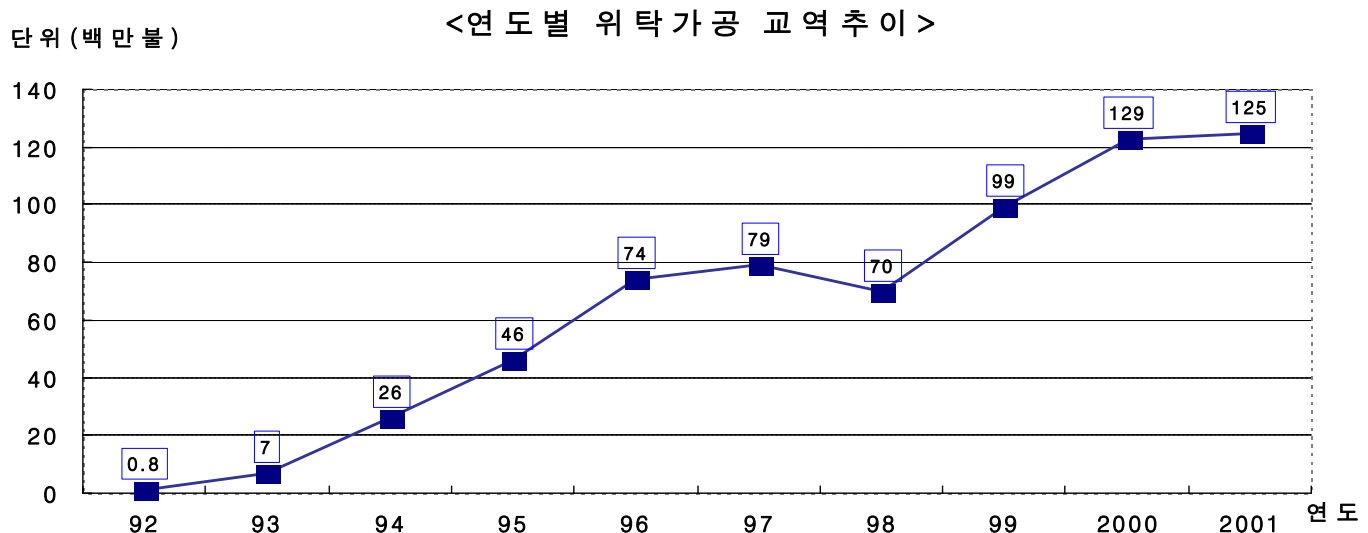
(단위:천달러)

연도	일차산품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 고무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류	생활 용품	철강금 속제품	전자 및 전기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잡제품	합계
1989	0 (0.0)	0 (0.0)	0 (0.0)	0 (0.0)	6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69 (100.0)
1990	10 (0.8)	0 (0.0)	0 (0.0)	0 (0.0)	83 (7.0)	0 (0.0)	0 (0.0)	0 (0.0)	1,095 (92.2)	0 (0.0)	1,188 (100.0)
1991	1,607 (29.0)	1,819 (32.8)	216 (3.9)	1,392 (25.1)	66 (1.2)	0 (0.0)	0 (0.0)	447 (8.1)	0 (0.0)	0 (0.0)	5,547 (100.0)
1992	64 (0.6)	5,214 (49.4)	2,369 (22.4)	135 (1.3)	717 (6.8)	85 (0.8)	1,957 (18.5)	0 (0.0)	22 (0.2)	0 (0.0)	10,563 (100.0)
1993	69 (0.8)	920 (10.9)	732 (8.7)	1 (0.0)	5,581 (66.2)	20 (0.2)	260 (3.1)	463 (5.5)	121 (1.4)	260 (3.1)	8,425 (100.0)
1994	3,317 (18.2)	1,499 (8.2)	152 (0.8)	79 (0.4)	12,077 (66.2)	255 (1.4)	274 (1.5)	160 (0.9)	56 (0.3)	379 (2.1)	18,249 (100.0)
1995	10,754 (16.7)	906 (1.4)	1,961 (3.0)	11,363 (17.6)	34,986 (54.3)	1,465 (2.3)	199 (0.3)	262 (0.4)	1,548 (2.4)	991 (1.5)	64,436 (100.0)
1996	6,715 (9.6)	2,506 (3.6)	3,069 (4.4)	13,666 (19.6)	36,340 (52.2)	1,907 (2.7)	290 (0.4)	2,172 (3.1)	960 (1.4)	2,013 (2.9)	69,639 (100.0)
1997	17,048 (14.8)	2,877 (2.5)	5,888 (5.1)	30,399 (26.4)	33,970 (29.5)	3,565 (3.1)	3,948 (3.4)	3,319 (2.9)	13,098 (11.4)	1,160 (1.0)	115,270 (100.0)
1998	19,944 (15.4)	5,054 (3.9)	4,717 (3.6)	21,467 (16.6)	28,543 (22.0)	3,707 (2.9)	9,475 (7.3)	5,495 (4.2)	28,923 (22.3)	2,355 (1.8)	129,679 (100.0)
1999	17,834 (8.4)	42,691 (20.2)	4,962 (2.3)	50,542 (23.9)	36,286 (17.1)	3,832 (1.8)	16,953 (8.0)	7,307 (3.4)	26,985 (12.7)	3,484 (1.6)	211,832 (100.0)
2000	25,896 (9.5)	95,528 (35.0)	4,752 (1.7)	20,497 (7.5)	43,433 (15.9)	5,414 (2.0)	13,995 (5.1)	28,075 (10.3)	32,122 (11.8)	3,042 (1.1)	272,775 (100.0)
2001	33,189 (14.6)	63,846 (28.2)	3,686 (1.6)	11,176 (4.9)	52,388 (23.1)	2,604 (1.1)	16,703 (7.4)	14,560 (6.4)	27,155 (12.0)	1,480 (0.7)	226,787 (100.0)

##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후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다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위탁가공교역으로

생산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년보다 40.3%, 2000년에는 29.7% 증가하였다. 2000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2,919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0.4%,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2,492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1.0%,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모니터 부품,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이, 2000년에는 라디오카세트, 유선전화기, 컴퓨터모니터, 당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2001년에는 조제과실, 잎담배, 유아복, 방송통신기기, 전산기록매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방북은 1995년에 대동화학의 기술진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이래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주)엘칸토 등 7개 기업 50명, 1999년에 (주)성남전자공업 등 6개 기업 57명, 2000년에는 (주)IMRI 등 10개 기업 81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다. 또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기관인 기술표준원 관계자 2명이 최초로 현지공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1년에는 (주)성남전자공업 등 29개 기업 203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다. 또한 대한광업진흥공사 관계자 2명이 최초로 북한 광물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124건 2,581만달러로 2001년도에는 52건 899만달러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도 매년 증가하여 2001년에 125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설비 반출과 참여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탁가공교역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1년에 반출된 설비는 전자제품(컴퓨터모니터, TV,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등)과 전기제품(변압기철심, 디가우징코일, 컴팩트형 전구, 통신용신호분배기 등) 및 포장재용 발포수지 등 관련설비들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품목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 위탁가공교역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8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24,924
합계	1,642,343	285,936	861,683	242,468	2,504,026	528,404

#### < 연도별 위탁가공설비 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업체수(건수)	2(2)	3(6)	4(4)	6(6)	13(16)	20(35)	30(52)	78(121)
금 액	532	670	490	1,380	5,234	7,653	8,993	24,952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

(단위 : 개)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업체수	4	7	9	18	38	48	72	132	151	125

### 제3절 남북 교통·통신망 연결

#### 1. 경의선 철도·도로 등 남북간 교통로 연결

##### 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2000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고,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공사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부처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등 사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문산역에서 임진강교까지의 노반공사(7.9km)와 철도 전구간의 궤도, 전기, 신호공사를 담당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도로(5km) 설계, 용지보상, 구조물, 포장공사를 담당하며, 국방부는 임진강교에서 군사분계선 철도구간(4.1km)의 노반공사와 지뢰제거,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 도로구간(5km)의 노반공사 및 지뢰제거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 군사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26일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주변의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2000년도의 세 차례 남북군사실



무회담(11.28, 12.5, 12.21)과 2001년의 두 차례 남북군사실무회담(1.31, 2.8)을 통해 그 동안 미합의 사안이었던 관리구역의 폭 및 지뢰제거문제와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 폭파작업시간 등을 최종 타결하였다.

남과 북은 2001년 2월 12일과 14일 두 차례의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교환을 하루 앞둔 2001년 2월 11일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로 동 합의서의 서명·교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2001년 12월 현재까지 서명·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철도·도로를 이용한 인적·물적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 처음으로 육로를 통한 출입이라는 점을 감안, 원활한 출입심사·세관·검역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경의선 출입관리시설(CIQ)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계획마련과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입관리시설은 경의선 도라산역사내에 설치될 계획이다. 남북간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상징화한 도라산역사는 향후 철도를 이용한 남북간 인적·물적 왕래에 따른 출입관리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측은 2000년 9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 해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교환도 연기됨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공사 추진과 경의선 연결에 필요한 남북간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소강국면 가운데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7~8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방문, 남과 북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러시아와 공동선언하는 등 남북간 철도연결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서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측은 북측에 경의선 연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는 등 북측의 공사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9.15-18)에서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가 곧 착수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경의선 연결 일부 구간인 문산~임진강역까지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1년 9월 30일 임진강역까지 연장운행(주중에는 매일 5회, 주말 및 공휴일에는 매일 9회 왕복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는 50년 동안 끊어진 철도의 전구간은 아니지만 일부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함으로써 경의선 연결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일평균 3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구간은 지난 50여년간 인적왕래가 없었던 지역으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9월 21일 환경 및 생태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환경생태계보전공동조사단을 발족하여 지형·지질·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7차례 조사를 실시, 동·식물 생태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공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될 경우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인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축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나.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2001년 12월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간 교역물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간·부산-나진간, 금강산 관광을 위해 속초-장전간, KEDO 인력수송을 위해 속초-양화간 등 4개 항로에 정기선이 운항 중에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부정기선들이 남북을 오가고 있다. 특히 인천-남포간에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선박운항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곧 정상화되어 현재 주당 1회씩 운항하고 있다.

2001년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1,686회로 전년대비 18.7% 감소하였다. 이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766회로 전년대비 16.4% 감소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920회로 전년대비 20.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원인은 연초 인천-남포간 선박운항 중단사태, 금강산 관광선의 운항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3,013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4,145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7,158

2001년 남북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837,653톤으로 전년대비 19.1%가 증가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598,321톤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239,332톤으로 53.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농산물, 광산물 등의 반입량과 대북지원물자 반출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 <남북간 물동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남한→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780,593	547,262	598,321	3,119,435
북한→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162,220	203,019	155,883	239,332	1,674,737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703,145	837,653	4,794,172

한편,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 직항로를 최초로 운항한 이후 총 43회가 운행되었으며, 2001년에도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고 정주영 회장 조문단 수송 등 편도기준으로 북한→남한 11회, 남한→북한 8회 등 총 19회가 운행되었다.

## <남북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2000	2001	계
남한→북한	20	8	28
북한→남한	23	11	34
계	43	19	62

## 2. 남북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장 간 전화가 1회선 개통되었으며, 각종 회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과 평양간 회담지원용 전화 18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5년 북측이 일방적으로 직통전화 운용을 중단한 이래 일부 전화회선의 재개통과 폐쇄가 반복되다가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직통전화선이 재개통되었다.

2001년 12월말 현재 남북한간에 직접 연결된 전화는 29회선이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27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 및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 현황>

(2001.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12.21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1997.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 2.17
합	계	29	

###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 현황>

(2001.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1997. 8. 4
		2	2000. 7.26
		6	2001. 5.23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6	1998.11.17
		2	1999. 5.18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3	2000.11.21
합	계	27	

한편,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향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향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 설치된 판문점 경유 남북간 직통전화로 2회선이 개설되었고,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Ⅱ)을 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

되고 있다.

또한, 북한 금호지구에서 KEDO 경수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화와 공사인력들을 위한 통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통신이 1997년 8월 1일 'KEDO 경수로 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기존의 북한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해 8월 4일 8회선, 2000년 7월 26일 2회선을 개통하였다.

경수로 사업의 확대에 따라 통신망의 확충이 절실하게 되었고, 한국 통신은 2001년 2월 5일 투자규모를 14만달러로 하는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받았고, 이어 디지털 통신장비 반출을 통해 5월 23일 디지털 1회선을 개통하였다. 디지털 1회선은 음성전화용으로는 6회선이 가능하므로 남한 인력을 위해 5회선, 우즈베크 인력을 위해 1회선이 이용되고 있으며 모두 공중용이다. 이에 따라 경수로 통신망은 총 16회선이 되었다.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11월 17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 1999년 5월 18일 2회선 등 총 8회선을 개통시켰다.

2000년 11월 20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협력사업 변경승인으로 남북간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남북간 직접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12월 현재 전화 2회선 및 팩스 1회선을 포함 총 3회선이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1년 10월 4일 현대시스콤(주)이 현대전자산업(주)의 통신부문을 인수하여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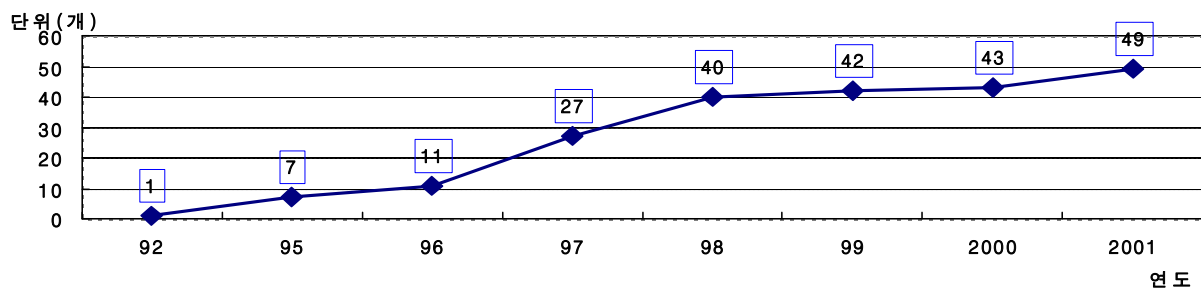
## 제4절 남북경제·사회문화협력 확대

### 1. 남북경제교류협력

#### 가. 협력사업(자)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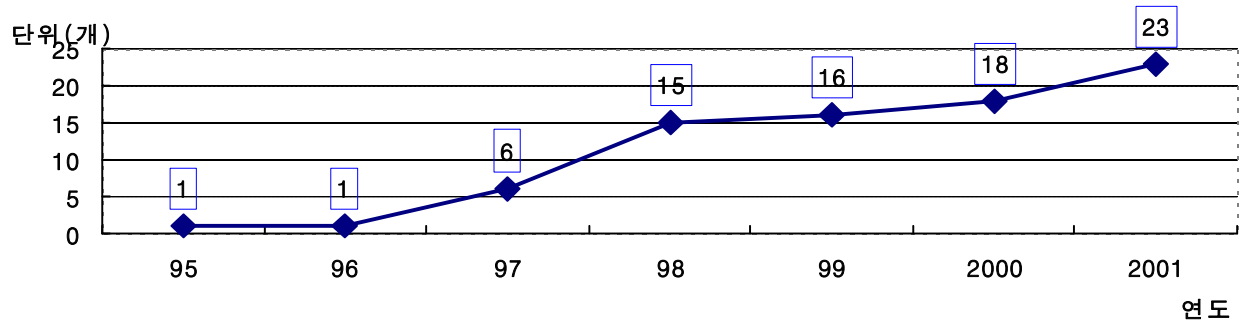
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49건의 협력사업자 승인, 23건의 협력사업 승인이 있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19건의 협력사업자 승인, 16건의 협력사업 승인이 있었다. 2001년에는 하나비즈닷컴, 엔트랙, G-한신, 국양해운, 훈넷 등 5건의 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추이(누계)



\*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중 취소사유 발생으로 4건이 취소됨.('99.12.23)

##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추이(누계)



\*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던 1건이 취소됨.(’99.12.23)



### <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 표시는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된 기업(4건에 대해 '99.12.23 취소)

(2001.12 현재)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우 (합영)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남포	512만달러	'92.10.5 ( '95. 5.17)
고합물산 (합영, 합작)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남포, 나진, 선봉, 평양	686만달러	'95. 5.17
한일합섬 (합영, 합작)	웨타, 봉제, 방적 등 4개 사업	"	980만달러	'95. 6.26
국제상사 (합영, 합작)	신발	"	350만달러	'95. 6.26
※ 녹십자 (합작)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평양 통일구역	311만달러	'95.9.15 ( '97.11.14)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시멘트 싸이로 건설	나진, 선봉	300만달러	'95. 9.15
동통해운 (단독투자)	하역설비(크레인 등)	"	500만달러	'95. 9.15
삼성전자 (합작)	나진선봉 통신센터	"	700만달러	'96. 4.27
※ 태 창 (합영)	금강산 샘물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달러	'96.4.27 ( '97.5.22)
대우전자 (합영)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달러	'96. 4.27
※ 한국전력공사	경수로건설지원사업	신포	4,500만달러 →11,430.8 만달러	'96. 7.15 ( '97.8.16→ '99.8.10변경)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TKC)	금호지구	40.8억달러 (PWC금액 포함)	( '99.12.15)
※ 미흥식품 (합영)	수산물 채취·가공	청진, 함흥, 원산, 남포	47만달러	'97. 5.22 ( '98. 3.13)
▲신일피혁	피혁, 의류 봉제	나진·선봉	300만달러	'97. 5.22 ( '98. 3.13)
한 화 (합작)	PVC장판 제조	평양, 남포	90만달러	'97. 5.22
LG전자 /LG상사 (합영)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평양	450만달러	'97. 5.22 '97.10.14 (변경승인)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한국통신	경수로건설통신지원사업	신포	14만달러	'97.8.1 ( '97.8.1→ '01.2.5변경)
삼성전자 (합영)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	나진, 선봉	500만달러	'97. 8. 1
코오롱상사 (합작)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평양, 남포	400만달러	'97. 8. 1
신 원 (합작)	의류·봉제사업	평양	100만달러	'97. 8. 1
파라우수산 (합영)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달러	'97. 8. 1
금오식품 (합작)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달러	'97. 8. 1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나진·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나진, 선봉 (유현지구)	.	'97.10.14
대상물류 (단독투자)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나진, 선봉 (동명지구)	420만달러	'97.10.14
삼천리자전거/L G상사 (합영)	자전거 조립·생산	나진, 선봉	800만달러	'97.10.14
※태영수산/LG 상사 (합영)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65만달러	'97.10.14 ( '98. 8.28)
※한국외환 은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 설	금호	.	'97. 11.6 ( '97.11.6)
※(주)아자커뮤 니케이션(합 영)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평양, 기타 지 역	편당 25만달러	'97.11.14 ( '98. 2.18)
(주)에이스침대 (합작)	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	평양 락랑구 역	425만달러	'98. 1. 9
롯데제과 (합영)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평양	575만달러	'98. 1. 9
(주)광인 (단독투자)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부벽면 부착 광고 등)	평양, 나진, 선봉	250만달러	'98. 2. 18
안성개발 (합작)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달러	'98. 3.13
※두레마을영 농조합법인 (합작)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200만달러	'98. 4. 8 ( '98. 7.27)
※ 국제 옥수수재단 (조사·연구)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 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 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110억원 ( '99.3.25) →216억원 ( '01.6.20)	'98. 6.18 ( '98.6.18→ '99.3.25변경 '01.6.20 변경)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세원 커뮤니케이션	북한올림픽 위원회 스폰서쉽 대행		미정	'98.8.6
※(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아산 (‘99.2.25)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98.9.7)→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99.1.15)	금강산	9,583만달러 →1억33만달 러(‘99.1.15) →1억4,867만 달러 (‘99. 4.16) →1억8,739만 달러	'98. 8. 6 (‘98.9.7→ '99.1.15변경 '99.4.16변경 '00.1.8 변경 '00.9.21 변경 '01.6.23 변경)
※(주)코리아랜드 (합영)	북한부동산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	평양	60만달러	'98. 8.28 (‘98. 8.28)
▲성화국제그룹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지역내 백화점 운영	나진·선봉, 평양	190만달러	'98.9.14
▲아이엠시스템	방송용 광고제작	.	미정	'98.10.17
※ 백산실업 (합영)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 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 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달러 (남북한총투자 액: 81만달 러)	'98.10.28 (‘98.10.28)
※현대시스코,한 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 관광 및 평양 실내체육관 건설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금강산 관광 지역내, 평양	13만달러	'98.11.11 (‘98.11.11→ '00.11.20변경)
(주)해주 (합작)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 인근	299만달러	'99. 1. 8
※평화자동차 (합영)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남포	666만달러 →5,403만달 러	'99. 8. 31 (‘00. 1. 7→ '00.10.21변경)
※ 삼성전자	남북 S/W 공동개발	중국 북경	72.7만달러 →154.4만달 러	'00. 3.13 (‘00. 3.13→ '01.6.16 변경)
※ 하나비즈닷컴 (합영)	남북 프로그램 공동개발, 공동 개발단지 조성	중국 단둥	200만달러	'01. 4. 28 (‘01. 7.18)
※ 엔트랙(합영)	정보기술·공동 제품개발 협력사 업을 위한 「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운영	평양	400만달러	'01. 4. 30 (‘01. 8.22)
※ G-한신(합작)	북한내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 운영	평양	290만달러	'01. 7. 18 (‘01.10.16)
IMRI(합작)	북한내 발포성 수지 생산공장 설 립운영	평양	70만달러	'01. 10. 16
※국양해운(단독)	해상 운송사업 및 하역시설 개선 사업	남포	61.9억원	'01. 11. 21 (‘01. 11. 21)
※훈넷(합영)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평양	20만달러	'01. 12. 29 (‘01. 12. 29)

## 나. 민간주도 협력사업

### (1) 개성공단 개발사업

현대가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99년 10월 1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대의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로써 현대와 아태간에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현대는 2000년 8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9일에는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하였으며, 현대-아태간에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11월에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단개발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하고,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개성공단 예정지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2000년 12월 2일에는 개성공단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2001년 1월 16일~1월 19일간 금강산지역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개성공단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1년 9월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이 기대되었으나 전반적인 남북관계 소강국면과 맞물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의선과 개성-문산간 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이 연결될 경우 개성지역은 남한과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개성시를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용수·통신·가스 등 외부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2) 제조업분야 협력사업

2000년 이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제품 생산 및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녹십자는 2000년 9월에 준공한 혈전증 치료제 생산공장에서 반제품 시험생산을 거쳐 2001년 7월에는 반제품을 최초로 반입하였다. 2000년 3월 승인받은 삼성전자의 5개 S/W 공동개발사업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로 16개 S/W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0년 1월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우선 1단계로 자동차 수리·개조공장을 완공하였다. 2000년 10월 착공된 본공장은 2002년 3월 준공식 이후 2006년까지 약 15,000대 규모의 자동차를 조립·생산할 계획이다.

## (3) 농·어업분야

농·어업분야 경제협력사업은 인적·물적교류 유발효과가 크고,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바람직한 협력형태이나 북측의 농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제옥수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옥수수 신품종 개발 협력사업은 2001년말까지 22차례 방북하는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 임가공사업에 이어 인삼 및 잎담배 계약재배 추진을 위한 시험재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리고, 현대아산의 금강산지역 영농사업은 2000년 2월 첫 농산물을 출하한 이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잉여 생산물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0년 12월의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품의 단순교역과는 달리 협력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 다.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

### (1)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최근 수년간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 왔으나, 이에 대한 방지 노력은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임진강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향후 개성공단 등 접경지역개발에 대비해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예상되므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남북협력사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11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로 북측에 서한을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남북은 2000년 8월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용순 특사 방문(2000.9.11~14)시에는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구성,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제1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조사단 구성 및 대상, 방법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2001년 9월에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남북간 소강상태가 지속되면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2) 전력협력사업

북측은 2000년 12월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에 전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쌍방은 우선 전력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현지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전력협력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제1차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으나 남북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남북한의 전반적인 전력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후 전력협력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송전방식을 통한 50만kW 지원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실태조사만을 주장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경제여건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상황,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TRADP는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관광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UNDP가 주관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10월 두만강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회원국들은 '점진적 조화'를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남, 북, 중, 러, 몽골)와 접경 3개국위원회(북, 중, 러)를 구성하고,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두만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1년 4월 개최된 제5차 5개국위원회에서는 3단계 TRADP 사업계획(2001~2003)을 승인하면서 동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지역 협력강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 교역 및 투자활성화, 수송, 환경, 통신 등 부문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운영조직을 개혁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의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자유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 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방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지의 확산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마.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남북교류협력을 정치나 이념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로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남북한은 공통의 법·제도적 기반 없이 각각의 법제와 민간 당사자간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하였다.

남북은 두차례 경협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를 타결하고 이에 가서명하였고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에 의해 2000년 12월 16일 정식 서명되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측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합의서중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합의서는 각각 후속조치를 위한 남북간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북간의 투자사업에 있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조약방식’ 발효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회의(2001.5.22)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개 합의서안에 대한 체결동의안을 2001년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1년 12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공동규범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4개 합의서가 발효되면 남북경제협력은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협 4개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4개 합의서의 발효 및 관련 후속조치들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각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통행·통신, 산업재산권 보호, 원산지 관련 규정 등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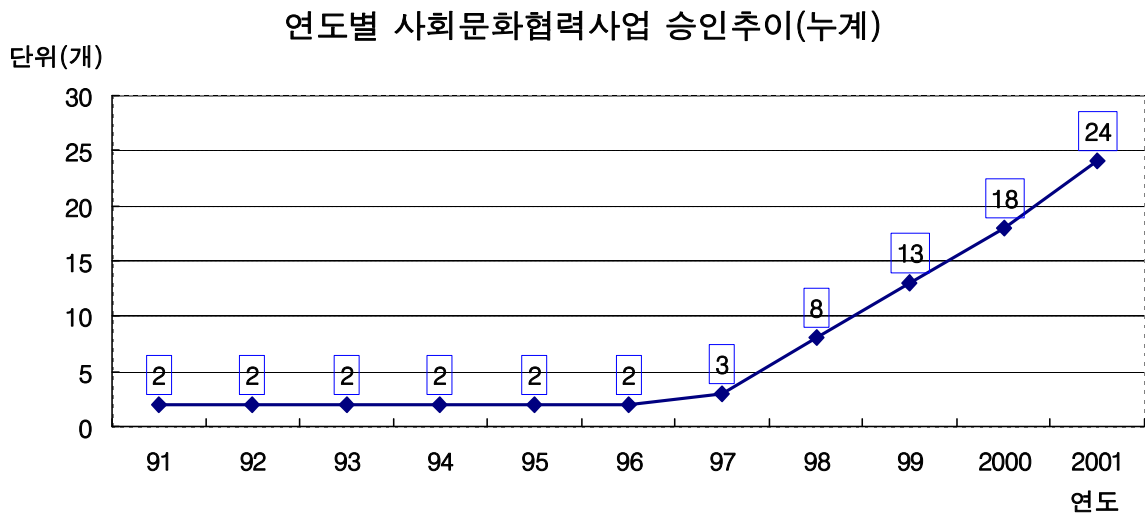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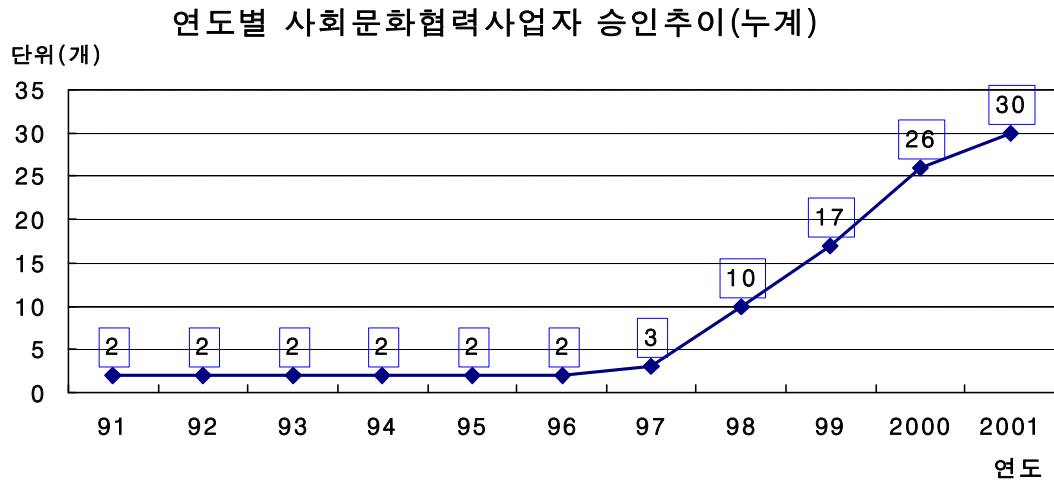
##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 가. 협력사업(자) 승인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남북단일팀 참가에 대한 최초의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30개 단체가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았다.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가 승인한 주요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1991년 2건(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제6회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1997년 1건(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1998년 7건(나진·선봉 과기대 설립·운영, 남북사진작품전 등), 1999년 7건(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등), 2000년 9건(평양교예단 서울공연,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등), 2001년에는 6건(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지원,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염원 6.15 금강산 랠리 등) 등이다.



## 나.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이래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의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과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현대측은 우선 과도한 관광대가에 대한 조정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2000년말부터 북측 아태와 협의를 시작하여 2001년 6월 8일 관광활성화 조치에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첫째, 매월 1,200만불씩 지급하던 관광대가를 관광활성화시까지 관광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관

광활성화를 위해 육로관광과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간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지정 등 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육로관광 추진을 위해 2001년 10월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에 참여(2001.6.20)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1년 12월 현재 현대와 관광공사는 자산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배분 등 사업참여방법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는 「금강」·「봉래」·「풍악」호가 차례로 매일 운항되고 「설봉」호가 추가 투입됨으로써 월 평균 15,000여명 이상이 금강산을 관광하였으나, 2001년에는 관광객의 감소와 사업주체의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선을 점차로 감축운행함에 따라 2001년 12월 현재 「설봉」호만 운항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비록 민간기업이 추진해 온 협력사업이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긴장완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와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해 온 바가 크다. 앞으로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이 실현되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설악권과의 연계관광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의 남북간 관광분야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학술분야

학술분야의 협력사업으로는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사업」이 있다.

평양과기대 건립·운영은 2001.6.5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받은 사업으로, 평양 낙랑구역에 부지 33만평 건평 2.4만평 규모로 건설되어 2003년 9월 박사원 및 4개 학부(정보과학학부, 생명과학학부, 공학부, 경영정보학부) 규모로 개교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 라. 체육 분야

체육분야의 교류는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99년부터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9년에는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제 1차 통일농구경기대회를 평양에서 개최(9.28-29)하였다. 이어서 서울에서 통일농구경기대회(1999.12.23-24)를 개최함으로써 1991년 북한 축구선수단의 남한방문 이후 8년만에 북한남녀농구선수단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도에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 자동차질주경기대회(2000.7.3-4)를 개최하여 우리측 인원 228명과 차량 47대가 참가하였으며, 현대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이 본격화되어 평양에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상주하는 한편, 건설물자, 장비 등이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입장(2000.9.15)함으로써 남북화합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2001년에는 금강산지역에서 제2회 자동차질주경기대회(7.29-31) 및 국제모터사이클 투어링이 개최(8.15)되었다.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한 자동차질주경기대회에는 우리측 인원 209명(참가선수 19팀 72명)과 차량 46대가 참가하였다. 또한 최초로 개최된 국제모터사이클투어링에는 미국·일본·독일 등 12개국 모터사이클 동호인 35명 등 총 399명이 참가하였다.

남북 당국차원에서는 2000년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이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9.15~18, 서울)에서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됨에 따라 우리측 대한태권도협회와 북한 조선태권도위원회간 판문점을 통한 전화통지문 교환방식으로 동 행사 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시도했으나, 북측이 우리측 비상경계조치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행사를 무기한 연기(10.12) 하였다. 한편, 2001년 3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 참가에 합의하였으나, 역시 북측이 준비상 이유를 내세워 단일팀 참가가 어렵다고 통보함으로써 이행되지 못했다.

앞으로 정부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북한측의 참가유도를 통해 남북체육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마. 문화·예술 분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8년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공연, 윤이상음악회 참가, 1999년의 평화친선음악회, 민족통일음악회 등 방북공연에 이어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의 대규모 남한공연이 있었고,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도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국민의 정부 이후 활성화된 문화예술교류의 맥을 이어 공연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춘향문화선양회 주최로 2월 1일 평양봉화예술극장에서 남측의 창무극 춘향전을 공연하고, 다음날인 2월 2일에는 북측에서 민족가극 춘향전을 공연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월 2일부터 9일까지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메종드 이영희가 주최한 민족옷 전시회가 있었다. 동 행사는 한복 패션쇼 2회와 한복 전시회로 이루어졌는 바, 패션쇼에는 북한 배우와 어린이가 직접 출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2001년은 미술분야의 교류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한 해였다. 동해대학교 남북교육문화교류연구소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와 함께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개최하였다. 백두대간과 독도 등의 사진 100점(남북 각 50점)을 전시한 이 행사는 평양(6.14-24)과 서울(8.14-23)에서 개최되었는 바, 평양전시회는 남측 관계자 8명이 참석하였으나 서울전시회에는 북측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2001년에는 그동안 수차례 시도되었던 애니메이션 분야의 남북합작노력이 결실을 이루었는 바, 하나로통신(주)는 북측의 삼천리총



회사와 3D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의 공동제작을 성사시켜 향후 지속적 교류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바. 언론·출판 분야

언론·출판분야의 협력사업은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조사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방북취재를 실현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1998년에 「남북통합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사업」, 2000년에 「북한문화예술자료 정보화사업」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2000년에는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언론기관 대표들과 남북언론교류협력에 관한 5개항에 합의하였다.

이후 KBS와 SBS는 각각 백두산과 평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였다.

2001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3월 MBC 여기자 2명이 방북하여 북한의 변화와 주민생활, 풍물을 취재하고 현지에서 방송하였다. 5월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 방북시에는 국내 기자 8명을 포함, 서방 70여명의 기자단이 동행·취재하였다. KBS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연인원 32명이 장기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자연, 풍물, 문화분야 방송물을 대규모로 제작하였다. 11월에는 한국방송 프로듀서연합회 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북측 방송물 제작을 협의하였다.

근래에 이루어진 남북간 공동행사는 취재진 동행을 관행화하고 있다. 2001년 5월 금강산에서 열린 2001 노동절행사, 6.15 통일토론회, 평양에서 열린 8.15 남북공동행사에는 대규모 국내기자단이 동행하여 현장상황을 다양하게 전달해 주었다.

## 사. 종교 분야

남북한간 종교교류는 각 종단·교단을 중심으로 여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평양신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2001년 1월 11일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001년 3월 28일 북한의 종교인 협의회(KCR)와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서울·평양 남북공동행사 개최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북한의 그리스도교연맹과 2001년 6월에 개최된 독일 교회의 날(6.11~17, 프랑크푸르트)에 공동 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예배」를 실시하고, 제5차 글리온회의를 2002년 상반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또 천도교 중앙총부는 2001년 6월 개최된 남북천도교 대표자회의(6.20~6.22, 평양)에서 동학사적지 공동조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등 상호교류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조선카톨릭교 협회와 함께 한겨레성찬제, 안중근세미나 등을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평양에서 공동개최하였다.

#### 아. 남북공동행사

2000년 10월 노동당창건행사 참관을 계기로 2001년에는 대규모 남북공동행사를 통한 남북주민들간 접촉이 확대되고 부문별 교류가 확대되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남측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북측의 직업총동맹과 5.1 남북공동행사(금강산, 597명)를 개최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노동계간의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6.15 민족통일대토론회(금강산, 422명)가 개최되어 민간통일단체, 노동계, 여성계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남북의 단체별, 계층별 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상호간의 의지를 확

인하였다.

또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남측의 전국농민회연합회와 북측의 농업근로자 동맹간에 남북농민통일대회(금강산, 664명)가 개최되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농민들의 상호교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8.15 남북공동행사(평양, 337명)가 개최되었다. 행사중에 참가단 일부가 방북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개·폐회식에 참석했고 만경대 참관시 방명록에 서명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어 대내적 갈등이 유발되었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적극 실천 및 민간급 교류 사업 활성화 추진을 합의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정부는 8.15 남북공동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한 차원 높게 성숙·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2001.12.31 현재)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한탁구협회	북한탁구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1991.4.24~5.6)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일본)	7억 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 3.21 (1991. 3.21)
※대한올림픽위원회	북한올림픽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1991.5.27~6.4)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포르투갈)	1억 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 5. 1 (1991. 5. 1)
※통일문화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달러	1997.12.10 (1997.12.10)
※연변과기대 후원회→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1999.6.29)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진 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영 (나진·선봉)	500만달러	1998 .1. 9 (1998. 6. 5)
문화방송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60만달러	1998. 3.13
※한민족복지재단 (합영)	라선경제 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240만달러	1998. 4. 8 (1998. 6. 5)
※스포츠 아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달러	1998. 4. 29 (1998. 4.29)
※한국사진 학회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평양) 및 사진 집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1998. 4.29 (1998. 4.29)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구소(합영)	금강산국제그룹 (회장:박경운)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1998. 5. 11 (1998. 6.20)
우인방커뮤니케이션	조선해외동포원 호위원회	북한 명산·역사적 명승지 탐방관 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1998. 8. 6
※우인방커뮤니케이션/ 한국자동차경주 협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แรלי	100만달러	1999. 2. 9 (1999.11.11)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주)CNA 코리아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19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 양·서울공연	100만달러	1999. 3.25 (1999. 4.16)
MBC 프로덕션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CD 남북공동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	68만달러	1999. 5. 12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 진사업	미 정	1999. 7. 21
※ SN 21 엔터프라이즈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60만달러	1999. 8. 5 (1999. 8. 5)
※(주)현대 이산·현대건설 (2000.3.8) 현대자동차등 13개사(추가) (2000.7.4)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3,420달러 (남북한총투자 액 :5,750만달러)	1999. 9. 2 (1999.9.20→ 2000. 3. 8 변경승인, 2000. 7. 4 변경승인)
※(주)계명 프로덕션	조선예술 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달러	1999. 9. 22 (1999. 9.22)
※(주)네오비전	조선백호7 무역회사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50만달러	2000. 2. 3 (2000. 2. 3)
평화의 숲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종자· 묘목·장비 지원	4억원	2000.4.12
기 독 교 대 한 감리회 서부연회	조선기독교도 연맹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60만달러	2000.5.20 (2001. 1.12)
※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550만불	2000. 5.23 (2000. 5.23)
※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 구소(단독)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50만불	2000. 7.14 (2000. 7.14)
※ (주)시스젠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 업정보에 대한 국내 미리싸이 트 개설 운영	60만불	2000. 9. 1 (2000. 9. 1)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100만달러	2000. 10.14
(주) 야미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미정	2000. 11.29
※한국문화재단	금강산가극단	금강산 가극단 한국 방문 공연	1천만엔	2000. 11.29 (2000.11.29)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사)춘양문화선양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60만불	2001. 1.12 (2001. 1.12)
※(주)하나로통신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19만불	2001. 3.23 (2001. 3.23)
※(사)동북아 교육문화협력 재단	교육성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400억원	2001. 6. 5 (2001. 6. 5)
※남북교육문화 교류연구소 (동해대학교)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9만불	2001. 6. 7 (2001. 6. 7)
※우인방커뮤니케이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염원 6.15금강산 랠리	100만불	2001. 7.25 (2001. 7.25)

##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맞도록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관한규정」 등 5개의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교류협력 관련 규제의 70%를 정비(총 규제 40건 중 14건 폐지, 15건 개선)하여 민간기업·단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 신청서류 중 환경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승인대상품목을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왕래자의 휴대품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험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SOC 확충지원 등으로 남북경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경험 자금 수요도 증대됨에 따라 2000년 11월 대출비율, 대출조건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하였다.



2001년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간의 법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우선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2001.10.31 공포)은 남북교류협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류협력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간의 법제운용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남북한 왕래

- 현행 “1년 6개월 이내의 방문기간”을 “3년 이내의 방문유효기간”으로 연장
  -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방북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
  -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원진술서에 갈음
- 수시방북절차 간소화
  - 수시방북증명서의 경우에도 매 귀환시마다 증명서를 반납하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하여 수시방북자가 귀환·방북시마다 증명서를 반납·재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수시방북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사회문화·인도지원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법제25조(협조요청)를 포괄적 근거로 삼아 징구하던 접촉·방북결과보고서의 제출 근거 및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

### 북한주민접촉

- 북한주민접촉은 3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
  - 유효기간(3년이내)을 정하여 기간내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현재의 운용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접촉은 승인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 협력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 “북한당국의 확인서”를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까지 확대
  -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등이 발급한 확인서를 구비할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고, 이러한 기관을 상대방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따로 당국의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간소화

아울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법률·시행령과의 체계를 완비하고, 투명성 있는 절차와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하위 법령체계를 이루고 있는 고시·훈령·지침 등을 개정하여 대북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남북협력기금 관련 2개 지침과 남북간 선박운행 및 교역과 관련한 2개 고시를 제·개정하였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은 시중금리의 하향 추세, 남북경협의 불확실성, 경협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은 남북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기금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를 반출승인품목에 신설하면서 종전에는 '도서'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전자우편, 전자출판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 하였고, 국내외 농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반입 제한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을 통해 남북한 간 선박의 안정적 운항을 도모하고, 국적선사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선박운행 승인기준을 제시하였다.

**< 2001년 지침 및 고시 제·개정 주요 내용 >**

**< 「경제교류협력 기금지원지침」 개정내용 >**

**고정금리(연6%) ⇒ 변동금리(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과 연동)**

- 정책자금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을 대출금리로 설정, 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기금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소요자금의 60% ⇒ 소요자금의 70%(“우선지원대상”은 소요자금의 80%)로 대출비율 상향조정
- 대북 경험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일반 수출입거래에 대한 금융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출비율을 조정, 특히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조치 부여 반출자금 상환기간을 제품 반입후 3개월 ⇒ 6개월로 연장
- 물품을 반출하고 대응물자로 상환받거나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위탁가공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판매하여 현금 수령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
- \* 단, 현금으로 상환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대금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상환

**신용대출기준을 「차주별」, 「개별대출별」 신용한도 ⇒ 「차주별」 신용한도로 단일화**

- 「차주별」, 「개별대출별」 신용한도의 중복적용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
-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장기신용등급 미보유 기업」의 신용한도를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의 신용한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

**< 「사회문화협력사업 기금지원지침」 제정내용 >**

**지원대상여부의 구분**

- 당국간 합의사업, 정기적 또는 상호교환하여 시행하는 사업, 국제체육행사에 남북단일팀 참가, 의료·보건 등 사업, 청소년·학생대상 사업 등 “우선지원대상” 사업의 구체적 기준 제시
-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은 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의 구체적 기준 제시

원칙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50% 범위내로 하되, “우선지원대상” 사업의 경우 70%까지 허용

- 『총사업비』 산정에 있어 예상수익금, 접대비 등 간접비용, 기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등은 제외 자금집행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자체 조달자금을 기금보다 우선 사용토록 하고, 기금은 원칙적으로 승인된 비목별로 사용토록 하며, 자금집행계획 수립과 자금출납장부 기록 및 회계증빙서류 제출 등 의무화

### <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절차 고시」 개정내용 >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조정

- 남북교역 증대 및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제한이 필요한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분류(냉동계 등 수산물, 들깨 등 농산물)
- 연근해 생산량이 적은 수산물과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 증량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삭제(냉동홍어 등 수산물, 감귤 등 농산물)
- 기존의 ‘도서’ 를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로 개정

#### 반출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신설

-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컴퓨터’ 신설

### < 「선박운행승인 기준 고시」 제정내용 >

#### 부정기운행 승인기준

-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선박운행승인신청인과 북한측의 책임 있는 기관간 체결되어야 할 것
- 급박한 운항일정 등의 사유로 북한측으로부터 계약서를 갈음하는 입항허가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입항허가서에 선박운행승인신청인, 수송장비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정기운행 승인기준

- 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부정기운행과 동일
- 선박은 정기운행에 적합한 규모·구조·장비 등을 갖추 것
-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정기적으로 4회 이상 선박을 운행한 자로서, 부정기운행 기간 중에 경고·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대리신청 승인기준

-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경유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
-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한편, 국회에서는 2001년 10월이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되어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원 발의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인사의 참여,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사용시 국회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정부부처간의 협의기구이고 정당추천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2001년부터 기금집행에 대한 사전보고를 충실히 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현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과 실익은 적다고 보고 있으나, 의원입법 추진 취지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사항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련 법제가 교류협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 2.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가. 남북협력기금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1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1조 1,350억원, 민간출연금 22억원, 운용수익금 2,03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147억원 등 총 2조 553억원이 조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1998~1999년)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 들어 1,00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2001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기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출연금 규모가 대폭 확충되어 5,000억원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출연금은 2001년까지 22억원이 출연되었으며, 특히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2000년 6억원, 2001년 11억원이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한 침목기증 용도 등으로 출연됨으로써 민간출연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 북한에 쌀 15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경수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용역비로 600만달러를 지원하

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474만달러를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톤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160억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6.5만톤을 지원하는 데 179억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2000년에는 경수로 본공사 착공에 따른 경수로사업 대출 3,259억원,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식량차관 867억원, 비료 30만톤 지원에 944억원이 집행되었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146억원,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및 평양교예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지원에 23억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에 23억 등이 집행되었다.

#### <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공자예수금	계
1991	25,000	-	237	-	25,237
1992	40,000	-	5,118	-	45,118
1993	40,000	3	4,778	-	44,781
1994	40,000	1	9,386	-	49,387
1995	240,000	119	14,589	-	254,708
1996	100,000	132	18,410	-	118,542
1997	50,000	288	27,873	-	78,161
1998	-	-	40,280	-	40,280
1999	-	3	23,013	149,831	172,847
2000	100,000	541	30,118	254,852	385,786
2001	500,000	1,080	29,406	310,000	840,486
계	1,135,000	2,167	203,104	714,683	2,055,335

\*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 나. 2001년도 기금 운용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2001년의 기금집행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료 20만톤 지원사업에 639억원, 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으로 190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899억원, 제2차, 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9억원, 대



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8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4억원, 6.15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 경비지원에 3억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KEDO 경수로사업 대출 2,555억원, 경협추진기업에 대해 경협자금 대출 450억원, 교역자금 대출 11억원 등 5,54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기금집행 내역의 추이를 보면,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1999년까지는 기금을 비료, 식량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제한하여 왔었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사업지원 이외에 인적왕래와 사회문화협력사업에도 기금지원이 확대되었을 뿐만아니라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자금도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식량차관 제공, 비료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지원 이외에도 남북한 경의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연결 사업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00년말 국회의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의결시 부대의견에 따른 것으로, 2001년 1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옥수수 10만톤 대북지원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12월 제주도 감귤 등 농산물 대북지원 관련 수송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 9건, 2,776억원의 집행에 대해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개정 및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대북경협사업과 단체의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지원에 있어서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01.12.31 기준,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조성 및 지출	조 성 (A)	정부출연	11,350
		민간출연	21
		공자기금예수금	7,147
		운용수익	2,031
		기타수입금	4
		계	<b>20,553</b>
	지 출 (B)	경상지원	5,755
		운용비용	776
		계	<b>6,531</b>
	순조성액(A-B)		<b>14,022</b>
보유 자산	투자자산	대출잔액(C)	7,28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400
	유동자산	경수로계정*	382
		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	4,460
	보유자산액(*현보유자금)		<b>14,022(6,242)</b>

※ 현보유자금 6,242억원 = 조성액(A) 20,553억원 - 사용액(B+C) 14,311억원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경상지원 실적 >**

(단위:백만원)

지 원 내 역	금 액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49,995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39,855
○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소요경비	253
○ 6.15남북공동선언기념 남북공동사진전	102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22,296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358
○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운영 지원	25
○ 제2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169
○ 제3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646
○ 제4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100
○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3,843
○ 대북 아동용 동내의 지원	4,594
○ 대북 농수산물지원관련 수송비 지원	2,419
○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600
○ 대북 비료 20만톤 지원	63,863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58,102
<b>합 계</b>	<b>247,220</b>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대출실적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대 출 액	비 고
○ 경수로본공사비대출	300,284	조선무역은행 9개 기업 및 관광공사
○ 대북 식량차관 대출	18,955	
○ 교역및경제협력자금 대출	46,072	
<b>계</b>	<b>365,311</b>	

###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8조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제3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농림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원 차장으로서 안전에 따라 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협의회의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관련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지원 등이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 협의회의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도에는 총 13회의 협의회를 개최(직접개최 5회, 서면개최 8회)하여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심의·의결하기도 하였는 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등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 2001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

회차	일 자	안	
		의안 번호	의 안
76	2. 8	129 130 131 132 133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li> <li>○ 2001년 경의선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li> <li>○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li> <li>○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li> <li>○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li> <li>○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 개정(안)</li> </ul>
77	3.12	135 136 137 138 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동내의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li> <li>○ 대북 농산물 지원 관련 수송비 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li> <li>○ 남북 전력협력 관련 추진 현황</li> <li>○ 임진강 남북공동 수해방지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li> <li>○ WHO를 통한 대북방역 지원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li> </ul>
78	4.18	140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li> <li>○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li> </ul>
79	4.26	142	○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0	5.14	143	○ 대북 위탁가공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81	6. 9	144 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남포간 선박운항 차질 피해업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li> <li>○ 대북 위탁가공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li> </ul>
82	6.29	146 147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li> <li>○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li> <li>○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승인</li> </ul>
83	7.25	149	○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4	8.17	150	○ 서전어패럴(주)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85	9.17	151	○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6	10.10	152	○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협력기금지원
87	12.13	153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농산물 대북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88	12.20	154 155 156 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개정(안)</li> <li>○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안)</li> <li>○ 남북한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안)</li> <li>○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안)</li> </ul>

##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 제1절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국토분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바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흠어진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명기함으로써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수많은 남북이산가족들에게 헤어진 혈육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2001년 3월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와 면회소 설치 등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있어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차원에서의 해결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001년에는 한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2000년 12월의 일정이 조정되어 2001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었다.

한편 2001년 9월에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2001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방문단의 최종명단을 교환한 이후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해 옴으로써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다.

### 가. 제3차 방문단 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2000.9.20~23)에서 2000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그후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2001.1.29~31)에서 2001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환하기로 일정이 조정되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인선위원회」에서는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의 원칙 아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2001년 1월 12일 후보자 300명을 컴퓨터로 공개 추첨하였으며, 이들 중 사망자나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북측에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할 200명을 선정하였다.

2001년 2월 16일 남과 북은 생사·주소를 확인할 200명의 명단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단시일 내에 198명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였으며, 북측은 우리측 의뢰자 200명 중 138명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였다. 우리측은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최종방문자 100명을 선정하고, 2001년 2월 17일 남북간에 최종 방문단 명단을 교환하였다.

방문단 구성을 연령별, 가족관계별, 출신지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99~90세	89~80세	79~70세	69~60세	계
우리측	4	36	59	1	100
북 측	-	5	62	33	100
계	4	41	121	34	200
비율(%)	2.0	20.5	60.5	17.0	100

<가족관계별>

(단위 : 명)

가족관계	3촌이상	형제자매	처·자식	부모	계
우리측	14	45	40	1	100
북 측	-	69	19	12	100
계	14	114	59	13	200
비율(%)	7.0	57.0	29.5	6.5	100

<출신지별>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기타	계
우리측	25	15	22	1	14	-	8	8	4	1	-	-	2	-	-	-	100
북 측	-	-	-	-	-	12	21	4	10	8	11	4	14	12	2	2	100
계	25	15	22	1	14	12	29	13	14	9	11	4	16	12	2	2	200
비율(%)	12.5	7.5	11.0	0.5	7.0	6.0	14.5	6.5	7.0	4.5	5.5	2.0	8.0	6.0	1.0	1.0	100

<성 별>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우리측	72	28	100
북 측	91	9	100
계	163	37	200
비 율(%)	81.5	18.5	100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는 단체상봉, 개별상봉 및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단체상봉은 방문단 교환 첫날 약 2시간 동안 실시(우리측 : 서울 센트럴시티, 북측 : 평양 고려호텔)되었으며, 개별상봉은 둘째날 숙소(우리측 : 롯데월드호텔, 북측 : 고려호텔)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약 4시간 동안 가족·친척끼리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동석 석식을 실시(우리측 : 롯데월드호텔, 북측 : 고려호텔)하였으며, 1·2차 상봉 때와는 달리 우리측은 가족동석 중식을 약 1시간 반 동안 실시하여 가족상봉시간을 확대하였다.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일 정	· 2박3일(2.26~28)
상봉 횟수	·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2회, 송별상봉 1회, 동석 식사 2회
참 관	· 창덕궁(서울) · 만수대 창작사, 평양지하철, 동명왕릉, 평양교예단 공연(평양)
상봉 가족수	· 평양 방문자 100명이 재북가족 254명 상봉(1인 평균 2.5명) · 서울 방문자 100명이 재남가족 770여명 상봉(1인 평균 7~8명)
우리측 비용 (남북협력기금)	· 6.5억원
기 타	· 방북단에 국군포로가족 2명, 남북자 가족 1명 포함

#### 나. 제4차 방문단 교환 추진

2001년 3월 북측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부터 남북관계는 일시적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4월초로 예정되었던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도 연기되어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30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는 총재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제기하여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1일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 후보자 300명을 선정하였다. 우리측이 방문단 인원을 새로 선정한데 비해 북측은 그동안 세차례의 방문단 교환추진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되었으나 방문단에 포함되지 못했던 인원중에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우리측은 후보자중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생사·주소 확인 의뢰자 200명을 확정하고 9월 26일 남북간에 그 명단을 교환하였다. 10월 8일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 전원에 대해 남측 가족의 생사·주소가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였고, 북측은 우리측이 의뢰한 200명중 128명의 생사·주소가 확인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생사·주소 확인결과를 토대로 가족관계와 연령을 기준으로 방문단 100명을 선정하여 10월 9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방문단 인원 확정작업과 함께 방문단 교환 세부절차에 합의하고 10월 12일 관련 문건을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는 거의 마무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 10월 12일 북측은 갑자기 미국 9.11 테러로 인한 우리측의 경계태세강화를 구실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우리측은 당일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통일부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각각 보내 이산가족방문단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는 북측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합의사항은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10월 1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우리측 방문단과 남측 상봉가족대표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충격과 당혹감에 쌓인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방문단 교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남북간에 합의한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11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합의사항 이행 일정의 재조정에 노력하였으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12월 11일 대한적십자사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대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방문단 교환은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함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도 이루어졌다.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생사확인 2000년 9월과 10월에 각 100명씩 2회, 서신교환은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실시하고, 서신교환은 3월에 하기로 일정을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생사·주소 확인이 2001년 1월 29일에 이루어져 1,199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하였으며, 제2차 생사·주소 확인이 2001년 2월 23일에 이루어져 1,068명이 생사·주소를 확인하였다. 3월 15일에는 남북 각 300명을 대상으로 편지와 함께 1~2매의 가족사진을 동봉한 서신을 교환하였다.

## 가. 생사·주소 확인

### (1) 제1차 생사·주소 확인

2000년 9월 26일 인선위원회에서 제1차 생사·주소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1·2차 이산가족방문단 최종 탈락자(90명)와 신청인 중 고령자 순(10명)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 1월 29일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던 금강산에서 남북간에 생사·주소 확인 회보서를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100명 중 99명에 대한 재남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을 하였다. 이중 98명은 생존자가 있었으며 1명은 사망 등으로 생존자가 없었다. 북측은 우리측이 의뢰한 재북가족 100명 중 86명에 대한 북측 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을 하였다. 이중 67명은 생존자가 있었으나, 19명은 생존자가 없었다. 1차 생사확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생사확인자>

(단위 : 명)

구 분	생사 확인자		생사미확인자	계
	생존	사망 등		
우리측 의뢰자	67	19	14	100
북 측 의뢰자	98	1	1	100
계	165	20	15	200
비율(%)	82.5	10.0	7.5	100

### <출신지별>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소계	미확인	계
우리측 의뢰자	19	12	25	4	9	-	8	6	1	1	-	-	-	-	1	86	14	100
북 측 의뢰자	-	-	-	-	-	14	13	5	14	4	7	14	14	10	1	99	1	100
계	19	12	25	4	9	14	21	11	15	5	7	14	14	10	1	185	15	200
비율(%)	9.5	6.0	12.5	2.0	4.5	7.0	10.5	5.5	7.5	2.5	3.5	7.0	7.0	5.0	0.5	92.5	7.5	100

### <가족관계별>

(단위 : 명)

가족관계	3촌이상	형제자매	처·자식	부모	계
우리측 회보자	93	316	17	7	433
북 측 회보자	36	66	48	3	153
계	129	382	65	10	586
비율(%)	22.0	65.2	11.1	1.7	100

한편, 우리측이 의뢰한 재북가족 총 506명에 대해 북측이 회보한 인원은 총 504명이었으며, 생존자 153명, 사망자 222명, 확인불능자 129명이었다. 북측이 의뢰한 재남가족 총 483명에 대해 우리측이 회보한 인원은 총 654명이었으며, 생존자 433명, 사망자 206명, 확인불능자 15명이었다. 이 중에는 북측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측이 확인해 준 추가 인원 177명이 포함되어 있다.

## (2) 제2차 생사·주소 확인

2000년 10월 13일 인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제2차 생사·주소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첫째,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시 생사확인 의뢰자 200명 선정과정에서 신체검사 및 실사결과에 따라 제외된 자 둘째,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 선정과정에서의 탈락자, 셋째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고령자 순이었다.

남북 쌍방은 2001년 2월 23일 각기 100명의 제2차 생사·주소 확인 회보서를 상호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100명 중 92명에 대한 재남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였다. 이중 91명은 재남가족 중 생존자가 있었으나, 1명은 사망 등으로 생존자가 없었다. 북측은 우리측이 의뢰한 100명 중 79명에 대한 재북가족의 생사·주소를 확인을 하였다. 이중 60명은 재북가족 중 생존자가 있었으나, 19명은 생존자가 없었다. 제2차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생사확인자>

(단위 : 명)

구 분	생사확인자		생사미확인자	계
	생존	사망 등		
우리측 의뢰자	60	19	21	100
북 측 의뢰자	91	1	8	100
계	151	20	29	200
비율(%)	75.5	10.0	14.5	100

#### <출신지별>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소계	미확인	계
우리측 의뢰자	15	7	12	4	9	2	5	5	8	2	3	-	4	1	2	79	21	100
북측 의뢰자	-	-	-	-	-	15	19	8	14	5	1	7	12	8	3	92	8	100
계	15	7	12	4	9	17	24	13	22	7	4	7	16	9	5	171	29	200
비율(%)	7.5	3.5	6.0	2.0	4.5	8.5	12.0	6.5	11.0	3.5	2.0	3.5	8.0	4.5	2.5	85.5	14.5	100

#### <가족관계별 생존자>

(단위 : 명)

가족관계	3촌이상	형제자매	처·자식	부모	계
우리측 회보자	95	245	14	2	356
북측 회보자	39	39	53	-	131
계	134	284	67	2	487
비율(%)	27.5	58.3	13.8	0.4	100

한편, 우리측이 생사확인을 의뢰한 재북가족 총 389명에 대해 북측이 회보한 인원은 추가확인 인원 27명을 포함하여 총 416명이었으며, 생존자 131명, 사망자 160명, 확인불능자 125명이었다. 북측이 의뢰한 재남가족 총 580명에 대해 우리측이 회보한 인원은 추가확인 인원 98명을 포함하여 총 678명이었으며, 생존자 356명, 사망자 250명, 확인불능자 72명이었다.

#### 나. 서신교환

2001년 2월 24일 인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신교환 대상자 선정기준은 1·2차 생사·주소 확인을 통해 재북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이산가족이 1순위, 1·2·3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로 재북가족의 생존을



확인하였으나 최종 방문단 선정시 탈락한 사람이 2순위, 이산가족방문단으로 재북가족을 상봉한 사람이 3순위 등이었다.

#### <서신교환 주요내용>

구 분	선정 결과	계
1순위	· 1차 생사·주소 확인자 63명 · 2차 생사·주소 확인자 59명	122명
2순위	· 1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24명 · 2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24명 · 3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16명	64명
3순위	· 가족관계·연장자 순 114명	114명
계	300명	300명

우리측의 서신발신자는 70대와 80대를 중심으로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북측은 60대와 70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신교환의 결과를 연령별, 거주지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령별>

(단위 : 명)

구분	99~90세	89~80세	79~70세	69~60세	계
우리측	60	102	115	23	300
북 측	-	13	162	125	300
계	60	115	277	148	600
비율(%)	10.0	19.2	46.2	24.6	100

#### <거주지별>

(단위 : 명)

구분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우리측	-	-	-	-	-	88	110	19	15	26	4	5	6	22	5	300
북측	81	42	117	-	34	-	-	26	-	-	-	-	-	-	-	300
계	81	42	117	-	34	88	110	45	15	26	4	5	6	22	5	600
비율(%)	13.5	7.0	19.5	-	5.7	14.7	18.3	7.5	2.5	4.3	0.7	0.8	1.0	3.7	0.8	100

### 3. 이산가족문제 해결 기반 구축

#### 가. 제3국을 통한 교류 지원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1988년 「7·7선언」 이후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2000년 3월 2일 당국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 「이산가족교류 촉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이산가족 1세대 전체로 확대되는 등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류경비 지원도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교류지속경비 4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경비지원 회수도 종전의 1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되었다.

#### <연도별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생사확인	41	1,720	89	4,030	119	7,490	83	7,645	332	20,885
상봉	55	5,024	142	12,240	91	15,740	120	24,000	408	57,004
교류지속					104	4,695	76	3,260	180	7,915
합계	96	6,744	231	16,270	314	27,925	279	34,905	920	85,804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6,145건으로 이중 15.7%인 2,527명이 제3국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771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총 15건이 성사되었다. 2001년 한해 동안에는 생사 확인 208건, 서신교환 579건, 제3국상봉 165건, 방북상봉 5건이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성사 실태를 살펴보면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의 협조, 국내 민간주선단체의 주선, 언론매체 활용, 국제행사 참가시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 <접촉방법별 성사 현황>

(1989.6.12~2001.12.31)

구 분		해외동포	주선단체	언론매체	국제행사 등	무기재	계
생사확인 (건)	2001년	96	63	4	44	1	208
	1989~2001	1683	450	126	109	159	2,527
비 율(%)	2001년	46.2	30.3	1.9	21.2	0.4	100
	1989~2001	66.6	17.8	5.0	4.3	6.3	100
제3국상봉 (건)	2001년	84	33	1	39	8	165
	1989~2001	565	97	24	75	10	771
비 율(%)	2001년	50.9	20.0	0.6	23.6	4.9	100
	1989~2001	73.3	12.6	3.1	9.7	1.3	100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 <중개지역별 성사 현황>

(1989.6.12~2001.12.31)

구 분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기타	무기재	계
생사확인	2001년	187	9	6	2	4	0	208
	1989~2001	1,748	378	123	59	62	157	2,527
비 율(%)	2001년	89.9	4.3	2.9	1.0	1.9	0	100
	1989~2001	69.2	14.9	4.9	2.3	2.5	6.2	100
제3국상봉	2001년	165	-	-	-	-	-	165
	1989~2001	747	-	18	-	6	-	771
비 율(%)	2001년	100	0	0	0	0	0	100
	1989~2001	96.9	0	2.3	0	0.8	0	100

교류가 성사된 재북가족의 거주지역은 함경도가 1,631건(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산가족교류 거점인 중국 연길 지방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의 출신지별 성사 현황>

(1989.6.12~2001.12.31)

구 분	함경	평안	황해	양강	자강	강원	평양	개성	남포	기타	계
생사확인	1,184	552	319	73	34	49	175	35	37	69	2,527
비율(%)	47	22	13	3	1	2	7	1	1	3	100
상봉	447	108	55	65	8	10	37	2	13	41	786
비율(%)	57	14	7	8	1	1	5	-	2	5	100

제3국을 통한 교류는 이산가족들이 해외에 연고가 있고, 상당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류당사자들의 신분 안전 등의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비교적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 또는 단체들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하였으며, 2001년말 현재 10여개의 이산가족 교류주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나. 이산가족 행정서비스 개선

1998년 12월부터 정부는 이산가족자료의 영구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인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1년 5월부터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의 등록자료를 수시 점검하고, 교류현황자료를 전산입력 하는 등 기존자료에 대한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8월에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관리체계 정비작업을 통해 전산보안관리자 지정 및 처리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10월에는 인터넷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사용자가 직접 편지사연을 소개하고 등록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찾기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민원서식과 온라인 신청서 변경·삭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이 직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사 메뉴를 통합하고 게재내용을 갱신하는 등 기능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이산가족통합센터에 등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산가족찾기를 시행하는 서비스(Internal Matching) 기능을 대한적십자사의 심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는 남북 이산가족간의 만남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간의 만남도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 4. 납북자 등 문제 해결 노력

2001년말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국군포로 457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납북자·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다. 또한, 북측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다.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시 3명의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이 포함되어 상봉을 실현시킨 바 있으며,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시에도 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1년 4월 24일 통일부 직제개편시 납북자 및 국군포로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이산가족 1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북측을 계속 설득해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5. 이산가족교류 현황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2001년까지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생사확인 3,025건, 서신교환 3,246건, 제3국 상봉 608건, 방북·방남 상봉 621건이 성사되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교류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계
민 간 차 원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2,527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6,716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771
	방북상봉										1	5	4	5	15
당 국 차 원	생사확인	65											792	744	1,601
	서신교환												39	623	662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40

< 2000-2001년 교류 현황 >

(단위 : 건)

구분	이산가족 찾기신청	생사확인	서신교환	제3국상봉	방북상봉	방남상봉
2000	84,757	1,239	1,023	148	209	201
2001	5,116	952	1,202	165	105	100

## 제2절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와 함께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방향에서 비료지원 등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같은 대북지원은 무엇보다도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함께 남북화해협력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의 의미를 지닌다. 대북지원은 북한당국과 주민 모두 시야에 넣고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대남 적대감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 가. 식량 및 의료 등의 지원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매년 100만~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소련 및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경제권의 축소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북한의 경제와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1995년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때부터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1995년 5월 26일 통일원장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



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쌀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베이징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1,850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하나로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 농업개발협력 및 경험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이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IMF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기구의 대북지원계획 참여 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8년에는 WFP를 통해 총 1,100만달러 상당의 옥수수 3만톤과 밀가루 1만톤을 지원하였다. 2000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참여하여 2000년 3월 8일 북한지역 전염병 퇴치를 위해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한 50만달러 상당의 방역·보건의료 지원에 참여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WHO는 한국산 치료약제에 대한 사전 품질평가 미비로 현물지원이 곤란하다며 우리측에 현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00.4.13), 우리측은 WHO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측이 우리 의약품 및 장비를 지원받을 의사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2001.1)

이에 따라 정부는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2종, 모기 방제장비 및 진단장비 등 지원물자를 2001년 5월 1일 인천을 통해 북한내 WHO사무소에 전달하였다. 46만달러에 달하는 말라리아 방역지원으로 북한내 말라리아 환자 및 위험지역의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우리측 지역에서도 말라리아 방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0년 9월 8일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식량차관 요청을 계기로 50만톤 식량차관 제공과는 별도로 외국산 옥

수수 10만톤을 WFP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지원키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북한의 악화된 식량사정과 그동안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속적인 대북식량지원 참여 요청,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유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옥수수를 구입하여 2001년 3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6항차에 걸쳐 북측 항구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옥수수 포대에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우리가 지원하는 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었다. 옥수수 지원경비는 구입·수송비와 포대구입 등 부대경비 및 WFP 행정비 등을 포함하여 총 1,725달러(223억원)가 소요되었다.

한편, 2000년 3월 30일 주식회사 「태창」은 북측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2천만벌의 내의를 수출하고, 대금(1억6천만달러)은 7년거치 3년 균등상환키로 「연불수출입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태창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이 계약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태창이 이미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한 내의가 약 500만벌에 이름으로써 하청업체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일과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물론 국정감사 및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는 종교계, 시민단체 중심으로 「북녘동포 내복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며,(2000.12.20) 한적을 비롯한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전북, 부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하여 모금운동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중소하청업체의 도산 위기 등 그 피해가 막대하고 국회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내의가 북한주민 특히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의 지원품목으로 적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아동용 내의 150만벌(368만달러 상당)을 구매하여 2001년 3월 20일 지원하였다. 한편 북측은 분배결과 통보를 통해 지원된 아동용 내의를 북한 전역 154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하였음을 알려왔다.

## 나. 비료지원

정부는 1999년 1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그간의 대북지원을 평가하고, 향후 대북지원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긴급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 차원에서 비료·종자·농약지원 등을 통한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 등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지원의 효과성·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는 또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함께 대북지원을 그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99년 비료 15.5만톤을 지원하였으며 여기에는 남북협력기금 339억원과 대한적십자사의 국민모금액 123억원 등 총 462억여원이 소요되었다.

2000년에 들어 김대중 대통령은 1월 3일 “새천년 신년사”와 1월 26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성의껏 제공하고 2000년에도 비료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정신으로 실질협력관계를 넓혀가는 데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우리측이 힘닿는 대로 북한을 도울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2000년 5월 6일 비료 20만톤을 북한에 지원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월 10일 제6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비료 20만톤의 구입·수송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기로 하고, 비료구매·수송·인도인수 등 그 실행은 그간의 남북간 대북지원 관례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위임기로 결정하였다.

비료 20만톤은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8항차의 해로수송을 통해, 우리측 여수·울산·군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11만톤)·해주항(6만톤)·원산항(1.5만톤)·홍남항(1만톤)·청진항(0.5만톤)으로 각각 전달되었다. 종류별로는 복합비료 10만톤·요소비료 6만톤·이삭거름 3만톤·유안비료 1만톤이 각각 지원되었다. 비료 20만톤 지원에는 비료구매·수송비·기타 부대비용 등 총 635.7억여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지원한 밀거름용 비료 20만톤의 식량증산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웃거름용 비료의 추가시비 필요성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 그리고 북한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웃거름용 비료 10만톤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추가지원 비료 10만톤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4항차의 해로수송을 통해, 여수·울산·군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4.64만톤)·해주항(2.33만톤)·원산항(1만톤)·홍남항(1만톤)·청진항(1.03만톤)으로 각각 전달되었으며, 비종별로는 요소비료 4만톤·복합비료 3.6만톤·이삭거름 1.9만톤·유안비료 0.5만톤이 각각 지원되었다. 10만톤 지원시 비료구매·수송비·기타 부대비용 등 총 307.9억원이 소요되었다.

2001년 들어 4월 3일 UNDP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농개시를 위해 시급히 요소비료 35만톤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4월 19일에는 북한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요소비료 20만톤의 조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6일 제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료 20만톤의 지원을 국내수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북측의 시비적기에 맞추어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기로 하고, 5월 1일부터 6월 9일에 걸쳐 전달되었다.

지원규모는 북측의 비료부족량 및 우리의 지원규모와 지원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만톤으로 결정하였으며, 종류별 규모는 복합비료 11만톤, 요소비료 8만톤, 유안비료 1만톤으로 구성하였다. 우리측 선적항은 예년과 같이 3개 항이었으나, 북측의 하역항은 기존 5개에 송림항을 추가한 6개 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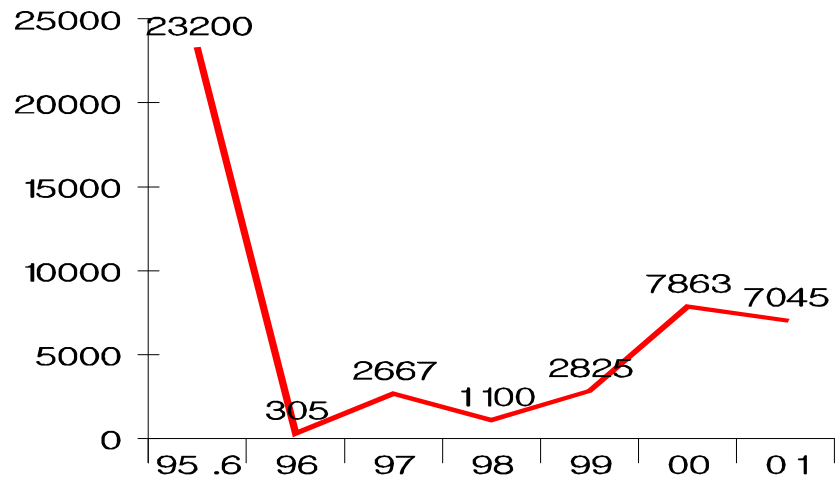
비료지원 경비는 비료구입시비 600억원, 수송비 및 인도인수경비 38억원을 포함 총 638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지원경비는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집행하였다.

2001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약 10% 정도 향상되었는 바, 이는 좋은 기상 조건과 함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비료를 적기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 <정부차원 대북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2001.12.31 현재)

기간	지원 규모	비 고
1995년	2억3,2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 지원</li> <li>- 1,850억원(1\$당 800원 적용)</li> </ul>
1996년	30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li> <li>-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li> <li>- WMO 5만달러(기상자재)</li> <li>- 24억원(1\$당 790원 적용)</li> </ul>
1997년	2,667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li> <li>-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li> <li>-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li> <li>- UN기구 980만달러</li> <li>·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li> <li>- 240억원(1\$당 900원 적용)</li> </ul>
1998년	1,10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li> <li>- 154억원(1\$당 1,400원 적용)</li> </ul>
1999년	2,82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 11.5만톤 직접 지원</li> <li>- 339억원(1\$당 1,200원 적용)</li> <li>* 한적 및 당국간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 462억원</li> </ul>
2000년	7,863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 30만톤 직접 지원(944억원)</li> <li>* 20만톤(635.7억원), 추가 10만톤(307.9억원)</li> </ul>
2001년	7,045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46억원)</li> <li>- 비료 20만톤 직접지원(638억원)</li> <li>-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223억원)</li> <li>-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 지원(6억원)</li> </ul>
계	4억5,005만달러	

##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 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기반 조성

1995년 9월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4월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제의하였다.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는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7월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는 1차 지원에 이은 2차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베이징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3.27)를 채택하였다.



## 나.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본격화

남북적십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496만달러(39억 7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제1차 합의서 채택 이후 6월부터 7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800여톤의 식량을 북한의 신의주, 만포, 남양과 남포항, 홍남항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어 7월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총 5만 2,800여톤의 구호물자를 제공하였다.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고, 이어 제3차 합의서 채택으로 3차분 대북지원이 4월에서 6월까지 추진되었다. 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달러 상당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9월부터는 3차분 추가 지원 물량으로 1,133만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 분유 등이 지원되었다. 특히,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탁한 한우 1,001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6.16, 10.27)

1999년에는 3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비료지원 국민모금계획」 발표에 따라 1,027만달러(123억원) 상당의 비료지원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재원으로 1999년 3~6월에 걸쳐 비료 4만여톤을 지원하였다. 이밖에 20여개 단체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281만달러(33.7억원) 상당의 물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0년에도 「3차분 추가 지원물량」이 계속 지원되었으며, 16개 단체가 참여하여 94만달러(113억) 상당의 의약품, 한우, 감귤, 농자재, 식량 등을 지원하였다. 2001년에는 사과, 배, 당근 등 농수산물과 못자리용 비닐, 의약품등이 한적을 통해 전달되어 1995년 11월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민간지원 총액 16,191만달러(1,960억원)중 8,386만달러(1,028억원)에 달한다.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

지역(단체)은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 2차·3차 지원시는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로 확대되어 북한 전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동포애를 전하였다.

#### 다. 민간의 자율적 대북지원 활성화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주민간 접촉 증대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방침하에 1998년 3월 18일과 9월 18일, 1999년 2월 10일과 10월 21일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주요내용>

- 1998. 3.18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성 모금행사 지원
  - 1998. 9.18 :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
  - 1999. 2.10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한적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
    - 기타 단체 및 개인은 한적창구를 통해 지원
  - 1999.10.21 :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 발표
    -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
- \*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부고시, 1999.10.27 제정, 2001.2.10 개정)

이에 따라, 1998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민간 관계자의 구호물자 분배확인 및 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방북이 성사되었으며,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4.25) 행사 등에 있어 언론사의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1999년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민간대북지원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구다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단체 명의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량·적기지원이 가능하여 북한 농업개발 지원 등의 대북지원 사업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절차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 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1년에는 민간단체 독자창구가 19개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지원 규모도 4,292만달러(55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분배 투명성 확보와 단체별로 특화된 전문적 지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10월 21일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10월 27일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부고시)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도 한해 동안 한국JTS 등 8개 단체 9개 사업에 대해 54.1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농업개발 분야 5개 사업 27억원, 보건의료분야 2개 사업 16.5억원, 취약계층지원 2개 사업 10.6억원 등이다.

2001년에는 총 75.7억원의 기금지원이 결정되었다. 내용상으로는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의 씨감자 지원사업,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영양지원사업,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금강국수공장 및 생필품 지원, 평화의숲 양묘장 지원사업 등 농업협력사업, 보건의료사업, 일반구호사업, 환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기금지원을 결정

하였다. 동 기금 지원 사업의 사업비중 남북협력기금은 2001년 12월 현재 30.3억원이 집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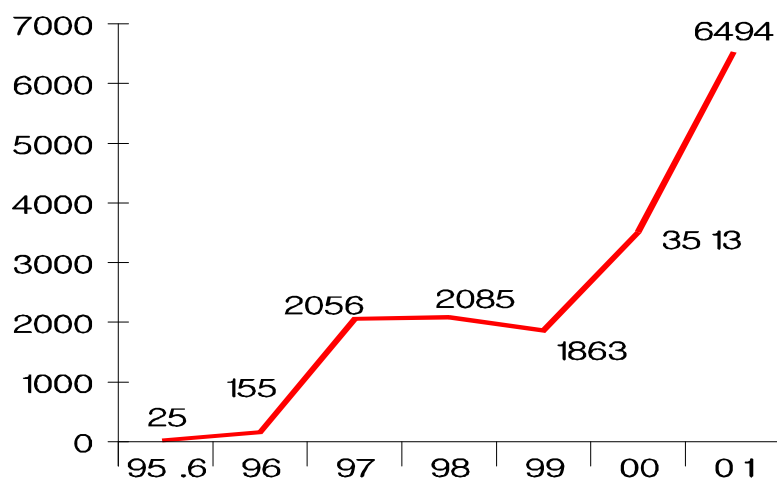
이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이를 양적으로도 이를 크게 확대되는 등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 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민간차원 지원사업은 물자지원 이외에도 북한측과의 공동생산 및 기술전수 등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생력 회복지원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 방북도 꾸준히 확대되어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만달러



# <민간차원 대북지원 내역>

(2001.12.31 현재)

기 간	규 모	내 역
1995.11~ 1997.5 (國赤경유)	496만달러 (39.7억원)	- 밀가루 3,664톤, 분유 94톤, 담요 1만개, 식용유 18.6만ℓ, 라면 10만개, 양말 35,000켤레, 감자 1,900톤, 무종자 4.8 톤, 배추종자 6.4톤, 옥수수 4,980톤 * 1\$당 800원 환율 적용
1997.6~ 1997.7 (韓赤1차지원)	850만달러 (75.7억원)	- 옥수수 41,511톤, 밀가루 2천톤, 라면 15만상자, 비료 2천 톤(옥수수기준 53,841톤) * 1\$당 890원 환율 적용
1997.8~ 1997.10 (2차지원)	890만달러 (81억원)	- 옥수수 17,100톤, 수수 14,576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 이영양제 3만병(옥수수기준 52,888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1998.3 (2차추가지원)	17만달러 (2.8억원)	- 비료 800톤(옥수수기준 1,261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1998.4~ 1998.6 (3차지원)	935만달러 (130.9억원)	- 옥수수 16,585톤(정주영 10,495톤 포함), 밀가루 13,500톤, 식 용유 26만ℓ, 분유 111톤, 비료 2,500톤, 소금 1,000톤, 쌀 57톤, 씨감자 5톤, 양말 26,000켤레, 한우 500두(정주영), 비 닐 3.4톤, 초콜렛 14톤, 의약품, 앰블란스 1대(옥수수 기준 54,544톤) * 1\$당 1,400원 환율 적용

기 간	규 모	내 역
1998.9~ 1998.12 (3차추가지원)	1,133만달러 (141.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영 : 옥수수 39,509톤(95억원,톤당 24만원), 한우 501두(사료 85톤, 물통 205개 포함 10억 9,400만원)</li> <li>- 민간단체 개별지원: 옥수수 4,010톤, 밀가루 2천톤, 백미 60톤, 분유 128톤, 설탕 34톤, 식용유 356,700ℓ, 젓소 200두, 사료 46톤, 비닐 50.8톤, 유리 984장, 의류 45,904매, X-Ray차 1대, 의약품 등(15개 단체, 35억 6,800만원)</li> </ul> <p>* 1\$당 1,250원 환율 적용</p>
1999.1~ 1999.12	1,863만달러 (223.6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적 비료지원(3차 추가지원 3.30~6.5) : 4만톤 123억 3,300만원</li> <li>-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24개 단체 33억 7,36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가루 3,139톤, 옥수수 4,015톤, 분유 42톤, 설탕 165톤, 씨감자 180톤, 식용유 15,845ℓ, 라면 9,930상자, 의류 215,448점, 의약품 등</li> </ul> </li> <li>- 독자창구(2.10~) : 10개 단체 66억 5,25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가루 1,051톤, 옥수수 4,000톤, 비료 1,484톤, 농기구, 젓염소 450두, 의약품, 의료기기, 의류 등</li> </ul> </li> </ul> <p>* 1\$당 1,200원 환율 적용</p>

기 간	규 모	내 역
2000.1 ~ 2000.12	3,513만달러 (4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16개 단체 113억 2,99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떡 20톤, 감귤, 의료장비 11종, 기초의약품 59종, 밀가루, 비료, 농약, 비료생산컨테이너, 구충제, 건빵, 한우 500두, 장난감, 분무기, 옷감, 의류, 이불,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li> </ul> </li> <li>- 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 3,87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 월드비전, 한국JTS, 천주교민화위, 북한동포후원연합회(남북나눔), 유진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li> <li>·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li> </ul> </li> </ul>
2001.1 ~ 2001.12	6,494만달러 (84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적창구(18차) : 28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 3,150톤, 사과 4,000톤, 감자 5,000톤, 못자리용 비닐 552톤, 당근 2,000톤, 전지분유 23톤, 이유식 2톤, 항생제, 담요 759장, 내의 159만벌, 연어(치어) 55만마리, 구급차 10대, 포스팜 액제 등</li> </ul> </li> <li>- 독자창구 : 19개 단체 55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나눔, 유진벨, 월드비전, 한국JTS, 한국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옥수수재단, 불교종단협의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민족복지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새마을운동중앙회, 평화의 숲,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원불교 등</li> <li>·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li> </ul> </li> </ul> <p>*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구충제(230만정) \$684,843(85,605만원상당)</p>
계	16,191만달러 (1,960억원)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1. 국내입국 추이

##### 가. 국내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100명을 넘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에도 2000년의 2배 정도인 583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1년 12월까지 총 1,99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중 1,75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 <국내 입국 현황>

(2001.12.31 현재)

연도	19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총 입국	사망· 이민 등	국 내 거 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990	232	1,758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계속 증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과거에는 국내 입국경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입국방법 등도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입국경로가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면서 입국이 용이해짐에 따라 입국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연고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체 입국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 2001년도 국내입국 유형별 현황 ＞

성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체	36	16	49	35	57	57	59	38	52	56	82	46	583(명)
남	15	8	26	19	23	40	26	16	21	27	46	27	294(50.4%)
여	21	8	23	16	34	17	33	22	31	29	36	19	289(49.6%)

연 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인원	43	91	158	172	54	25	40	583(명)
비율	7.4	15.6	27.1	29.5	9.3	4.3	6.8	100(%)

출신지	함북	함남	평안	양강·자강	강원	황해	기타	계
인원	380	83	43	30	15	17	15	583(명)
비율	65.2	14.2	7.4	5.2	2.5	2.9	2.6	100(%)

직업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농장원	봉사분야	군인	기타	계
인원	22	26	16	277	43	7	192	583(명)
비율	3.8	4.5	2.7	47.5	7.4	1.2	32.9	100(%)

2001년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은 남·녀간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절반 이상(50.4%)을 차지하고, 여성도 49.6%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30대가 다수(56.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청소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여성들과 청소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주부·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입국자(56.4%)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한편, 출신지역은 함경도(79.4%), 평안도(7.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47.5%), 부양·아동·학생 등 기타(32.9%)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나. 거주 및 정착실태

2001년 12월말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1,758명의 각 지역별 거주분포는 서울 42.4%, 경기·인천 19.9% 등 수도권 지역에 62.3%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 외의 거주자는 지역 경상 7.1%, 전라 4.3%, 충청 6.9% 등에 이른다.

직업별 분포는 연구원 등 관리전문직이 2.8%, 회사원 등 사무직과 생산직 봉급생활자가 21.7%, 상업 등 자영업자가 4.3%, 학생·고령인구·주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가 41.8%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2000년도부터 취업보호제의 본격 시행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활·자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차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다. 해외체류 실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내 재중동포(조선족)가 집단 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재중동포(조선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식량 등을 구할 일시적인 목적으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가 국내외적인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체류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상호이해를 통해 이들의 보호·지원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2. 정착지원 체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여부가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하며, 둘째, 해외체류 탈북자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

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셋째,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넷째,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입국조치, 초기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먼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본인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 공관 등이 임시보호조치와 함께 국내입국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보호결정을 한 후 사회적응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공납금 지원, 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변보호는 출신 신분별로 군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부처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의회는 긴급현안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 3. 정착지원 추진

#### 가. 초기 자립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2억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인에서 8인까지 구분하여 각 세대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해주고 있는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나. 시설내 보호·지원

1994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을 통해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7년 12월 30일 부지 18,147평,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시설 건립에 착공하여 약 1년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준공·개소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입국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일시 수용인원 100명에서 250명 규모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도에 하나원 증축이 완료되면, 연간 북한이탈주민 1,500여명의 보호·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원에서는 2-3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중점은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교육중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진로지도, 운전·전산·요리·봉제 등 기초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들이 사회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민간단체 및 퇴직교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별도의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하나원」 주요 시설 현황 >

시설명	규 모	시 설 내 역
교육관	약 1,235평	o 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고충상담실, 자료실 등 교육생의 사회적응교육 공간으로 활용
생활관		o 1인실, 2인실, 4인실, 별실, 특실, 가족실 등 교육생 생활공간으로 활용
봉사관	약 241평	o 숙소, 내무반, 정비실 등 시설관리 지원공간으로 활용

### < 「하나원」 교육내용 >

<p>1. 정서·심리적 불안정 상태 해소</p> <p>o 탈북·제3국 은신·도피생활중 어려움 및 입국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상태 불안</p> <p>- 인성·적성검사를 통한 개별심리상태 파악 및 심리안정·순화프로그램 운영</p> <p>2. 문화적 이질감 해소</p> <p>o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상존</p> <p>-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론교육·현장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 실시</p> <p>3. 진로지도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직업훈련 강화</p> <p>o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기간동안 진로지도 필요</p> <p>- 전산·운전·요리·봉제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능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점 편성·운영</p>	
--	--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원 운영에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연령·학력·출신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의 참여 없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에서는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교·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준공된 이후 총 789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사회에 진출하였으며, 2001년 12월말 현재 14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받고 있다.

### <하나원 교육생 입퇴소 현황>

(단위:명)

구분	1기	2기	3기	1999계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2000계
입소	20	9	32	3개기 61	41	27	30	41	49	48	61	7개기 297
퇴소	19	9	(32)	2개기 28	41	27	30	41	49	(48)	(61)	6개기 220
구분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	2001 계		
입소	59	53	70	66	74	59	48	64	79	9개기 572		
퇴소	59	53	70	66	74	59	48	3	0	8개기 541		

\* ( ) 숫자는 입·퇴소 년도가 다른 퇴소생 수

\* 총 입소인원 930명중 남 509명(54.6%), 여 421명(45.4%)

\* 18-19기는 2001년말 현재 교육진행중이며, 18기 3명은 개인사정으로 조기퇴소

#### 4. 법·제도개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크게 증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요청됨에 따라 1997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1998년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초기정착금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1999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자립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취업보호제의 실시, 노령연금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지원제도의 도입,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성화 등이다.

민간차원에서도 각종 후원·결연단체를 네트워크화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민간단체별 전문적 분야별로 적응지원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여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2001년도에 지역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조직 중에 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사회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에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입국자들이 증가하는 현 추세와 점차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이러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은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지방·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을 확대하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제도적·가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본인들의 확고한 자립·자활의지 및 정착 노력과 함께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주는 국민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 제4절 북한인권·환경문제 개선 추진

### 1. 북한인권문제

2001년에는 국제기구 및 국가, NGO(비정부기구)에 의한 북한인권 관련 문제제기와 논의가 지난 해 보다도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해 북한도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2001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대표 등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였고, 제7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7월 19일에서 20일에 걸쳐 북한의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차 정기보고서 심의가 있었으며, 6월 13일 개최된 EU와 북한과의 인권회담 및 10월 2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정치대화가 있었다. 또한 미국무성이 2월과 10월에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의 발표하였으며,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 NGO에서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였다.

특히, 제7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이 1983년 이후 16년 만인 2000년 3월에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실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북한은 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및 심리과정에서 공개처형 사실을 최초로 시인하여, 1992년 10월 함흥에서 친조부모를 살해한 ‘주수만’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공개처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민들의 시위 및 집회 횟수, 언론 출판자유 실태, 종교별 성직자 현황, 해외여행 관련 신청 및 기각 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한편, 2월 27일에는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및 ‘고문 및 가혹행위금지에 관한 협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 NGO에 의한 북한 인권문제 언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국무성은 2001년 2월 27일 ‘2000년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1995년 이후 식량부족으로 인권보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평가하고, 또한 과도한 군사비가 경제회생노력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아는 혼란과 광범위한 영양부족을 야기하였으며, 기아와 이에 따른 질병으로 약 백만명이 사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001년 10월 25일 발표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1’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자유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2000년 국무성의 종교자유보고서를 재확인하고 USCIRF(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가로 지정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는 ‘곤란에 처한 탈북난민’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 실태와 강제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인권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중국과 북한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였다. 중국 당국에 대해 AI는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할 것과 탈북자의 인권보호, 난민을 부정하는 북·중 양자협약을 철폐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망명과 관련된 형법 및 관련 규정을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2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탈북자 색출활동 금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허용, 고문방지 및 가혹행위 금지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난민인정과 탈북자 인권보장을 위해 나서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Freedom House도 ‘2000-2001 세계자유상황 평가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서

각각 자유 수준이 가장 열악(Not Free)한 7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자 등 난민구호를 목표로 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2001년 10월 25일 창립선언을 채택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는 창립 선언에서 “북한의 인권 부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대북지원 식량의 분배에 대한 검증, 대북 경제원조와 인권 개선의 조건부 연계 추진, 탈북자 처벌금지 및 중국내 탈북자 정치난민 자격 인정,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개방 방안 등 7대 활동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민간단체들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및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약칭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등 국내의 민간인권단체들도 국제 NGO들에 대해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한 정보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워크숍·포럼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 및 국제사회의 관심환기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내 NGO의 자료발간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인권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01년 3월 29일 제57차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인권대사로 임명된(2001.1) 박경서 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실시한 바 있다.

## 2. 북한환경문제

환경전문가들은 북한의 환경은 환경의식 부재와 환경개선 투자부족 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석탄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폐광·해안간척·공장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식량증산을 위한 다락밭 개간과 연료림 채취 등이 북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오늘날 북한 환경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 상호 협력할 때 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남북환경협력을 통한 북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환경협력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환경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도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지원 및 양묘장 조성사업 지원 등 산림분야에서의 민간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들어, 강원도가 금강산 지역(삼일포 일대) 1,00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묘목조성사업은 동북아 산림포럼이 6월 20일에는 UNDP(두만강개발계획)가 추진중인 AREP(농업복구 및 환경보전사업) 14개 양묘장 복구사업에 참여한다는 양해각서를 UNDP와 체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평화의 숲’도 평양인근지역 양묘장 시설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평화의 숲’ 양묘장 조성사업에 1억2,4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8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남북환경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 장인 ‘남북환경포럼’을 출범시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남북환경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 등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류전체의 자산인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며,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에 대한 남북공동 생태계조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환경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

###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 제2절 본공사의 안정적 추진

1. 본공사의 추진
2. 재원조달

### 제3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1. 후속의정서 협상
2.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KEDO-북한간 협상

##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 경과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면서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고, 1997년 7월에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는 경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정부가 KEDO에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정지하고, 숙소·사무실·식당·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통신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은 협상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1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부지준비공사는 재원분담 협상 및 차관공여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KEDO-한전간 주계약(TKC)이 체결되지 않아 2000년 2월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동안 본공사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로서 부지인근 진입도로 27km를 개설 포장하였고, 취수방파제 및 물양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남북한을 연결하는 전용통신망 16회선과 부지내 통신설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임시 동력설비, 중기수리고, 유류저장고, 건설사무소 등의 공사기반시설도 마련하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근로자 숙소 및 식당, 목욕탕, 의무실, 노래방, 독서실 등 편의시설과 테니스장, 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이 완공되었으며 병원과 교회, 법당, 성당 등 종교시설도 건설 중이다. 그리고 위성TV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외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20여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 과정에서 초기에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이념의 차이,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서로 협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 제2절 본공사의 안정적 추진

### 1. 본공사의 추진

#### 가. 본공사 추진 경과

경수로건설의 본공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KEDO와 1996년 3월 주계약자로 선정된 한전간에 주계약(TKC: Turn-key Contract)이 체결되어야 한다. 주계약은 한전이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is)으로 한국 표준형 경수로발전소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규정하는 기본계약으로서, KEDO와 한전은 1997년 10월부터 15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방대한 주계약 조건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12월 15일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주계약의 발효조건인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이 1999년 12월 15일에, KEDO와 일본 국제협력은행간 용자계약은 2000년 1월 31일에 각각 체결됨에 따라 2000년 2월 3일 주계약이 발효되었다.

주계약 발효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는 본공사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부지정지공사는 2001년 8월 완공되었다. 취수방파제, 물양장 등 대규모 토목공사도 2002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수로의 발전소 설계 및 건설기자재의 발주·제작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가 제출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9월 1일 건설허가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본관기초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2001년 12월말 현재 1호기는 31.2%, 2호기는 25.4%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밖의 설계, 제작, 구매 등을 포함한 종합공정의 진척도는 16.08%를 보이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훈련의정서에 따라 북한의 김희문 경수로대상사업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원자력분야 고위관계자 19명이 약 2주간에 걸쳐 울진원전, 고리 원자력교육원, 두산중공업(주),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등 국내 원전관련시설 및 기관들을 둘러보았으며, 이에 앞서 11월에는 고위관계자 9명이 스페인, 스웨덴 원전시설도 견학하였다.

또한 북한측 운영·정비인력들의 훈련을 위한 부지내 교육시설이 2002년 초 완공되어 2002년 상반기에는 부지내에서 북한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 안전을 담당할 규제요원들에 대한 훈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중이다.

경수로 건설공사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합동시공단(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말 현재 남측 인력 625명, 북측 인력 94명, 우즈베크 인력 426명과 금호사무소 인원 등 총 1,151명의 근로자가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불도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차량 등 300여대의 장비가 공사에 투입되고 있다.

#### **나. 사업지원체계의 강화**

우리정부와 KEDO는 본공사 착수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경수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리 근로자들이 북한 현지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2000년 2월 본공사 착수후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상주하는 남측 근로자 및 우즈베크 근로자가 1,000명 수준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숙소 등 생활시설과 후생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도 증편하여, 2000년 10월부터는 속초-양화간에 월 2회 정기적

으로 운행해 오다가 2001년 9월에는 국제여객수송기준을 고려하여 새로 건조된 「한겨레호」가 투입되면서 월 4회 인력을 수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직항공로 개설, 독자위성통신망 구성 등 각종 의정서상의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KEDO는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KEDO 인원들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2000년 2월부터 우리 인원으로 구성된 「KEDO 질서유지대」 39명을 파견·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근로자들의 현지생활을 안내하는 「경수로생활수첩」을 발간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에게 「방북안내교육」을 통해 우리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의 대규모 인적·물적·기술적 교류와 협력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재원조달

### 가. 재원분담결의

경수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수로건설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TKC상에는 40.8억불이나 물가상승, 환율 등을 고려하여 46억불로 책정, 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약속한 기여금액이 최대치(maximum)임을 명기함으로써 부족분 조달시의 추가적인 부담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EU는 1997년 KEDO 가입 당시 약속한 7,500만 유로를 이미 기여하였으며, 2001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 유로를 추가로 기여할 예정이다.

#### **나. 재원조달 및 공사비 분담**

1998년 11월 9일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된 이후 정부는 경수로사업비 분담분에 대한 국내재원조달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국내재원조달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형평성에 부합되는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납부금제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당초에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국내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회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00년 5월 30일 15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16대 국회에 들어와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정에서 분담하는 방안과 「전기요금 납부금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당분간 국채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근본적인 재원조달방안은 경제상황, 재정여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기로 하였다.

한편, 2000년 2월 3일 주계약(TKC)이 발효되고, 본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정부는 2001년 12월까지 5억 21,754만불의 건설공사비를 분담하였으며, 일본은 2억 23,609만불을 분담하여 총 7억 45,363만불의 건설공사비가 주계약자인 한전에 지급되었다.

우리정부가 분담하는 재원은 근본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채를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바, 2001년까지 국채 발행 규모는 총 7,147억원이다. 연도별 발행규모는 1999년 1,498억원이고, 2000년 2,549억원, 2001년 3,100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공사비 및 만기도래 국채상환금을 포함하여 6,300여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 제2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 1. 후속의정서 협상

KEDO와 북한은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여 경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까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의정서」, 「통신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훈련의정서」 등 7개 의정서가 체결·발효된 바 있다.

2001년에는 199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 제5차 협상이 7.16~24간 뉴욕에서 재개되어 양측이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어 12월 3일 북한을 방문한 카트만 KEDO사무총장이 김희문 북한 경수로대상사업국 국장과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는 크게 품질보장 부분과 보증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품질보장은 KEDO가 수행하는 품질보장활동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과정에서 KEDO와 북한의 권리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증은 KEDO 원전의 전기출력, 주요부품, 초기장전 핵연료 및 건설물에 대한 보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 타결로 KEDO의 품질보증활동에 북측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수로 완공시 원전의 안전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해 2001년 말까지 이미 체결된 후속의정서와 앞으로 건설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결해야 할 「원자력 손해배상의정서」, 「인도일정 및 조치의정서」 등 잔여 의정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비 고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KEDO의 법적 지위, KEDO 인원 에 대한 신변보호 등	경수로 공급협정 제4조 6, 7항	1996.7.11 발효
통 행	KEDO인원의 부지접근(자유로운 출입절차) 및 효율적 통행로 개설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3, 6항	"
통 신	부지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5, 6항	"
부 지	부지인수 및 부지접근·사용에 관련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5조 3항	1997.1.8 발효
서비스	북한의 노무·물자·시설과 기타 서비스 공급조건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4, 6항	"
미지급시 조 치	상환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16조 3항	1997.6.24 발효
훈 련	경수로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	경수로 공급협정 제7조 2항	2000.10.20 발효
품질보장	경수로 품질 및 성능 보장	경수로 공급협정 제6조 4항	2001.12.3 발효
원자력 손해배상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 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2항	2000, 2001년 2회 대북설명회
인도일정 및 조치	북한의 핵동결 및 해체조치와 경 수로 공급일정	경수로 공급협정 제3조 3항	미 협의
상환조건	경수로 건설대금의 상환금액 및 조건	경수로 공급협정 제2조 4항	"
사용후 연료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8조 4항	"
핵 안전 및 규제	경수로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경수로 공급협정 제10조 5항	"

## 2.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KEDO-북한간 협상

후속 의정서 협상과는 별도로 KEDO는 기 합의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측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협상을 수시로 개최해 왔다.

2001년도에도 3차례의 고위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5월초 개최된 회의에서는 바지선 이용시 객화선 승선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독자위성통신망 설치, 남북 직항공로 개설문제 등도 협의하였다. 북한의 건설허가 발급을 앞두고 8월말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 KEDO측은 공사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북한 원자력안전규제당국의 건설허가가 적기에 발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으며, 북측도 경수로 사업 진척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11월초에 개최된 세 번째 회의에서는 북한 원자력 고위관계자들의 제3국 및 국내시찰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남북 직항공로 개설문제, 세관통관절차 등에 대해서도 쌍방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북한측이 1999년 9월 고위전문가 회의에서 노무인력 임금을 현재의 110불을 600불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이래, 노무인력 임금 문제는 KEDO-북한간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임금문제 미타결을 이유로 북한측은 일방적으로 2000년 4월 북측 근로자 200명중 100명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3차에 걸쳐 우즈베크 인력 460여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한편, KEDO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한 2차례의 고위급회담(3월, 6월)과 카트만 KEDO 사무총장 방북시(12월) 등 문제를 협의하는 등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쌍방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전문가 협상 이외에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출통제 문제, 원자력안전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여 협의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

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 제1절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1.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2. 자문기구 운영
3.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 제2절 다각적인 통일홍보 전개

1. 첨단매체 활용 즉응 홍보
2. 수요자 지향형 홍보
3. 국제사회 및 해외동포 대상 홍보

### 제3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2. 통일교육 실시
3. 학교통일교육지원
4. 사회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자료 개발
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구축·운영

### 제4절 북한 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1. 북한실태·주요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2. 다양한 연구사업·행사 지원
3. 북한 정보 자료 개방 확대

##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 기반 조성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은 국민의 뜻과 의지이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북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견지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부는 국회를 비롯하여 여야 각 당과 사전·사후 협조를 강화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왔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활용,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 제1절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 1. 여론조사 실시 및 다양한 여론 수렴 활동

정부는 국민여론을 대북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폭넓은 여론 수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연령·직업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여론조사의 실시이다. 2001년에도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 남북정상회담 1주년,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등의 계기와 관련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민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다.

국민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의 남북관계

보도내용은 물론 각종 기고문 등을 종합하여 「주간 여론동향」으로 발간,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토의된 내용, 그리고 다양한 정책관련 자료 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등 계기시 마다 통일관련 단체 인사, 전문가 및 학자, 각계 여론 주도층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통일고문회의, 정책자문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 등 다양한 기구를 활용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 2001년도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

구분	일자	대 상	주 요 내 용
1차	2.24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정부 출범 3년 대북정책 추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했다 (76.8%), 잘못했다 (21.6%)</li> </ul> </li> <li>○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최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생사확인 (53.0%)</li> </ul> </li> <li>○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후 전쟁위험 감소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소 (70.0%), 감소되지 않음 (27.9%)</li> </ul> </li> <li>○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지한다 (83.5%), 지지하지 않는다 (15.5%)</li> </ul> </li> </ul>
2차	6.19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관계 개선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여 (85.9%), 기여하지 못함 (12.0%)</li> </ul> </li> <li>○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되어야 함(65.5%), 중단되어야 함(30.3%)</li> </ul> </li> <li>○ 향후 중점 정책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35.8%)</li> </ul> </li> <li>○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지한다 (76.7%), 지지하지 않는다 (20.5%)</li> </ul> </li> </ul>
3차	9.22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이 될 것 (64.9%), 도움이 안될 것 (27.7%)</li> </ul> </li> <li>○ 경의선 연결 등 남북경제협력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다 (56.0%), 높지 않다 (39.6%)</li> </ul> </li> <li>○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한다 (60.0%), 반대한다 (38.4%)</li> </ul> </li> <li>○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지한다 (76.8%), 지지하지 않는다 (19.0%)</li> </ul> </li> </ul>
4차	12.18	일반국민 1,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 한해 남북관계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46.0%)</li> </ul> </li> <li>○ 향후 중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28.6%)</li> </ul> </li> <li>○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지한다 (68.2%), 지지하지 않는다 (28.9%)</li> </ul> </li> </ul>

## 2. 자문기구 운영

##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평화 통일 의식 고취와 효율적인 통일정책 자문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정부는 「통일고문회의규정」을 개정(1998.11.28)하여 통일고문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통일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국민의 정부」 제2기 통일고문회의가 구성(의장 : 조영식)되었으며,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자문·지역 여론수렴활동 등 통일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1년의 활동실적은 고문회의 4회(2.1, 5.8, 10.9, 12.17), 워크숍 1회(6.19), 대통령 간담회 2회(5.8, 12.17), 지역여론수렴활동 1회(11.30~12.1, 제주지역) 등이다.

## <통일고문 명단>

(위촉기간 : 2000.11.20~2003.5.19)

성 명	직 책
조영식(의장)	경희학원 학원장
강만길	상지대 총장, 前 민화협 상임의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권오기	21세기평화재단 이사장, 前 통일부총리
김 근	연합뉴스 사장, 前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김수환	추기경
김종하	고합그룹 상임고문, 前 대한체육회장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3대 국회의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종화	세계교회협의회 중양위원, 경동교회 당회장
서병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안무혁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오재식	월드비전 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기옥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이만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병형	성우회 자문위원, 前 2군사령관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 前 국방부장관
이성림	한국예총 회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前 문화부장관

성 명	직 책
이우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前 국무총리
장 상	이화여대 총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
최영철	통일번영연구원 회장, 前 국회부의장

#### 나. 통일정책 평가회의

정부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2001년 말 현재 13명으로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있으며, 매년 3월 새로이 위촉하고 있다.

2001년의 활동실적은 평가회의 3회(2.9, 4.6, 9.28), 워크숍 1회(12.7~8) 등이다. 또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을 통해 대북정책 수행에 기여해 왔다.

## <2001년도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01.3.1~2002. 2.28)

성 명	직 책
안병준(위원장)	연세대 명예교수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백충현	서울대 법대교수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
신인령	이화여대 법과대학 학장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장공자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 원장
전인영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조 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허남성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장
황의각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

### 다.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01년 말 현재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통일교육 등 6개 분과위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7월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있다.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01.7.1~2002.6.30)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8명)	인도지원 분과위 (7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통일교육 분과위 (7명)
권민웅 (경북대 교수)	강성운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혜원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	김귀옥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상근연구원)	고유환 (동국대 교수)	고정식 (배재대 중국학 교수)
남찬순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영옥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김운근 (북한농업연구 센터 부장)	김경홍 (대한매일 논설위원)	오기성 (인천교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주석 (국방연구원 북한군사 연구팀장)	신지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박창빈 (월드비전 사업본부장)	김용호 (한림대 민족통합연 구소장)	윤영민 (한양대 교수)
이영애 (단국대 교수)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신현윤 (연세대 법대교수)	오혜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 원회 수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장명봉 (국민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윤영관 (한국국제전략 화해연구소 (ISR) 소장)	송영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인숙 (세종대 교수)
전득주 (숭실대 통일 정책 대학원장)	전숙희 (교육복지연구 원장)	조동호 (KDI북한경 제연구팀장)	이강렬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	정진경 (충북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전혜숙 (김일성정치대 여성정치군 관학교 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최대석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장달중 (서울대 교수)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 원장)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하용출 (서울대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 3.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양성과 민주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역할은 앞으로 크게 확대되어갈 것이다.

1980년대까지 통일운동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 등 몇몇 단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문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통일운동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의 정책제언을 수렴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특히 2001년 민간통일운동은 6.15~8.15 기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전개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민간단체간 남북공동행사 개최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남북노동자대회(4.30~5.2,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6.14~16, 금강산), 남북농민대회(7.17~19, 금강산), 8.15 민족통일대축전(8.15~21, 평양)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민간통일단체들이 자발적 연대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결성하여 6.15, 8.15행사 등 대규모 남북공동 민간행사를 개최한 것은 민간통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001년 8.15 남북공동행사에서 일부 인사들이 돌출행동을 함으로써 법적 제재를 받았으나, 이는 남북관계 발전의 과정에서 여과되고 순화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 통일운동단체는 총 95개이며,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교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2001.12.31 현재 총 95개 단체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민족통일협의회	한양수	대한민국팔각회	장종수
민족문화통일회	최창순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김형주
평화문제연구소	현경대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이무용
민주통일촉진회		한국미래연구학회	신윤표
한민족세계선교원	조준상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김금중
통일기념사업회	김동섭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이경호
21세기통일준비운동본부	허태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돈명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김규병	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이수성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고정명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우정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김재천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민족통일불교협의회	김태완	세계평화여성연합	정대화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조동진	통일맞이	이재정
한민족통일촉진협회	권희준	평화통일복지협의회	김태유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김학옥	평화통일교육성국민중흥회	유재진
21세기통일봉사단	박종근	민족통일연합중앙회	안광양
통일건국민족회	권천문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김덕창
국민정신중흥회	이명규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박영록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박태남	민족통일촉진회	서정일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유종관	북한연구소	김창순
평화연구원	방희	한국발전연구원	안무혁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한민족통일연구중앙협의회	정성욱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	다물민족연구소	박광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우리연합	최민자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이경훈	통일경제연구협회	김기환
백천통일시대연구원	이성민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홍사광
한국사회통일연구원	유도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변형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박관용	북방문제연구소	김희욱
남북체육연구학회	이종영	21세기남북문화연구원	한태선

단 체 명	대표자	단 체 명	대표자
남북문화교류협회	이배영	민족통일선교협회	신현균
한겨레평화통일협회	장승학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정주환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경실련통일협회	김성훈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권근술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강도원
세계평화청년연합	김봉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신법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정성현	한민족한마음운동추진본부	김성택
남북소년통일교류회	정경석	남북나눔	김성수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이재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김연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강성모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송현섭	탈북자동지회	홍승경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이재정	좋은벗들	최석호
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조혁	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김경재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송낙환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최승강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강영석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재식	통일교육협의회	임종혁
미래전략연구원	구해우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민족연합	홍사덕
평화운동연합	이수성	통일문화연구원	라종억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한명수	남북한전통사회문화연구원	최병보
민족화합통일운동연합	박봉식	민족통일체육연구원	이학래
새천년남북통일운동협의회	주명주		

## 제2절 다각적인 통일홍보 전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다.

우선 대북정책 및 통일 추진과 관련, 홍보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이 계층·세대에 따라 그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발굴하고 홍보방법과 매체활용에 있어서도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 1. 첨단 매체 활용 즉응 홍보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인터넷, E-mail 등 첨단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다.

#### 가.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go.kr」

1996년 12월 개통된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는 대북정책, 남북관계현안 및 북한동향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국·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 사이트로서 기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왔다. 2001년 말 현재까지 5년동안 170여 만명이 이용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8월 통일부 홈페이지를 밝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동시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메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의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대한 자료제공과 국민여론 수렴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우선 「자유게시판」코너가 신설되어 국민들의 통일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의 「통일대화방」(통일문제관련 의견제시 및 문의), 「장관과의 대화」(통일부장관에게 직접 의견제시 및 건의), 「감사관 신문고」(감사 관련 의견 제시)와 함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국회 보고자료」코너를 신설, 대북정책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대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E-mail 자료 요청」 등의 코너도 신설하여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개개인 E-Mail로 관련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볼 수 있는 「남북회담자료」(<http://dialogue.unikorea.go.kr>), 남북한의 이산가족문제를 다루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http://reunion.unikorea.go.kr>), 통일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 등을 연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개통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는 2001년 한해동안 총 327,774건의 접속건수에 게시판 질의·응답은 2,352건에 이르고 있다.(1998년이래 총 누계는 접속건수 728,491건, 질의·응답 4,888건)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 12월에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영화 소개’와 ‘자료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홈페이지의 기능 및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1999년 10월에 개통된 남북회담자료 홈페이지 「Dialogue」(<http://dialogue.unikorea.go.kr>)는 남북회담에 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회담사료 홈페이지 「Dialogue」는 1970년 이후 2001년말 현재까지 약 30여년 동안 추진되었던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군사분야 회담,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수록되어있다.

메뉴 구성은 남북회담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볼 수 있는 「남북회담사」, 남북간의 최종 합의서를 모아둔 「남북합의서」, 남북대화 연표, 남북대화, 남북한 통일대화·제의 비교, 통일백서,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등 발간 책자와 자료를 정리한 「사료DB」, 보도자료, 해설자료 등을 모아둔 「자료실」 등이다.

그밖에 남북대화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열린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회담소식」 메뉴를 통하여 남북회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자료들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이 있어 자료 접근 및 자료 저장이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남북회담사료 홈페이지는 개설 이래 2001년말 현재까지 약 40여만명의 이용자가 접속하였다.

## 〈통일부 홈페이지 메뉴 구성〉

2001. 12.31 현재

통일부 소개	주요업무현황	통일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말</li> <li>○ 조직 및 업무</li> <li>○ 통일부 연혁</li> <li>○ 통일부 위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업무계획</li> <li>○ 통일정책</li> <li>○ 인도적지원</li> <li>○ 교류협력</li> <li>○ 남북회담</li> <li>○ 경수로</li> <li>○ 북한이탈주민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li> <li>○ 공지사항</li> <li>○ 국회보고자료</li> <li>○ 남북회담</li> </ul>
남북관계동향	자료실	통일갤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남북관계동향</li> <li>○ 일일북한방송</li> <li>○ 주간북한동향</li> <li>○ 주간국제동향</li> <li>○ 월간교류협력동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발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백서 등</li> </ul> </li> <li>○ 남북합의자료</li> <li>○ 신진연구자 논문</li> <li>○ 국내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 등</li> </ul> </li> <li>○ 북한법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사진</li> <li>○ 알기쉬운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의 언어 등</li> </ul> </li> <li>○ 한민족의 삶</li> <li>○ 한민족의 애창가요</li> <li>○ 통일만화마을</li> </ul>
민원마당	E-mail자료요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안내</li> <li>○ 행정정보공개</li> <li>○ 민원처리공개</li> <li>○ Hot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과의 대화 등</li> </ul> </li> <li>○ 질의모음(FAQ)</li> <li>○ 통일대화방(Q&amp;A)</li> <li>○ 전자공청회</li> <li>○ 자유게시판</li> <li>○ 동영상 공모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자료 전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자료센터</li> <li>○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li> <li>○ 통일교육센터</li> <li>○ 남북회담사료</li> <li>○ 검색</li> <li>○ 관련사이트</li> </ul>

## 나. 전자공청회

PC 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특정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전자공청회」가 1998년 이후 총 14차례 개최되었으며, 2001년 한해 동안에는 3차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총 1,773명이 「21세기 남북이 더불어 사는 길」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자공청회를 통해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층인 신세대들에게 대북정책 및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성과를 전달하고,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통일 표어·동영상 등을 공모 하여,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당선작을 전국 철도, 공공기관 전광판, 통일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광범위하게 전파하였다.

### <PC통신 및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시 기	행 사 구 분	주 제	의견제시 건 수	내용조회 건 수
2000. 2	PC통신(2000년 1차)	남북실상 바로 알기	138	7,391
2000. 5	PC통신(2000년 2차)	사이버 「남북정상회담」	147	8,751
2000. 9	인터넷(2000년 3차)	남과 북, 제로섬? 플러스 섬?	490	14,326
2000.12	인터넷(2000년 4차)	남북관계, 생각해 봅시다	352	13,058
2001. 2	인터넷(2001년 1차)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217	7,273
2001. 6	인터넷(2001년 2차)	21세기, 남북이 더불어 사는 길	265	11,366
2001.10	인터넷(2001년 3차)	새천년, 남과 북	1,118	17,462

## 2. 수요자 지향형 홍보

한편, 대북정책 관련 각종 자료도 수요자인 국민의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배포하였다.

### 가. 다양한 홍보자료 발간

남북관계 전문가 대상으로는 상세한 정책해설자료집을,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시각적·감성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한 브로슈어 형식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질의 문답자료집 「인도적 대북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등을 발간·배포하였다.

정부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청각자료의 제작·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녹음해설 테이프를 제작하였고,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대북정책 관련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 <주요 교육홍보자료 발간 현황>

자 료 명	연도	발간부수	형태
대북정책 2주년 실적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	11,500	책 자
대북정책 2주년 실적자료 「For the Future」	”	25,000	브로슈어
「2000 통일백서」	”	6,500	책 자
「2000 통일문제 이해」	”	20,000	책 자
「2000 북한 이해」	”	20,0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해설자료 「우리 함께」	”	29,5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해설자료 「새날이 밝았다」	”	40,000	브로슈어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 문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	30,000	책 자
「남북이산가족교류 어떻게 추진되나」	”	30,000	브로슈어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	”	-	웹만화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보기」	”	10,000	책 자
「북한방문 길라잡이」	”	5,000	책 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	2,000	책 자
「사회통일교육 표준강의전개안」	”	3,000	책 자
「2001 통일교육기본계획」	”	1,500	책 자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29,000	책 자
「새천년 함께 가는 남과 북」	”	1,500	영상자료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	100,000	책 자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30,000	책 자

자 료 명	연도	발간부수	형태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 실적자료 「약속과 실천」	2001년	30,000	브로슈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갑시다」	”	150	영상자료
「따로 한 반세기, 함께 하는 21세기」	”	50,000	책 자
「2001 통일백서」	”	7,000	책 자
「2001 통일문제 이해」	”	12,000	책 자
「2001 북한 이해」	”	12,0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	3,000	책 자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	200,000	책 자
「금강산 관광사업, 새롭게 시작됩니다」	”	10,000	책 자

#### 나. 「통일속보」와 E-mail 자료 발간

2001년에는 남북대화가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하여 국민적 이해와 합의기반 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남북관계 관련 중요현안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일속보」와 E-mail 자료로 발간하였다.

**<2001년 통일속보 및 E-mail 자료 발간 현황 >**

자 료 명	형 식	시 기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mail	1월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속 보	2월
독일분단기간중 서독의 對동독 지원내역	E-mail	4월
최근 북한의 체육활성화 동향	E-mail	5월
「인도적 대북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E-mail	5월
남북정상회담 1주년 해설자료	E-mail	6월
「북한선박의 영해침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E-mail	6월
금강산 관광사업 설명자료	E-mail	6월
북한 공장·기업소 상반기 계획 평가	E-mail	7월
「금강산 관광사업 새롭게 시작됩니다」	E-mail	7월
북한의 가공무역법 해설자료	E-mail	7월
8.15 행사 관련 설명자료	E-mail	8월
북한주민의 직업세계	E-mail	9월
5차 남북장관급회담 실천과제	속 보	9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이해	E-mail	9월
통일과정에서 본 우리의 대북정책	E-mail	10월
6차 남북장관급회담 해설자료	E-mail	11월
최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E-mail	12월

한편, 현안 설명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한 일환으로 E-mail 배포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였다. 현안 설명 자료를 E-mail을 통해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2001년 말 현재 교사, 통일문제 전문가 등 약 5만여 명에게 E-mail 자료를 수시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E-mail 배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와 TV 등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특히 통일·북한 관련 라디오, TV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

### <북한·통일관련 프로그램 현황>

2001.12. 현재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대	시간	담당부서
KBS 사회교육방송	통일열차	매일 00:10	50분	사회교육1부
K-TV	한민족 우리는 하나	매일 14:30	20분	영상제작과
YTN	북한 리포트	화 16:32	30분	통일외교팀
SBS	평양2000 (모닝와이드內)	목 06:35	6분	정치부 (통일외교안보팀)
KBS 1	북한 리포트	목 23:35	30분	통일부
EBS	남북은 하나	토 07:20	30분	사회팀
Arirang TV	Peninsula Scope	토 09:30	30분	제작팀
KBS 1Radio	남과북 하나로	토 17:30	30분	기획특집국
MBC Radio	남북한마당	일 06:05	25분	제작2부
BBS	통일로 하나로	일 07:05	55분	교양제작부
MBC	통일전망대	일 07:10	20분	통일외교부
PBC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 19:15	45분	라디오국

2001년에도 정부 당국자가 각종 시사 프로그램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며, KBS 사회교육방송을 통해 북한주민 및 중·러지역 동포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노력도 계속해 왔다.

### 3. 국제사회 및 해외동포 대상 홍보

####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힘써 왔다.

2001년도에는 영문판 통일백서 「Peace and Cooperation」과 함께 남북정상 회담 1주년 기념 영문 해설자료 「Toward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을 발간하였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 및 과제와 주변국의 협조를 담은 팜플렛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을 해당 외국어로 발간하여 외국의 주요기관 및 여론 지도층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 격월간으로 시작한 영문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1999년부터는 월간으로 발간 회수를 늘렸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통일한국」과 계간 「Korea and World Affairs」를 해외동포와 외국연구기관·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배포해 오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지닌 주요 국가의 관계인사·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정책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바, 2001년도에는 3월에 베이징에서 한·중 통일정책포럼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한·러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한편 이들 해외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세미나 개최 또는 통일부로 초청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민간단체 발간 해외홍보자료 배포 현황 >

2001.12.31 현재

기관명	연 도	간기	자 료 명	부 수
평화문제연구소	1989~현재	월간	통일 한국	매호 1,100
남북평화통일연구소	1981~현재	계간	Korean and World Affairs	매호 2,100

### <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

2001.12.31 현재

구 분	연 도	형 태	자 료 명	부 수	비 고
정기 (월간)	1998~ 현재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	매호 2,000	영어
부정기	2001	단행본	Peace and Cooperation	2,500	영어
		팸플릿	Toward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4,000	"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to the U.S.	600	"
			韓國の對北韓包容政策と日本	300	일어
			韓國對北韓包容政策與中國	400	중어
			Политика смягч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я	200	노어

## 나. 해외동포에 대한 홍보

560여만 해외동포들은 남북간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거주국 대한반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해외동포들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사회의 이해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15개국 47개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북정책의 의미와 정당성 등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있다.

특히, 해외동포 언론사를 대상으로 국내 전문가들이 작성한 통일문제 관련 칼럼을 정기 송부하여 게재토록 함과 아울러 동포단체 주관의 민족문화 행사와 현지 대학·연구소의 한반도문제 관련 세미나 지원을 통하여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1년 5월 24일에는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미·일·중·러 및 독일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해외동포 등 2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1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 미국의 LA,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제9차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개최하였다.



**<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개최 현황 >**

2001.12.31 현재

구 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1991.9.13	서 울	15개국 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1992.8.18-19	러시아 사할린	11개국 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1993.9.20-23	서 울	17개국 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1994.8.5-7	중국 연변	10개국 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1995.8.16-17	서 울	14개국 650명	통일 · 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1996.11.21-23	일본 도쿄	13개국 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1997.9.5-6	서 울	16개국 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1998.8.1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개국 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1999.10.1	서 울	6개국 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제10차	2000.6.17	독일 베를린	23개국 140명	독일통일 10년과 한반도 통일
제11차	2001.5.24	서 울	6개국 230명	6 · 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하고 적실성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배포(월간 Korean Unification Bulletin, 통일백서 영문판 등 4종 38,000부)하고, 재외동포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변국 한반도 문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 제3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각급 학교 등에서, 사회통일교육은 공공 교육훈련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통일교육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 심의위원회 설치, 정부의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부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평화공존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화와 화해협력중심의 통일교육내용체계 정립, 정부·민간 통일교육협력체제 구축, 학습자 중심의 열린 통일교육 심화 및 학교·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 가. 통일교육 3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중기 정책목표로 ‘통일한국의 비전을 향한 범국민적 통일교육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통일교육지원체계 현황분석, 새로운 통일교육지원체계 준비, 새로운 통일교육지원체계 정비·실행 등 단계별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통일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기구개편 및 기능 강화 ② 법·제도적 정비 ③ 전문인력 양성 ④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이 계획에는 중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부,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여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2002년도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나.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발간·보급

정부는 통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발간하여 학교 및 사회의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2001년 12월에는 평화와 화해협력 중심의 통일교육에 중점을 둔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의 주요 특징은 ① 헌법 제4조 통일조항, 교육기본법, 통일교육지원법 등의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추구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② 남북 평화공존시대에 부응하는 객관적 북한관을 정립하기 위해 북한 사회의 단편적 모습이 아닌 기본운영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으며 ③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유도하였다. ④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내부의 계층별·세대별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⑤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구성 및 주요내용>

구 성	주 요 내 용
I.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 통일교육의 목표
	2. 통일교육의 과제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필요성
	2. 북한사회의 모습
	3. 북한의 변화 이해
	4. 통일환경의 변화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6.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8. 통일국가의 실현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III.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원칙

### 다. 제2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설치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1년 8월 제2기 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제2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여성 및 시민단체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

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 민간전문가 등 25인으로 구성된 제2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1년 10월과 12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와 화해협력 중심의 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통일교육 3개년 계획」, 「2002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9월과 12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명단>

2002.2.1 현재

성명	소속	비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	당연직
최희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형기	통일부 차관	
김승규	법무부 차관	
권영효	국방부 차관	
정영식	행정자치부 차관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김송자	노동부 차관	
현정택	여성부 차관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	
유정석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구본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국회의장 추천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박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용호	중앙대학교 교수	
홍연숙	한양대학교 교수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통일부장관 임명
박도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서병철	통일연구원 원장	
심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장	
이장희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세구	서울대학교 교수	
조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라. 통일교육발전워크숍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학교·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단체의 통일교육관련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총 6차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 <2001년도 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 현황>

주관단체	일 자	발 표 주 제
한국방송작가협회	2001.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의 역할</li> <li>- 북한주민의 가치관</li> <li>- 통일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li> </ul>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1.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li> <li>-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li> <li>-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의 의의와 실천과제</li> </ul>
한국국민윤리학회	2001.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li> <li>- 초등학교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li> <li>- 중학교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li> <li>- 고등학교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li> </ul>
통일교육협의회	2001.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li> <li>- 민족화해시대의 통일교육 방향</li> <li>-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 방향</li> </ul>
서울 YWCA	2001. 1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li> <li>- 반공교육세대의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통일교육 정책제안</li> <li>- 통일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의 역할과 정책제안</li> </ul>
통일교육연구원	2001.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중점방향 모색</li> <li>- 사회통일교육의 내용 분석과 개선방향</li> <li>- 사회통일교육의 실시체계 분석과 개선방향</li> </ul>

## 2. 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발맞추어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 지향’이라는 기존 교육방향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남북화해협력시대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하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방문 예정자들에 대한 내실있는 방북안내교육을 통하여 방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과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고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하는 등 기존 통일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 <통일교육 교과 내용>

구 분	교 과 내 용
통일의 당위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의미와 성격</li> <li>○ 분단의 배경과 폐해</li> <li>○ 평화통일의 필요성</li> </ul>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체제의 특징 : 정치·경제·사회·문화</li> <li>○ 북한의 변화 가능성</li> <li>○ 북한의 대남전략·대외정책</li> </ul>
평화통일환경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질서의 변화</li> <li>○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li> <li>○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li> </ul>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li> <li>○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과정</li> <li>○ 남북관계의 현황</li> </ul>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국 통일의 교훈</li> <li>○ 통일국가의 미래상</li> <li>○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li> <li>○ 민주복지사회의 구현</li> </ul>
체험·참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 등 분단현장 시찰</li> <li>○ 주제별 토의·과제 연구, 대담토론 등</li> </ul>

이와 같은 교과내용에 따라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크게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과 사회 각계인사 통일교육, 방북예정자 교육 및 국내·외 순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2001년의 경우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 3,393명, 사회 각계인사 통일교육 4,621명, 방북예정자 교육 4,760명, 국내·외 순회교육 27,512명 등 총 40,28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가.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

통일부는 각급학교,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전문인력은 각급학교 교사, 교장·교감 등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사회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에 대한 2001년도 총 교육인원은 3,393명이다.

우선,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초·중등 교사, 교육전문직, 교장·교감, 대학교수 등 13개 대상 2,36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 학교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기법 등을 체득케 함으로써 학교통일교육의 저변 확대를 꾀하였다.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민방위강사, 향군안보강사, 정훈장교 등 5개 대상 1,024명에 대해 3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일반국민들에게 올바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남북관계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 나. 사회 각계인사 통일교육

우리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직자, 통일관련단체, 학교운영위원, 재외동포지도자 등 우리 사회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 총 교육인원은 4,621명이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중견관리직 공무원(4-5급), 중견실무직 공무원(6-7급), 읍·면동장, 이탈주민보호담당관, 보안경찰, 통일직무반 등 총 8개 대상 624명에 대하여 3일~2주의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과정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추진방향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사회단체지도자, 대학생, 통일교육시범학교학생 등 3,129명에 대해 1~3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기타,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재일민단 간부반 94명을 대상으로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일교육협의회 임원 등 국내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연찬은 10회에 걸쳐 총 77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 다. 방북예정자 교육

방북예정자 교육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인사, 경수로 건설인력, 금강산관광사업 관계자, 남북회담 및 왕래행사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교육대상을 방북 목적 및 지역 등에 따라 분리하여, 특성화된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총 4,760명에 대한 방북예정자 교육이 이루어졌다.

## 라. 국내·외 순회교육

국내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정규 통일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방의 여론 주도층 인사나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외 순회교육은 재외동포들의 본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해 해마다 해외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국내·외 순회교육으로 총 27,51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내 순회교육은 27,247명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등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국외 순회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상반기(6.10~6.19)에는 독립국가연합 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하반기(12.5~12.13)에는 대양주 지역(호주, 뉴질랜드)에서 재외동포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학교통일교육 지원

###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정부는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15일에 전국 시·도교육청 통일교육담당 장학사 32명으로 구성된 「통일교육담당 장학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을 설명하고 시·도교육청간 통일교육 계획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9월 26~27일에는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학교통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 38개교(초등학교 14, 중학교 14, 고등학교 10)를 지원하였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패널제작용 사진자료와 통일교육용 교재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를 지원하였으며, 시범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통일교육 관련 발표회, 판문점 견학 등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선학교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학교통일교육에 활용해 나가기 위해 「제2회 학교통일교육 우수 사례 공모」를 실시하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39편이 접수되어 학교급별로 통일부장관상 등 총 7편을 시상하였으며, 2002년도에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과 평화적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역 북한관 주관으로 「6·15공동선언 1주년 기념 전국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대회는 초·중·고 각각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부문별로 통일부장관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고 부상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수상작 중 운문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수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 <2001년도 전국 통일교육시범학교 현황>

2001.12.31 현재



관 할	학교명	주 제
서울	신정초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함양
	장위중	민족공동체 의식함양과 통일대비교육
	서서울 정보고	남북 동질성회복을 위한 통일주역으로서 해야할 일
	금천고	통일의지 함양과 미래사회의 주역 양성
부산	사직초	남북한 문화 비교 이해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금정여중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통일의식 함양 방안
대구	경서중	북한사회의 바른 이해를 통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인천	구월여중	특활·재량활동 학습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지 신장
	제물포고	학급활동을 통한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의 함양
광주	하남초	시사정보자료 활용을 통한 통일의식 내면화
	무등중	교과외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의 활성화
대전	신흥초	통일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방안
	유성고	이질적 남북한 문화탐색을 통한 민족동질성교육 방안
울산	옥동초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대비능력 신장
	명정초	민족의 동질성 회복 프로그램 적용으로 하나된 마음 기르기
	방어진중	다양한 행사참여를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울산여고	북한의 교육사회문화이해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경기	파주 갈현초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상황중심 체험활동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평화통일 실천의지의 강화
강원	와수초	통일교육정립
	용하중	체험활동을 통한 민족화합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 방안 연구

관 할	학교명	주 제
충북	안내초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의지 함양
	황간중	다양한 행사활동 및 남북한 생활 문화탐색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음성고	학생활동 중심의 통일민족교육을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충남	한산중	제7차 교육과정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에 관한 연구
전북	부안 영전초	토의학습과 다양한 관련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 신장
	이리북중	가상체험학습 지도를 통한 건전한 통일의식 함양
전남	무안 운남초	북한실상 바로알기를 통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함평 월야중고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활동의 운영 방안
경북	상주 함창초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함양
	김천여중	교과관련 지도 및 개발 활동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청도 매전중	북한의 바른 이해를 통한 통일의지의 함양
	상주여고	북한생활문화 탐색활동을 통한 민족동질성 함양
경남	거제 고현중	다양한 학습모형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통일 대비능력 배양
	밀양고	통일교과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금남고	북한이해를 위한 범교과적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제주	애월중	토의중심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교육인적 자원부	경기 삼죽초	탈북학생들의 사회·학교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경남 계룡초	멀티미디어활용 및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대비 능력의 함양

## 나. 대학 통일교육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진흥을 위해 대학통일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원을 계속해 왔다. 2001년도에는 대학통일문제 연구소의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소속 84개 대학을 5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6.11~10.31)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정책 참고자료로 발간하였다.

### <분과위원회별 연구용역 개요>

위원회명	연구 책임자	연구 주제
통일정책위원회	박홍순 (선문대)	신4강 질서하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북한사회문화위원회	양병희 (건국대)	통일교육 내용 및 논리개발 - 북한사회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위원회	임채완 (전남대)	통일교육 내용 및 논리개발 -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위원회	이학수 (대구가톨릭대)	남북경협의 성과, 과제 및 전망
남북교류위원회	김재한 (한림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방안

## <대 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현황>

2001.12.31. 현재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대학	연구소명
강릉대	통일문제	동의대	법정	동아대	사회과학	숭실대	사회과학
강원대	사회과학	명지대	사회과학	신라대	국제지역	제주대	동아세아
건국대	민족통일	목포대	통일문제	아주대	사회과학	조선대	동북아문제
경기대	민족문제	배재대	통일문제	안동대	사회과학	중부대	평화통일
경남대	극동문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안양대	복지행정	중앙대	민족통일
경북대	평화문제	부산외대	국제관계	여수대	통일문제	진주교대	초등교육
경산대	평화전략	상명대	통일문제	연세대	통일	창원대	사회과학
경상대	통일문제	상지대	사회과학	영남대	통일문제	청주대	국제협력
경성대	사회과학	서강대	동아	영산대	지역통상	충남대	통일문제
경원대	사회과학	서경대	통일문제	용인대	인문사회과학	충북대	사회과학
경희대	국제평화	서울대	사회과학	우석대	한국정치	한국외대	사회과학
고려대	평화	서울시립대	법률행정	울산대	사회과학	한남대	사회과학
관동대	동북아평화	서울사이버대	사이버통일연구원	원광대	통일문제	한림대	한림과학
국민대	사회과학	서원대	사회과학	이화여대	한국여성	한서대	인문사회과학
군산대	현대이념	선문대	평화사상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한성대	동아시아
단국대	정책과학	성균관대	사회과학	인천대	평화통일	한세대	통일문제
대구대	사회과학	성신여대	사회과학	인천교대	통일교육	한신대	평화
대구효성 가톨릭대	통일문제	세종대	통일문제	인하대	국제관계	한양대	통일정책
대전대	동북아	숙명여대	통일문제	전남대	아태 지역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순천대	사회과학	전북대	사회과학	호서대	통일문제
동신대	민족통일	순천향대	사회과학	전주대	사회과학	홍익대	동서문화

한편,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오고 있다.

2001년도 「제20회 대학생통일논문현상공모」에서는 3월부터 8월말까지의 공모기간을 거쳐 논리성, 창의성, 자료인용의 적실성, 유용성 등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입선작인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5) 등 총 8편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11월에는 금강산 견학을 실시하였다.

2001년도 논문 입선작은 세부적이고도 참신한 주제로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접근한 논문이 많은 점이 특징이었으며, 이들 논문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논문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 <제20회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수상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논문주제
최우수작	김경식	인천기능대 전기계측제어학과 1년	남북화해·협력에서 언론의 이미지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
우수작	정승호	고려대 식량자원학과 4년	U-세대를 위한 21세기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묘정	상명대 무대디자인과 4년	영상세대의 대북한 이미지 분석과 수용미학
가작	김영진	연세대 사회학과 2년	‘한국전쟁 경험세대’와 ‘한국전쟁 비경험세대’간의 인식의 차이와 ‘통일의 주체단위 확립’을 통한 그 극복방안
	이수진	춘천교대 사회교육학 4년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발전방안
	고영민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4년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
	이영림	부산교대 교육학과 4년	교대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이영민	진주교대 도덕과 교육과 4년	도덕과 통일교육을 위한 토론 Rubric 개발

## 4. 사회통일교육 지원

### 가. 통일교육협의회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민간이 함께 하는 통일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들 간의 협의·조정 및 기타 상호간의 협력 증진 도모를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2001.5.4)를 받아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85개 단체가 가입하였으며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정관 마련, 분과위원회 구성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이사회, 분과위 활동에서 「통일교육협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민족화해캠프행사 등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통일교육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의 주요 조직은 정관변경 및 예산·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는 총회, 연간 사업계획수립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집행하는 이사회, 이사회 부의안건 작성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공동의장회의, 청소년·여성·시민·지역별로 구성된 분과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2001.12.31 현재 (85개 단체)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사범대 중등교육연수원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경실련통일협회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남북나눔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다물민족연구소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대한기독교자유연맹
대한민국팔각회	동신대 민족통일연구소	동학민족통일회
목포대 통일문제연구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추진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북방문제연구소	북한연구소
사이버대학 넷유니	상명대 통일문제연구소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연합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아태평화재단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좋은 벗들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
통일건국민족회	통일교육연구원	통일교육연구회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통일기념사업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통일민주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평화통일복지협의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대학원리연구회
한국산업교육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청년연합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한국청년회의소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통일철학회
한민족복지재단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한민족통일추진협회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헤인다예문화원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홍사단통일운동본부
희망의 시민포럼	한국통일교육학회	민주개혁국민연합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 나. 통일교육전문위원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를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통일교육전문가로 양성해 왔으며, 이들을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과 국론통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87년 1월 1일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이 제정되어 1988년 8월 30일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일 국토통일원 산하 사회등록단체로 정식 발족하였다.

2001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59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지역사회주민, 민방위대원, 청소년, 기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연 626만명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전문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는 초청연찬교육 6회, 지역순회 세미나 6회, 통일대화의 광장 1회, 구사회주의권체험연수 1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자료 15종 40,000부를 제공하였고, 우수활동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훈·포장 등 정부포상(19명), 통일부장관표창(30명)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였다.

또한 새로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 121명을 신규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중앙 및 지역대표자 15명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전문위원협의회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였다.

## 다. 북한관

북한관은 북한·통일관련자료 전시와 남북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관은 현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자유총연맹,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관의 성격과 역할을 감안하여 2001년 8월에 「북한관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설립·운영주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사회통일교육지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시자료를 보급하고 전시내용을 지도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일반적인 통일·북한관련 전시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학생통일 글짓기대회, 북한 실상 설명회 개최, 기획전시회 물품 제공 등 각종 행사 지원을 통해 북한관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통일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부산·광주·인천 소재 북한관에는 북한관련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노동신문 등 북한간행 시사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북 한 관 현 황 >

2001.12.31. 현재

지역	위 치	개 관 일	운 영 기 관	전 시 내 역	휴 관 일
부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판넬: 105점 실물: 723점	연중 무휴
인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판넬: 48점 실물: 650점	월요일
광주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89.3.10	통일교육 전문위원 광주협의회	판넬: 89점 실물: 742점	월요일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93.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판넬: 60점 실물: 727점	월요일
제주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판넬: 37점 실물: 911점	연중 무휴
강원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88.6.15	(주)통일관광	판넬: 42점 실물: 612점	연중 무휴
임진각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91.1.25	(주)임진각	판넬: 49점 실물: 543점	연중 무휴
강원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90.12.15	철원군청	판넬: 44점 실물: 606점	화요일
강원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불지구)	'96.8.14	양구군청	판넬: 55점 실물: 804점	화요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92.9.8	(주)동화진흥	판넬: 50점 실물: 1,197점	연중 무휴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판넬: 133점 실물: 687점	월요일
대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내)	2001.8.1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지방공사)	판넬 : 50점 실물: 200점	연중무휴

## 5. 통일교육자료 개발

2001년에는 통일교육 기본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개편 발간하였다. 이번 교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01년 6월 15일에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만남, 그 소중한 시작」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통일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함께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생활 속의 다양한 주제들을 통일문제와 연결시켜 수록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통일문답」을 발간·배포하였다. 「통일문답」은 사회각계인사 및 통일교육전문인력 등 교육생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작업을 통해 중요한 질문들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알기 쉽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답변을 구성하였다. 총 98개의 문답이 실려 있으며 보다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돋보기란을 통해 별도의 해설을 부가함으로써 독자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번 「통일문답」의 특징은 기본교재와 그 편제를 맞추어 독자들이 기본교재와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다.

한편,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 통일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관계전문가의 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내용을 담아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1년도에는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통일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가능한 통일교육 교수법의 모델과 사례를 수록하고 있으며, 교재의 주요 내용과 동영상 등을 담은 CD자료를 부록으로 함께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구축·운영

2000년 10월 13일에 개설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는 수요자 지향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통일교육정보 제공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학교 통일교육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이용도 증가하여 연간 총 방문건수가 61만 5759건(월평균 5만건 상회)에 달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통일부는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원격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전면 개편 작업을 추진중이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내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편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웹서비스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통일교육관련 전문사이트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온-오프라인 통일교육의 연계를 위해 온라인 통일교육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WBT(Web Based Training)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통일강좌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온라인 통일강좌는 정규 통일교육과정으로서의 정규강좌와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열린강좌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셋째,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학교」라는 메뉴를 설정, 서비스기능을 강화하였다.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통일·북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넷째, 일선 통일교육현장에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단순 텍스트 위주 서비스를 지양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개발, 제공

함으로써 통일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통일교육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거나 건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주요메뉴>

메인페이지	통일교육원	온라인통일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소식</li> <li>○ 공지사항</li> <li>○ 관련 정보 검색</li> <li>○ 통일북한뉴스</li> <li>○ 통일이의 북한 이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말씀</li> <li>○ 교육원 소개</li> <li>○ 교육계획</li> <li>○ 통일전망대</li> <li>○ 찾아오시는 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좌소개</li> <li>○ 열린강좌</li> <li>○ 정규강좌</li> <li>○ 강좌자료실</li> </ul>
통일학교	자료실	참여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만화마을</li> <li>○ 통일교실</li> <li>○ 학교 자료 마당</li> <li>○ 북한의 학생</li> <li>○ 가상 북한 여행</li> <li>○ 북한의 명절</li> <li>○ 학교토론방</li> <li>○ 통일게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프로그램</li> <li>○ 도서자료</li> <li>○ 일반자료</li> <li>○ 대학통일교육자료</li> <li>○ 동영상 모음</li> <li>○ 방북 길라잡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어보세요</li> <li>○ 자유토론</li> <li>○ 정보자료교환</li> <li>○ 건의사항</li> </ul>

## 제4절 북한 실태 분석 및 자료 제공

### 1. 북한실태 · 주요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 가. 북한실태 · 주요동향 분석

정부는 최근 북한 실태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책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내실 있는 분석을 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 북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1년도 주요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2001년 북한관련 주요 분석 현황 〉

자 료 명	발행시기	비 고
2001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1.1	
북한의 「신사고」론 분석	1.15	인쇄물 배포
김일성대, 일부 학부를 단과대학으로 확대개편	2.2	
김정일 59회생일 경축중앙보고대회 분석	2.16	
북한의 공장, 기업소 기술개선 동향	2.23	
북한의 「종자론」 캠페인 분석	3.9	인쇄물 배포
북한의 초청·방문 외교(1/4분기) 동향	3.3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결과	4.5	
김일성 89회 생일행사 동향	4.13	
최근 북한의 정보기술(IT)산업 육성 동향	5.2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6.1	인쇄물 배포
최근 북한의 부문별 기술개선사업 동향	6.8	
북한지역 강수현황(6.17~19 기간 중)	6.20	
2001년 상반기 북한의 주요인물동향 분석	6.29	
공장기업소 「상반년계획」 수행실적 평가	7.6	
2001년 상반기 북한의 무역실적 추정	7.27	
북·러 합작탄광에서 코크스탄 반입	7.27	
북한의 철도망 현황	7.27	
북한의 「갑문법」 분석	8.9	
라남의 봉화 제기 이후 북한 동향	12.14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 결과	12.14	
2001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와 전망	12.21	
2001년도 북한정세 평가 및 2002년도 전망	12.28	

## 나. 자료 발간

정부는 북한의 주요 동향과 정책변화 추이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자료를 발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대남 등 제반 분야별 동향을 1주일 단위로 정리·분석한 「주간북한동향」은 북한의 가장 최근 동향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991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주간북한동향」은 2001년 한해 동안 53차례(520호~572호) 발간되었으며, 통일부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통일관련 연구기관,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학자, 전문가,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 및 주요 인물들의 현황들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은 1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2001년에도 600부를 발간하여 부내와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함으로써 북한문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일정별 주요행사 및 공휴일, 1948년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등을 수록한 「북한 주요행사예정표」와 북한의 당, 행정기관, 입법 및 사법기관, 단체의 조직들을 망라하여 도표화한 「북한권력기구도표」도 발간·제공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2001년도에는 「북한주민의 직업세계」를 발간·배포하였다. 이 책은 북한주민들의 각 분야별 직업을 체계적으로 분류·소개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내 직업의 전반적인 특징, 직업분류체계, 직업결정과정, 노동조건, 휴가·연금 등 복지제도와 함께 50여종의 직업을 중심으로 직업별 인력양성·선발·배치과정, 승진 및 대우 등 직업생활상을 담았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경제의 각 분야별 변화상을 진단하기



위해 「2001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2001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과 재정, 건설, 농림수산업, 광·공업부문, 수송·통신부문, 과학기술 부문, 대외경제 등 부문별 동향과 전망, 그리고 2001년 북한 경제 일지가 정리되어 있다.

## 2. 다양한 연구사업·행사 지원

### 가. 신진연구자 연구 지원

정부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신진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대북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매년 신진연구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진연구자 연구 지원은 원칙적으로 40세 이하의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연간 약 20명 내외의 연구자를 선정,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구 주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 분야의 주제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학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01년도 정부 지원을 받은 신진연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2001년 신진연구자 지원 현황 〉

### 〈통일정책 분야 : 4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 · 학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내 통일논의의 사회적 가치합의에 관한 연구	김진향	경북대 강사 (경북대 정치학박사)
남북한 화해시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	노병렬	단국대 강사 (미국 템플대학 정치학 박사)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재민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미국 UCLA대학 정치학 박사)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기원	이완범	정신문화연구원 조교수 (연세대 정치학 박사)

### 〈통일교육 분야 : 5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 · 학위)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김영하	대구교대 강사 (경북대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 :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김주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미국 조지워싱턴 정치학 박사)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이창식	한서대 부교수 (필리핀대학 사회교육학 박사)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최승규	부산대 강사 (부산대 교육학 박사)
초등학교 재량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병완	춘천교대 조교수 (미국 조지아대학 교육학 박사)

<북한실태(정치) 분야 : 5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학위)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와 당정 분리를 중심으로	김갑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정치학 박사)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 군사화에 관한 연구	김용현	동국대 강사 (동국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북한의 개혁과 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선원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 (영국 바릭대학 정치학 박사)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변화’ 분석: 동북아 동맹체제 변화의 맥락에서 본 일·북관계	박정진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연구원 (동국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군사체제의 사회경제적 성립배경과 발전기능, 그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	이태섭	인제대 전임강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북한실태(경제) 분야 : 5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학위)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모형 연구	고영삼	부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 (부산대 정보사회학 박사)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CGE Model 분석 : 점진적 이행전략의 경제정책과 정책효과 분석	이영훈	고려대 강사 (고려대 경제학 박사)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유승훈	호서대 전임강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시범적 통일로써의 통일특구에 대한 연구	조진철	미국 포틀랜드대학 방문교수 (미국 포틀랜드대학 도시·지역 계획학 박사)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양문수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 박사)

## <북한실태(사회) 분야 : 5건>

주 제 명	연구자	소속 및 직위(출신학교·학위)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김수암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정치학 박사)
시장주도형 상해모델과 국가주도형 심천 모델의 북한 적용가능성 연구	박병광	단국대 강사 (중국 상해복단대학 정치학 박사)
북한의 '사회 법률직업'에 관한 연구 :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을 사례로 하여	이동진	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서울대 사회학 박사)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이봉원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원 연구원 (고려대 국어학 박사과정 수료)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 저작권에 관한 협력방안	조수선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 (미국 앨러배마대학 매스커뮤 니케이션 박사)

신진연구자 연구 지원은 1989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말 현재 360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면서 2001년에는 자체 연구 모임인 「서울평양학회」를 결성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들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논문집 형태로 발간, 유관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에 배포하고 있다.

### 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행사 지원

정부는 2001년도 북한정세 평가 및 2002년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2001년 12월 「북한정세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6월에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선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의견 교환 및 회의 등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문제 및 통일과 관련하여 대학과 민간단체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 3. 북한 정보 자료 개방 확대

정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우체국빌딩 6층 소재)에서는 김일성저작집, 노동신문 등 북한 원전을 수집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방송의 주요 내용을 매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북한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며, 북한실상설명회를 개최하여 왔다. 또한, 단계적으로 북한자료를 재분류하여 이념성이 없는 자료를 중심으로 공개를 확대하였으며, 북한원전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북한자료센터」에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북한영화 상영은 1993년부터는 부산, 광주 등 지방으로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 및 일반단체·기관이 별도의 상영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에 부응하여 수시 상영도 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인천 등 5개 지방도시 소재 북한관에 각 84편의 북한영화를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한해 동안 북한영화는 총 737회 상영되어 127,213명이 관람하였고 1990년 이후 누적 총계는 1,857회 266,891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관련단체 회원과 대학생,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2001년 한해 동안 설명회는 28회 열렸으며 총 1,886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총 265회가 개최되었고 18,298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자료 공개확대 방침에 따라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북한자료 중 비이념성 자료를 선별하여 이를 일반자료로 재분류, 공개하고 있다.

그 1단계로 1999년 3월에 북한 정기간행물 151종 2,694건을 재분류하여 이중 61종 576건을 일반자료로 일반에 공개하고, 2단계로 1999년 12월에 북한간행 단행본 4,249권을 공개하였으며, 3단계로는 북한 영화 등 영상자료의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원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해당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북한원전 241권 100,760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북한자료공개확대 방침에 부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관계기관의 요청시 북한반입 및 공개자료를 심의해 오고 있으며,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북한 반입자료를 2001년 한해동안 42회 3,307건, 1998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는 총 147회 10,149건을 심의하여 반입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방송이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북한 바로 알기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의 단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9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 위성을 이용하여 「조선중앙TV」 위성방송을 시험방송하고, 같은 해 10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10월 22일 전향적인 입장에서 북한TV 위성방송에 대한 일반시청을 허용하였다. 각 라디오·TV 방송사가 북한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일반국민들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에서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북한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방송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라디오와 TV의 대남 비방 프로를 개편하여 종전의 대남 비방프로를 축소하고 사실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라디오와 TV가 북한의 보도매체를 인용하여 북한관련 소식을 곧바로 소개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보도매체도 우리의 언론을 인용, 우리 사회의 일부 소식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남북간에 방송교류가 진행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해진 것도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방송개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꾸준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1. 2001년 통일정책 관련 주요 연설문

## (1) 2001년 대통령 신년사

2001. 1.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 첫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한 이 한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는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되찾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부도 철저한 자기 성찰 위에 총력을 다하여 국정개혁에 헌신함으로써 새해가 반드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영광의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3년을 간단히 되새겨 봅니다. 그 동안 국민의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의 4대 개혁과 동시에 지식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복지국가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외교정책과 ASEM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 분단 반세기만에 민족의 역사에 평화와 협력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그렇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여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둘러싼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외부적인 영향도 큰 게 사실이지만, 우리 내부적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4대 개혁을 보다 철저히 했더라면 상황은 지금같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개혁의 방향은 옳았지만 실천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인 저의 책임이라고 통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정부는 새로운 각오로 새해의 국



정에 임하여 금년을 고난의 극복과 희망에의 한해로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느냐의 여부가 올 한해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대추락'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4대 개혁을 완수할 때 우리의 미래에는 창창한 대도약의 내일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의 경제전문기관과 인사들이 일치해서 내린 한국의 경제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2월까지 제2차 4대 개혁의 기본과제를 완결 짓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상시 개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지체없이 퇴출시키겠습니다.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권리의 주장은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사문화 속에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생산적 관계만이 우리 경제의 내일의 도약을 보장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서 부실금융기관이란 단어가 사라지도록 철저한 금융개혁을 일구어 낼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개혁의 모범이 되는 해가 되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노동, 금융, 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마무리지으면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하여 세계적 경제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은 무엇보다 경제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경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국정의 모든 분야가 고루 건전해야 국민은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금년의 국정의 5대 지표를 민주인권국가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과 같이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여야간 대화와 협력의 상생의 정치를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인권법과 반부패 기본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개정 등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화합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남북화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배제하고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혁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통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미 작년말로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터넷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구 수가 유럽 각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2003년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막강의 지식강국이 될 것입니다.

넷째,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고용보험, 직업훈련, 실업자 고용업체에 대한 급여의 지원 등 현행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시켜 생산적 복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전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개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남북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확고한 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참으로 놀라운 저력과 애국심을 가진 국민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지금보다 더한 국가 위기도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한 국민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능력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약분업, 한국전력, 한국통신, 철도청 등 수많은 분규의 해결을 끝내 대화로 풀었습니다. 최대의 고비였던 금융노련의 파업도 마무리는 대화로 맺었습니다. 정계에서는 갈등도 많았지만 대화의 정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대한 국민과 함께 21세기 첫 해인 이 해에 새로운 국정의 출발과 경제적 도약의 기틀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착실히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하반기부터는 안정성장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세계적 선진국가가 되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확신합니다. 자신을 가집시다.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IMF 위기극복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비관만 하면 정말로 나빠집니다. 저를 믿고 같이 난국의 극복에 나섭시다. 우리들의 희망은 확실합니다.

저는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를 걷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국정의 선두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희망의 21세기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 제82주년 3·1절 기념식 연설문

2001. 3.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영광을 되찾으려 쫓아갔던 3.1독립운동 제8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 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셨던 선열들의 위대한 뜻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국적 투쟁이었습니다. 선열들은 나라를 빼앗긴 최대의 국난에 처해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1운동을 비롯한 선열들의 독립투쟁은 세계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많은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일제 강점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물론 시베리아, 만주, 중국대륙 등 국외에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투쟁한 점입니다. 세계 어느 식민지 독립투쟁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운동을 이어받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래, 해방되어 귀국할 때까지 그 법통과 간판을 지켜냄으로써 민족자주독립이라는 민족자존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선열들은 국권상실의 위기에서도 역사를 한단계 발전시켜냈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왕정복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국권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로 굳게 뭉쳤습니다. 82년전 3월 1일 그 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었고, 상하귀천도 없었으며, 좌우 사상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민족 자존의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민족적 저력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열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국내외의 여건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

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뭉쳐 민족적 저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지식과 정보가 세계를 움직이는 21세기에는 세계 선두국가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40여년 동안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리고 부실을 제거하는 국정의 대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직 그 과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세계로부터 민주인권국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와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모든 집회와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성지위가 크게 향상되었고, 시민운동이 놀랄만큼 활성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던 일들을 이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개혁의 내실을 기해나가는 작업을 하나하나 실천해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룩해온 민주인권국가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이기주의나 무질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남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는 일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또한 배격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나라를 병들게 할뿐이며, 우리 손으로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아래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제도는 적극 개혁해야겠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 등 각종 개혁입법들이 국민 여러분의 충분한 동의 아래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꾸준히 추진해온 4대 개혁으로 한국경제는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정경유착이나 권력의 금융 간섭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실투성이던 금융기관들이 거둬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부채가 획기적으로 줄

었습니다. 마이너스였던 경상이익률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구조개혁의 고통 가운데 지난해에는 9%의 성장과 1,700억 달러의 수출, 12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세계 일곱 번째의 순채권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는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응급수술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병의 재발을 막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자기관리 과정이어야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자동적으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시장 안에서 부실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민간을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을 지녀야 하며, 노사는 항상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식기반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서 갈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문화 창조력이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일류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은 정보산업과 생명산업과 같은 지식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통산업 역시 지식정보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완성한 것이라든가, 인터넷 사용 국민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총생산은 133조원에 달했습니다. 이 분야의 수출 또한 전체의 29.5%인 5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식기반 경제강국, 세계일류경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국가적, 국민적 실천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개혁의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참으로 컸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선진복지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약 그동안 마련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없었다면 인원감축과 같은 구조개혁 역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민 연금제도를 실현했으며, 실업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왔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ILO는 우리 한국을 대량실업 대처의 모범사례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복지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중상위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내실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주택개량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역사적인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천명함으로써 대결과 불신의 반세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또한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며,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확고히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한은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개방을 향한 북한의 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고, 경의선 복원이 완공되면 남북관계에는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7천만 민족의 저력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남북 화해협력 노력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일관되게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98년 10월 저의 일본 방문 때,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가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이루어진 사회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일본이 이와 같은 합의정신 아래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인근 나라들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해입니다.

이번 달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가을이면 경의선이 연결됩니다. 부산항이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로 부상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우리나라가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걸쳐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의 일시적 어려움을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려는 용기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다시 한번 3.1운동과 같은 민족적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 추진해 온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내실을 다져나간다면 우리에게 21세기는 분명 국운융성의 새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의 발걸음을 잠시도 멈추지 맙시다. 20세기초의 뼈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다함께 후손들에게 영광되고 찬란한 미래를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됨으로써 3.1정신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합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 제56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2001. 8.15

- "개혁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 -

존경하는 7천만 민족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모든 광복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광복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들은 일제하의 전 식민지 기간에 걸쳐 하루도 쉬지 않고 무장투쟁을 계속했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만이 갖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지와 더불어 회한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 북한과 평화공존·평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 전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 공생의 대원칙을 수용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불가피하게 서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재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급한 통일 지상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위업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와 전 국민이 여기에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데 일본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국민에게 끼친 커다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한.일간에는 정부와 국민 양면에서 새로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우리도 일본과 좋은 이웃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뜻밖에도 최근 일본내 일부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 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양식있는 많은 일본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

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뿐입니다.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여권 3당의 협력관계도 계속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것도 또한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굳게 다짐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시위, 집회, 파업의 자유도 보장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전례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의 공명성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구는 이미 한국을 미국과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민주인권국가로 인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일본·EU·동남아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1천억 달러 가까운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5대 외환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출의 부진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사가 개혁과 협력 속에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추진과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ECD는 최근 우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수출은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섬유 등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정보통신(IT)·생명산업(BT)·문화컨텐츠

(CT)·환경산업(E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섬유 등은 물론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전통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와 접목하여 높은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류상품수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발 땀 때 우리는 두 발 뛰는 노력으로 따라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지적인 능력과 저력은 능히 이를 해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될 것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인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초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자는 것도 중산층과 서민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실업·질병·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여건도 저의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이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만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원수만 2만 4천명을 늘리겠습니다. 대학교수도 2천명을 증원하여 학생 개개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키겠습니다. 유치원의 공

교육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외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0~50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미국·일본·EU보다 낮은 3%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문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끼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제도의 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 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서민이 집 걱정만은 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94.1%인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8조 4천억원을 들여서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을 3년 동안 2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의 소형 주택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도 그 70%를 장기 저리로 융자 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실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화를 이루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활발히 하여 농어가소득을 크게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굴뚝없는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소득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협력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공동승리를 위한 협력의 길을 가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회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도 한국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서로 협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과 협력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열들이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1. 9. 6

친애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제1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만 4천여 자문위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제9기 자문위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기 자문회의에는 국내 각계와 해외 67개국에 계신 역량있는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결연한 모습을 대하면서 참으로 반갑고, 마음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은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해를 계기로 더한층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찬란한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흥망이 남북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된 미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7천만 민족의 안위가 걸린 문제요, 미래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해왔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6.15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평화의 역사에 참으로 의미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냉전의 빙벽이 녹기 시작했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가 적극 지지하면서 평화에의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평화에의 열망이 전쟁의 가능성을 소멸시키고 화해협력과 장차의 평화통일에 대한 출발점을 이룬 데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때부터 남북관계에는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관급 회담, 3회에 걸친 3,600여 이산가족들의 감격스런 상봉,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4개 협정 합의,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합의 등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하나 하나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햇볕정책이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남북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통해서 장차의 평화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햇볕정책을 미 일 중 러 4대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막으려면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당장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튼튼한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항구적으로 만드는 햇볕정책의 추진입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과실이 크고, 그러한 가운데 공동번영의 길이 열린다면 전쟁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은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주평통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역사와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한 책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한동안 남북관계가 정체상태를 맞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 미간의 회담재개가 지연되고 있고, 남북회담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를 제의해옴에 따라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서 북 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제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향해 가는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북한의 화해협력이라는 거대한 역

사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진의 고비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한 발 한 발 전진해 갈 것입니다. 민간차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모두는 반드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햇볕정책을 최선두에서 이끌어온 통일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조그마한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힘을 합쳐서 평화공존, 평화교류의 햇볕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아갑시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데 보수와 혁신을 나누는 냉전적 사고방식도, 조급한 통일지상주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는 오늘날 우리 당대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정권이 나 어느 정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데 어떠한 정략이나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의 일치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단순히 교류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에는 엄청난 경제적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철도입니다. 얼마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에도 매우 중요시했던 것은 역시 철도연결 문제였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이 연결되면 우리는 육로를 통해 중국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수송기간이 훨씬 단축되고 물류비도 크게 절감됩니다. 동시에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석유, 가스, 목재와 같은 자원들을 직접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출발한 [철의 실크로드]가 파리와 런던까지 연결되고, 인천국제공항이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구인 부산항과 광양항을 더욱 발전시키면 우리 한국은 육 해 공을 통하여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과 금융, 보험 등 모든 경제분야도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한반도 시

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반드시 크게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IMF 지원자금 195억 달러를 2년 8개월이나 앞당겨서 모두 갚았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던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와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국민의 자기 희생 정신과 '하면 된다'는 용기가 마침내 외환위기 극복의 위업을 이룩한 것입니다. 3년전 외환보유액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 1천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위업을 이룩한 우리 국민과,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 공무원 모두에 대해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외환위기 이래 우리는 기업 금융 공공 노사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미 적지 않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분야, 특히 인터넷과 정보인프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OECD 국가중 중상위권의 복지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범적인 민주인권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권위있는 세계 인권기구도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과 같이 앞선 인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위기의 원인이 주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한보와 기아사태처럼 기업경영의 부실과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부요인이 큼니다.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렵고,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이 한꺼번에 침체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경제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국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개혁추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세계 1등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분야를 선택하고, 이것을 집중해서 키워야 합니다. 1등 상품만이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노사화합입니다.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고, 협력체제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사 양측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정치안정입니다. 중남미의 예를 보더라도 정치가 불안하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정치까지 불안하다면 어느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여야는 대화를 통해서 민족문제와 경제 민생 문제만은 같이 협력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것만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키워간다면, 우리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반드시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확실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회사는 한국이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의 기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남북간 평화와 교류협력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는 2001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낼 때, 우리 민족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는 자랑스런 조상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선두에 서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확신해 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선도에 의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2. 통일정책 관련 법규

### ◆남북교류협력관련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12.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12.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1조(목 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협회의 의사) ①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① 협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회의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12.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 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생략>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12. 6	대통령령 제14819호(병역법시행령)
	1996. 5.31	대통령령 제15006호(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12.15	대통령령 제15539호(우편법시행령)
	1998.10.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5호
	2001.10.31	대통령령 제17398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

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의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 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단수방문증명서”라 한다)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횡수의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의 수시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8

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권)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그가 발급 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등)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북한방문증명서중 단수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 후 7일 이내에,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 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19조의2(접촉승인유효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승인을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3(접촉결과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20조(특례초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의2(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업무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

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장 교역

##### 제25조 <삭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 제27조 삭제

##### 제28조 삭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 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방과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업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삭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제>
8. 교육세법

## 9. 식물방역법

##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0.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방문신고서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신고서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 (4) 남북협력기금법

改 正	1990 · 12 · 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3 · 12 · 31	法律第4675號(國債法)
	1996 · 12 · 12	法律第5170號(財政融資特別會計法)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 整備에관한法律)
	1999 · 5 · 24	法律第5982號(政府組織法)
	1999 · 12 · 31	法律第6075호(國債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4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3·12·31>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の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改正 99·12·31>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5條(長期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6·12·12>

②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7·12·13>

第6條 削除 <93·12·31>

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90·12·27, 99·5·24>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③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7·12·13, 99·5·24>

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0·12·27>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改正 93·12·31>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 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等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力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6.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 償還<改正 99·12·31>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改正 90·12·27>

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改正 90·12·27>

③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關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一時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한다.

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6·12·12>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13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附 則<99・5・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9・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國債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 以下省略”



##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부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9. 5.23	대통령령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개 정 1998·6·1 통일부령 제3호(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인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1998.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북한이탈주민관련

###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정	1997. 1.13	법률제5259호
개 정	1999. 1.21	법률제5681호(국가정보원법)
	1999.12.28	법률제605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99.12.28>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12.28>

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신청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취업보호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냈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제17조의3(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취적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주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료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99.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정	1997. 7.14	대통령령제15436호
개 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제15984호
	1999. 3.31	대통령령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중 개정령)
	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기획예산처 직제)
	2000. 1.28	대통령령제1669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별지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지원은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단위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간의 보호결정시기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8>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3.31>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의견청취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99.12.31>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협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제12조(임시보호등의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 및 기간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제13조(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 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입국교섭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98.12.31>제24조(협조요청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인정절차)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교육등의 기회제공)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영농정착지원) <조 이양 제35조의3, 2000.1.28>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교통비·식비 등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8.12.31>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 ②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4조(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여부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초 급여일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③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8>제34조의3(우선구매) 법 제17조제4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신설 2000.1.28>1. 연간 평균 10인 이상의 취업 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제35조(취업알선)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노동부장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송부받은 노동부장관등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 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0.1.28>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호 또는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② 법 제1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신설 2000.1.28>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2000.1.28>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자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 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8.12.31>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④ 행정자치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 지역 : 특별시지역



2. “나” 지역 : 광역시 및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지역3. “다” 지역 : “가” 지역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98.12.31>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12.31>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 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실태조사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

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입학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미만의 자  
3. 국내의 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사립의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지원한다.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98.12.31>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1>

제47조의2(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1. 장애인

2. 모자(母子)가정

3.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

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0.1.28>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9. 4.13 통일부령제7호

개정 2000. 2.15 통일부령제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학력·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3(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거주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거주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 해당 거주지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③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임대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2분의 1을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분할 지급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라 함은 3

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지보호대상 등) ①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거주지보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보호의 신청)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보호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 통일교육관련

(1)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

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노동부·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주요 남북관계 합의 문건

#### ◆ 남북정상회담 관련

##### (1) 남북공동선언

2000. 6.1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 (2)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2000. 4. 8

### 남북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 (3) 남북합의서 개최 실무절차 합의서

2000. 5.18

####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4월8일 합의서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 2.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 3.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 4.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4일까

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 5. 선발대 파견

- ① 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전에 북측지역에 파견한다.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 수 있다.
- ② 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6. 왕래절차

- ① 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 ② 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 ③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 7.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③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관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 8. 신변안전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관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 9.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 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③ 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 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 11.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방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12. 상봉 및 회담 보도

- ① 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치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③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

## 13. 기자의 취재활동

-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 14.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 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 15.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 18일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 양영식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참사 김령성

## ◆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 7.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사항들에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 2.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

#### 4. 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부터 8월 31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0년 7월 31일  
서울

##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 9. 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8월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안에 흠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을 두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 함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진다.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7. 남과 북은 제 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한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000년 9월 1일

평 양

### (3)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 9.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9월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투자보장과 이종과제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한다.
5. 남과 북은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

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하기로 한다.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2000년 9월 30일

제주도

#### (4)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12.16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접촉을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분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확인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6. 북측은 한라산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 양

## (5)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1. 9.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

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 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 ⑥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데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 ⑦ 남과 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효 시키기로 한다.
  - ⑧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 ⑨ 남과 북은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 울

## ◆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2000. 9.26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 9. 26

제 주 도

# ◆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2000. 9.1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가 2000년 9월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방문기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지고 현재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두 분 정상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시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데 대해서 환영하였다.
3.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20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기로 하였다.

4.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25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타결기로 하였다.

5.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

식을 개최기로 하였다.

6.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시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기로 하였다.
7.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14일



## ◆ 남북경제협력 관련

### (1)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000. 9.26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실무접촉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기로 하였다.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 합의서 초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데 따라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접촉은 10월 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서울

## (2)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2000.12.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 계정의 차액 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2000년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력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년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달러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 (3)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12.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



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

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통 일 부 장 관 박 채 규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보장(제목에서)	보호(제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재산
지분	출자몫
의장권	공업도안권
천연자원	자연부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채	공채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자시장
자유태환성통화	전환성화폐
정관	규약
서명	수표

#### (4)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0.12.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 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

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

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 (5)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2000.12.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 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

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 제10조 배 당 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

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 제18조 연 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 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을 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판정	거주자 확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실질적인 관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재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짐함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정	조절
발생	조성
수익적 소유자	수익자
국채	정부유가증권
사용료	지적소유권사용료
대가	료금
독립적 인적용역	전문봉사활동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법률가, 공학가, 부기원
급여	로임
지급받은 보수	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
수취인	수납인
귀속	이전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교원과 연구사의 소득
학술연구기관	과학연구기관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사업



지배

관리

## (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2001. 1.30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0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2001년 1월 8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2.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전력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전력협력실무협의회는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 ~ 5명 범위에서 구성하고, 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며 여기에서 전력실태공동조사문제 등을 토의한다.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 ~ 10명 범위에서 편리한 대로 구성하며, 전력실태공동조사는 2월중에 착수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구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는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 ~ 5명 범위에서 구성하며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1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 ~ 10명 범위에서 편리한 대로 구성하며, 임진강수해방지 공동조사는 3월중에 착수한다.

4. 남과 북은 서울 - 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및 문산 - 개성간 도로 개설, 개성공단(공업지구)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2차 회의는 2001년 2월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협의·확정한다.

2001년 1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이 정 재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계획위원회제1부위원장  
전 금 진

##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1. 2. 3

2001년 2월 3일 발효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실천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4 ~ 6명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차과(부상)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정한다.
- 3)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4) 수행원은 각기 5 ~ 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 5)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들을 둘 수 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한다.
- 2) 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한다.
- 3) 위원회는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사이에 분야별 실무협의회 회의를 운영한다.
- 3) 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4)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6)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 시킬 수 있다.
- 7)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8)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 또는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단장)가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합의문건은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1월 30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북 남 상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 (1)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2000. 6.30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 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 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 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방측에 통보한다.
- ⑥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 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 3. 비전향장기수 송환

-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한다.
-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받은 다음 확인한 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 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 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기륜

「북남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승철



##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0. 9.23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 2. 생사·주소확인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 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되,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 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등을 포함한다.

### 3. 서신 교환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 데 따라 그들 사이의 서신교환을 진행한다.
- 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인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

#### 4.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쌍방은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 5.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 6.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9월 23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박기륜

북남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최승철

### (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2001. 1.31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은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2박 3일) 동시에 교환한다.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제1·2차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제3차 방문단 교환을 위해 1월 31일 교환한 방문 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2월 15일에 교환하며, 최종 방문단 명단은 2월 17일에 교환한다.

2.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은 3월 15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

이때 교환되는 서신은 편지로 하고, 1~2매의 가족사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3. 2월중 실시하기로 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대상자(각기 100명)명단은 2월 9일에 교환하며,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2월 23일에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6.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2001년 1월 31일

금강산

## ※ 7·4 남북공동성명

1972. 7. 4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1992. 2.19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남북화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2 장 남북불가침

-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

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3 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



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4. 남북관계 주요일지(2000~2001)

< 부록① >

### 남북관계 주요 일지(2000~2001)

#### 2000년

- 1. 3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
- 1. 5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 결정
  - 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 ③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1.12 한국담배인삼공사, 남북합작담배 '한마음' 남북 동시판매(3. 1) 발표
- 2. 1 한·미·일, 3자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개최(서울)
- 2.17 정부,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 제정·시행
- 2.22~25 KEDO-북, 고위 전문가회의 개최(평북 향산)
-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 북한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대화 및 특사교환 촉구
- 3. 9 금강산 유람선(풍악호), 부산 다대포항 출항 시작
- 3.17~4. 8 남북 특사접촉(중국 상해, 북경)

-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남) - 송호경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북)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3.23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획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 발표
- 4.10 남북 정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서울, 평양)
- 4.22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1차 회담(판문점)
  - 양영식 통일부 차관(남) -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참사(북)
-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2차 회담(판문점)
- 5. 3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3차 회담(판문점)
- 5. 7 이헌재 재경부장관, ADB총회에서 회원국에 북한의 가입 협조 요청
- 5. 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4차 회담(판문점)
  - 5. 9~17 「문서교환 방식」을 통한 협의
- 5.13 남북정상회담 제1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6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7 남북정상회담 제2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5차 회담(판문점)
  - 남북합의서(2000.4.8)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합의서 타결
- 5.24~30 북한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방문, 공연

- 5.29~31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5.29~6.10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 방문, 공연
- 5.31 남북정상회담 선발대(30명) 방북
- 6.13~15 남북정상회담 개최(평양),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6.27~30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금강산)
- 7.26 남북 외무장관회담(태국 방콕)
- 7.29~31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서울)
  - 박재규 통일부 장관(남) -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북)
- 8.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남북언론사들간 언론 교류 등 공동합의문 발표
- 8. 8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 8.14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8.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8.18~24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방문, 합동공연
- 8.22 현대·북한, 개성공단 개발관련 합의서에 서명

- 8.29~9.1 제2차 장관급 회담 개최(평양)
- 9. 2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
- 9. 4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 취소
- 9. 6~8 김대중 대통령,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가
- 9. 6 한·중 정상회담 개최(뉴욕)
- 9. 8 한·러 정상회담 개최(뉴욕)
- 9.11~14 북한 김용순 특사 남한 방문
- 9.15 남북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 공동입장
- 9.18 경의선 기공식(임진각)
- 9.20~23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금강산)
- 9.22~27 조총련 동포(50명) 남측 고향방문
- 9.22~28 백두산 관광단(109명) 방북
- 9.25~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서울)
- 9.27~30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제주도)

- 9.28 정부, 대북식량차관제공 발표
- 10. 4 우리측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서」 체결
- 10. 9~12 북한 조명록 특사, 방미
  - 미·북 공동선언 발표(10.12)
- 10. 9~14 남측 방문단,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
- 10.15 현대아산, 북한 금강산여관 30년 임대계약 체결
- 10.18 한·중 정상회담(서울)
- 10.20 아셈(ASEM)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서울)
- 10.23~25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차례 회담, 미사일 문제 등 협의
- 11. 2 NS21,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필름 북측에 전달
- 11. 8~11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평양)
  -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가서명
- 11.11~19 영화인 11명 방북
- 11.16 북-유엔사 장군급회담(판문점)
  -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한국에 이양 합의
- 11.17~22 조총련동포(119명), 제2차 남측 고향방문

- 11.21 현대-북한, 서울-평양 민간 직통전화 개설
- 11.28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경의선·도로연결공사 협의
- 11.30~12. 2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12. 5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2. 7 서울 가정법원, 북한 주민에 대해 남한 호적등재 승인
- 12. 8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 12.11~14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금강산)
- 12.12~16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평양)
- 12.21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2.22 한국전력 공사, 현대건설 등과 북 경수로 주설비공사 계약체결 발표
- 12.27~30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평양)

## 2001년

- 1.15~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상해 등 경제특구 시찰
- 1.23~27 영국 외무성대표단(단장:마스텐 아태총국장), 방북
- 1.27~2.13 북 노동당대표단(단장:지재룡 부부장), 영국·프랑스·벨기에 방문
- 1.29~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남측 대표: 이병웅(수석대표), 고경빈, 최기성
  - 북측 대표: 김경락 단장, 리금철, 리호림
- 1.31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2. 1 우리측 창극단 「춘향전」 평양 공연
- 2. 3 남북,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서명·교환
- 2. 6~20 EU 경제대표단, 방북
- 2. 8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따른 군사적 보장합의서 타결
- 2. 8~10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 2.18~3. 2 북 무역성대표단(단장:김동명 부상), 호주·브루나이 방문



- 2.21~24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 2.23 제2차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 작업 결과 통보
- 2.24~3. 2 북 경제대표단(단장:전승훈 금속기계공업상), 이탈리아 방문
- 2.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상호 교환방문(서울, 평양)
- 2.27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 한-러 정상회담 개최
- 2.27~3. 3 북 경제대표단(단장:한성렬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미국 방문
- 2.27~3. 6 고(故) 한덕수 조총련 의장 북측 조문단, 일본 방문
- 3. 2~3 스웨덴 「한스 그렌달」외무차관, 방북
- 3. 3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대북 서한 전달
- 3. 6~11 김대중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 3.10~13 영국 「존 커」외무차관, 방북
- 3.10~14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문화·체육 교류 관련 협의
- 3.10~20 MBC 방북 취재
- 3.13 북측,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요청
- 3.15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 남북 각 300명, 600건

- 3.17 북 외무성대표단(단장:최수현 부상), 핀란드·스웨덴·체코·폴란드·독일·프랑스 방문
- 3.18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평양에 남북공동대학 설립 합의 발표
- 3.20 경수로건설 현장에 우즈베키스탄 인력(207명) 투입
- 3.20~24 중국 당대표단(曾慶紅 당 조직부장), 방북
- 3.24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측 조문단, 서울 방문
- 3.28 조총련계 북한 국적 축구선수 양규사, 현대프로축구단 입단
- 3.28 북측,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불참 통보
- 3.30 광주시, 평양·남포지역에 김치공장 설립 합의 발표
- 4. 5 북,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개최(만수대의사당)
  -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승인
  - 홍성남 총리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보고
- 4. 6 조총련 동포(80명), 제3차 남측 고향방문
- 4.11 가수 김연자 함흥 공연
- 4.13 남북, 제3차 적십자회담시 합의한 서신 300통 전달 결과 구두통보
- 4.19 북적, 비료 20만톤 지원 요청(대남 전화통지문)

- 4.26 정부, 대북 비료지원(20만톤) 발표
- 5. 1 민주노총·한국노총-북 직총, 노동자대회 개최(금강산 온정각)
- 5. 3 페르손 EU 의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유예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심 표명
- 5. 4 페르손 EU 의장 방한, 韓-EU 정상회담 개최
- 5. 9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장관 방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 5.14 북한-EU 외교관계 수립 계획 발표
- 5.19~7.10 KBS 방북 취재
- 5.23 북한-바레인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 선언 발표
- 5.25~26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회의  
-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 및 정책공조 방안 협의
- 5.28 북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맞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
- 6. 4, 6. 6 한북 패션디자이너 이영희, 평양에서 ‘한북전시회’ 개최
- 6. 6 부시 미대통령, 북한과 대화재개 선언 발표
- 6.13 미 국무부, 북-미 회담 결과 발표

- 6.14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백두에서 한라까지」 개막(평양 인민대학습당)
- 6.15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판문점 통해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축하편지 교환
- 6.15~16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공동행사로 개최(금강산)
  - 남측: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소속 420명
  - 북측: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 북측준비위원회 소속 340명
- 6.2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
- 6.25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합작 북한 광산 개발 발표
- 6.27 북한-터키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
- 6.28 북한-호주 대사관 개설 합의 발표
- 7.11 유성희 전 대한의협회장, 의협 대외의료협력단 일원으로 방북 중 평양에서 사망
- 7.13 금강산관광, 쾌속선 '설봉호' 출항으로 재개
  - '금강호' 동해항 귀항(6.30) 이후 일시적 중단상태였음.
- 7.18~19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개최 및 공동보도문 발표(금강산)
- 7.2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실사단 방북
- 7.26 북한-유럽연합(EU)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 보도 발표

- 외교관계 설정일은 2001.5.14로 합의 등
- o 7.26~8.18 김정일, 러시아 방문
- o 7.29~31 통일염원 6.15 금강산렐리 개최
- o 7.30 평양에 영국대사관 개설
- o 8. 4 김정일과 푸틴, 「북-러 단독·확대 정상회담」 개최 및 8개항의 「북-러 모스크바 선언」 발표
- o 8. 8 「조선 아·태 평화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관련 대미 비난 성명 발표
- o 8.10 서영훈 대한적십자 총재, 적십자회담 제의 30주년(8.12) 맞아 성명문 북에 전달
- o 8.15~21 「8·15 남북공동행사」에 남측 방문단 참가
  - 7대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대표 등 394명 방북 승인
- o 8.21 북한,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남, 해외 공동보도문」 발표
- o 9. 3~5 장쩌민 중국주석, 북한 방문
- o 9. 6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회의 개최(도쿄)
- o 9.15~18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서울)
  - 홍순영 통일부 장관(남), 김령성 내각 참사(북)
- o 9.21 제45차 IAEA총회, 북한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촉구 결의
- o 10.3~5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금강산)

- 10.9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명단 교환
- 10.12 북한 「조평통」 대변인,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및 태권도 시범단 파견 연기 담화 발표
  - 10.16~18 서울·평양에서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었으나 무산
- 10.15 북한 중앙방송, 10.9~10 원산지역에서 해일과 폭우로 인해 수백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 10.19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부산 아시안 게임 초청장 발송
- 10.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
  - 남북한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1년6개월→3년) 및 교류 절차 간소화
- 11. 3 북한 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회견을 통해 ‘반테러 국제 협약들’에 가입키로 결정 발표
- 11. 9~14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금강산)
  - 홍순영 통일부 장관(남), 김령성 내각 참사(북)
- 11.19 대한적십자사, 11.18 동해상에서 표류중 예인된 북한 선박 및 선원 송환
- 11.27 합동참모본부, 북한군 비무장지대에서 아군 초소 사격 발표
- 11.27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그룹(TCOG)회의 개최(샌프란시스코)

- 11.29 국방부 대변인, 북한군의 비무장지대내 총격사건에 대한 대북 성명 발표
  - 11.27 발생한 총격사건을 정전협정 위반 사안으로 확인, 비서장급 접촉 제의하였으나 북측 무반응
- 11.30 (사) 남북협력 제주도민 운동본부, 감귤 및 당근 대북지원 계획 발표
- 12.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북한,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 서명
- 12.16~31 북한의 경수로사업 관계자 19명, 원자력발전소 등 시찰 목적 남한 방문
- 12.17 북한 「조평통」대변인, 남측의 비상경계조치 지속 비난 담화 발표
- 12.20 통일부 대변인, 「조평통」 담화 관련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촉구' 논평 발표

## 5.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Website)

### ◆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Website)



분 류		기 관	s i t e
국  내	정  부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acdpu.go.kr
		남북회담사료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청와대	www.cwd.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방부	www.mnd.go.kr
	연  구  소  ·  대  학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아태평화재단	www.kdjpf.or.kr
		통일시대연구소	www.rink.or.kr
		북한연구소	www.nkorea.or.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KOTRA	www.kotra.or.kr
		연세대 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고려대 북한학과	welove.korea.ac.kr/~nokor
		명지대 북한학과	unikorea.net/myongji
		관동대 북한학과	www.kwandong.ac.kr/~unikorea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home.ewha.ac.kr/~nk21/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www.kyonggi.ac.kr/~gsreunif
		경남대 북한대학원, 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www.dsr.hanyang.ac.kr/lab/lab39.html	



분 류	기 관	s i t e
해             외	백악관	www.whitehouse.gov
	미국 CIA	www.odci.gov
	미 의회	www.house.gov
	미 국방부	www.defenselink.mil
	미 국무부	www.hri.org/docs/usa.html
	노틸러스	www.nautilus.org/napsnet
	CCFR	www.ccf.org
	USIP	www.usip.org
	HOOVER	www-hoover.stanford.edu
	RAND연구소	www.rand.org
	HERITAGE재단	www.heritage.org
	RIIA	www.riia.org
	Cato Institute	www.cato.org